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이의규
홍선이 박병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협동연구팀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51, 2645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 강일규...[등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4-18)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75-6 93340

336.091-KDC4

331.11095-DDC21

CIP2004002327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 인적자원 분야의 한·중·일 실태 및 비교

동북아는 지금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는 값싼 노동력으로 실질적인 세계의 공장으로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자원의 양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계에서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일부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중국의 정책 상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더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거품경제이후에 새로운 분야 개척과 국내 경제의 안정을 기반으로 세계 부품·소재 및 미디어 산업과 IT산업에서 세계정상에 있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예상되며, 불경기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로 장기적인 인력수급과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1970~80년대의 고속 성장을 끝내고 제조업위주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IT산업과 반도체 및 일부 소재산업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반면에 양적인 인적자원의 증가는 있었지만, 질적인 증가의 부재와 전문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공조 미비로 인해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는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산업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투입 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과 중국 경제는 그간 자본투입의 확대를 통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자본투입 주도형(investment-driven)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투입 및 노동투입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총 요소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 즉 생산요소 투입의 양적 확대에 의한 성장전략은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전략의

기저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인력공급 중심, 거시적·정량적 접근방식으로는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주도, 특히 산업계의 역할 강화와 인력수요 중심, 중위적·정성적 접근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동북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국은 앞으로의 상황 즉, EU 나 NAFTA같은 경제 블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하고 밀접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은 미래의 정치·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로의 우수한 부분과 미비한 부분을 공유함으로써 한 단계 더 앞선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즉, 비교우위의 상황과 같이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일본과 한국의 집약기술을 더함과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상황에 맞서 공동의 인적자원 개발과 교류에 정책적·정서적 그리고 기업 간 국가 간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EU 사례

유럽은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언어교육과 이웃나라의 역사·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계속교육의 필요성과 유럽의 가장 큰 자원은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인들의 창의력과 지적 능력 및 숙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들에게 점차 확산되었다. 또한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교육 참가자들의 유럽 내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 간 강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귀결되었다.

유럽연합이 합의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인들 자신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각 학교에서 전통적인 학교의 정규과목은 물론 과외활동들은 과거에 지향해 왔던 생산성이나 직업경험뿐만 아니라 유럽적인(그리고 세계적인) 인식, 자유와 평화 그리고 환경보호문제 등 학제간의 주제와 실제 등을 다루는 것으로 영역을 넓혔다. 유럽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인 ‘통일성 속의 다양성’은 통일성과 다양성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유럽의 통일성이 단순히 공통적 유산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의 필요성이 장래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촉진제, 즉 통합과정의 참여자들에게 통일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문화를 내포하는 유럽의 통합 지향적 행위를 추진하기 위한 역동적인 자극제라고 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교육정책은 유럽발전과의 상호 연관성을 배제하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의 교육목표를 설정, 상호 비교, 경험의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소크라테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EU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표는 교육시스템의 조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교육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경쟁력을 키우자는 데에 있다. 또한 유럽 전체 차원에서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모든 유럽인들에게 양성, 계속교육의 이동성을 보장하며, 교육을 통해 습득된 능력을 상호인정 하고자 하는 목표를 아울러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1996년에 회원 국가 간의 ‘자격증 상호 인정 제안서(ECTS)’를 작성하여 유럽 내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합의했다. 또한 개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외국에서 참가한 교육의 종류와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직업교육 유럽패스를 만들어 유럽 내 어디에서든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의 국민들은 유럽국가 어디에서든 직업교육에 참가할 수 있고, 또 참가한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유럽연합의 시장통합은 상품의 자유이동에서 시작하여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통한 시장통합으로 발전되었다. 유럽연합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확대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직업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의 교육은 크게 국가별 교육, 유럽차원의 교육, 국가 간 교육과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가별 교육은 모국어나 국가의 문화와 역사 등이 필수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교육의 책임은 국가의 교육부가 지고 있다.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일부 교과목의 내용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육 자료의 사용을 유도하는 교육내용의 통일과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유럽의 협력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역사와 지리 같은 과목에서는 교육내용의 조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리나 역사 그리고 문학과 같은 과목들은 민족적 편견이 개재되어 있는지를 검토받고 있다. 또한 학계의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간 위원회들은 유럽의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오고 있다.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자국의 언어나 외국어를 막론하고 컴퓨터의 사용과 같은 효과적인 교습방법의 개발이 촉진되어 왔다. 또한 유럽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고양됨으로써 다른 회원국들이 발행하는 교과서에 대한 연구도 촉진될 것이다. 유럽 회원국들은 국가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국의 민족적 가치를 함양하거나 국가의 자존심을 키우고자 한다.

유럽차원의 교육은 재학생의 경우 유럽연합의 어느 지역에서든 거주할 수 있고, 졸업생의 경우 유럽연합의 어느 지역에서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유럽에 관한 정보 및 외국어 능력 등과 같은 지식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회교육 또는 개인교육에 있어서 유럽적인 측면들이 구체화된 유럽시민의식 교육도 포함된다. 1990년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산하 시민의식 전담그룹이 정의한 내용에 의하면 유럽차원이란 “젊은이들이 유럽에서 편안하면서도 비판적인 의식

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시민의식이라는 개념에는 대중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인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 역시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며, 따라서 이 개념은 정치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환경교육과 환경보호 등이 빠른 속도로 유럽차원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그리고 1985년 유럽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안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유럽차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도 더욱 자세하게 조정되어 가고 있으며 상호방문과 교류 그리고 교육과정개발 협력 등을 통해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학교교육과정과 교사연수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학교들 간의 자매결연이나 협력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적어도 3개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상호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다양한 유럽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회원국들 스스로에 의해 그리고 회원국들 스스로를 위한 공동체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직업교육은 유럽공동체가 기초하고 있는 경제적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직업교육은 고용 및 기술개발협력을 위한 교육 이외에도 숙련기술 및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국적인 경험은 해외에서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다. 유럽공동체 조약의 제 128 조는 해외에서의 업무경험을 포함한 실제적인 노동의 경험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공동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산업이 과학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연구와 개발 분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제15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필요에 의해

선정된 해당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지 회원국을 지원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주요 장애 요인과 가능성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여러 장애가 예상되고 있다. 즉 문화 및 언어 측면에는 문화의 다양성과 차별성 및 언어의 이질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문화적 장애 요인으로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 환경 및 지역협의 부재와 각국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다.

결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공동체 형성의 당위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러한 장애를 제거되지 않고는 공동체가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여러 장애요인들이 극복되어야 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 동북아는 강대국이 집중된 지역으로 대국간 관계의 발전은 아직 유동적이다. 각국 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결성하고 있음에도 한·중·일 삼국 간에 존재하는 역사와 영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고구려사 뺏기와 일본의 독도 뺏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외교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둘째, 동북아 각국은 대외관계의 전략 중점을 아시아로 돌려야 한다. 현재 동북아 각국은 아직은 대외관계전략의 중점을 동북아에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와 탈구입아(脫歐入亞) 사이를 줄타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2대 강국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화북과 동북 지역을 통한 대외교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세계경제와의 접목은 화남연해 및 장강삼각주가 우세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통일외교 차원에서 동북아 협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셋째, 동북아에는 냉전체제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

는 지역으로 지역 정세에 모순과 충돌이 잠재되어 있다. 남북한 문제는 주변 4강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고, 대만문제는 미·중관계와 일·중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안보 면에서 중·조 상호원조조약, 미·일 안전보장조약, 한·미 안전보장동맹이 남아 있고,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화 부인에 대한 중·한·조·대 등의 반감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통한 냉전의 유물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4강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덧붙여, 동북아지역은 발전 수준의 차이가 심하면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경제종속 현상은 동북아 3국의 관계를 급속히 변형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결국 동북아 각국 간의 협력권이나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노력과 논의는 한 국가 또는 민족의 문화를 수단으로 할 경우 풀리지 않는 해묵은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모순은 확대 재생산되며,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배후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혐의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강대국의 이기적 목적이 존재하는 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권역 개념이 아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느슨한 교류·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 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이나 환황해권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도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제기를 들 수 있다. 즉 동북아 지역의 주요 3국은 인적자원 분야에서 그 양이나 질적인 수준 및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3국간의 차이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상호 보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더욱 증대될 것이다. 첫째, 21세기에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시대로 변하고 있다. 향후 세계질서는 유럽연합(EU), 미주자유무역지대, 그리고 아직은 지역통합이 실현되지 않

은 동아시아/동북아의 지역경제통합체로 3등분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동북아지역 또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합의 가시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역통합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상호 인적자원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 혹은 공동체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3국 간의 빈번한 노동력 유동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공동 노력이나 공동체 형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지역경제통합체를 만들기에 앞서 동북아 3국의 분야별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자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앞에서 논의한 많은 장애 요인은 결국 상호 불신과 역사적 배경이 큰 작용을 하였지만, 금세기 들어 3국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류 등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추세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이전에 인적자원 분야를 매개로 더욱 실질적인 지역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셋째, 21세기에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문화산업은 결국 사람이 주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상호 공동으로 관련 산업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문화와 경제가 결합한 문화산업은 문화로 경제를 살리는 산업으로 동북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살려 미래의 산업으로 키워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는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어 실업구제와 인적자원 활용에 있어서도 큰 몫을 할 것이다. 넷째, 다원화사회가 도래하고 세계화 추세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서 환경, 에너지, 폭력, 마약, 일기예보, 인구, 식량, 국제행사공동 개최 등의 문제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상호 정보 및 자료의 교환을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정치적 권위가 저하되어 가는 추세 속에 시민사회의 등장, 세계적 보편주의와 개발국가나 지역의 문

화적 특수성의 조화에서 새로운 정치모델 또는 사회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대적 필요가 있다. 여섯째, 21세기에는 아시아적 가치가 선별적으로나마 세계적 보편윤리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서구사회의 급속한 사회변화로 많은 사회병리적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의 치료적 가치로서 아시아적 가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여가사회 및 노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문화 사업들은 국제적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관광산업이나 공연예술분야사업 및 문화네트워크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는 향후 동북아 3국간의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력의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된다면 각종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의 상호 인증문제가 제기되고, 결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도 찾을 수 있다. 첫째,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다. EU나 NAFTA가 성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주요한 동력 중 하나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다. 즉 지리적으로 참여국가들 간에 연결되어 있고, 동일 문화권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지역은 완전히 육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통합이 용이했다. 한편 한·중·일 3국 간의 지리적 인접성은 EU나 NAFTA 국가들과는 달리 육상교통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3국간에 바다(근해)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해양을 잘 활용한다면 훨씬 지리적인 소통이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후 경의선 철도를 복원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육상으로 부산에서 신의주를 거쳐 중국에 철도망이 연결되고 도로망이 확충될 것이다. 그러면 육상이나 해상으로 연결되게 되어 훨씬 수월한 교류 및 무역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들 3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적인 양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잠재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중·일은 인종이 비슷하고, 역사적인 전통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불교문화의 영향이라는 종교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교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문화권이라는 언어적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다. 둘째, 동북아 3국의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이다. APEC이 지리적 비인접성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느슨한 지역협의체를 성립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20년간 이 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을 앞서가고 있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지역 간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셋째, 인적 교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과거 냉전 시기는 동북아 세 나라의 인적 왕래가 드물었다. 특히 민간인의 교류는 한·일간을 제외하고 중국과는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중국이 개방하면서 인적교류는 관광·유학·무역·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시설의 상호 투지 확대는 노동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대될 것이고, 결국 산업과 연계한 노동력 시장에서 상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특히 최근 동북아에 불고 있는 문화 방면의 상호 이해 증대와 이에 따른 인적 교류 확대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 EU 사례에서도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유럽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회원 국가들의 노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유럽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은 문화적 교류를 위한 교육적 역할의 증진과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다양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하여 유럽공동체 의식을 확대시키고, 유럽문화에 대한 공통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 회원국

들은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회원 수가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은 내일을 책임질 유럽 청소년들에게 교육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에서의 혁신과 창의력 그리고 질적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으로써 미래에 있어서의 유럽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에라스무스는 유럽통합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전망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학생 교류가 유럽 고등교육의 정규형태로 발전되는 등 고등교육이 한층 성숙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는 유럽국가 등의 ‘정규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과 현지 참여기관을 통하여 학생들의 언어학습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주관국가의 편의시설과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집중시켰으며, 단기적인 교류학습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의 통합’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에라스무스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생교류와 협력관계를 위한 자금지원, 고등교육협회의 구조와 성격, 학생의 유럽에 대한 이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관간의 국제적 협력 사업과, 학생과 교수들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 특히 외국에서의 경험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신진 교수들의 활약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신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언어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인터넷의 사용이다. 인터넷은 학생들에게 지적 욕구를 자극하는 양질의 학습 자료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영어, 불어, 독일어 및 다른 언어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많은 외국어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획기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유럽공동체의 에라스무스 역시 적극적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방법을 꾸준

히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학습자로 접근의 용이성, 언어 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 간의 협약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교육의 성장을 도모한 점과 타 국가와의 학점상호인정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의 장을 넓히고, 국제적 협력 사업과 학생과 교수들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 역시 유럽의 사회적·경제적 통합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폭넓은 인적자원개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연구의 결과 우선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장애 요인의 해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북아의 주요 국가 간에는 어떤 분야나 형태든 공동체 형성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도 장애 요인이 있었지만, 충분한 시간과 노력으로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여 점진적으로 공동체 형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기존의 역사적·문화적·지리적·사상적·언어적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이 공동체 형성의 전제로 동북아 3국의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FTA 협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은 기본적으로 상호 노동력의 충분한 교류나 수요가 증대될 경우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수요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몇 가지 기본

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 보완성 확보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중·일의 인적자원은 앞에서 살펴본 현황과 같이 서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인적자원 수나 노동력의 수준 및 기타 인적자원관련 요인에서 상호 많은 보완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 상호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공동체 형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은 점진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거나 협의하여 실천 가능한 영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상호 필요로 하는 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 파급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EU나 NAFTA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이후 공동체내에서 인적자원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동북아 국가는 공동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타 공동체에 대처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타 분야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기능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경제·무역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의 전략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기본적인 전제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 추진의 과제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3국의 부처 책임자 및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어떤 형태든 동북아 공동체 구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가 가능한 각 분야별로 선도적인 입장 표면과 대안 제시가 중

요하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3국의 인적자원 분야의 실태는 우리나라가 중간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중·일의 기술력이나 인적자원의 수 및 수준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한 지리적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동북아시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데 대내외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추진에서 우선 인적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류 수요가 많은 분야의 기술자격을 공동으로 개발·교육훈련·인증·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3국의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즉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관련한 충분하고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관련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가 간 상호 이해 도모 방안과 갈등 해소 방안,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3. 연구 범위 및 용어 정의	6
II. 한국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13
1.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 전략	15
2. 한국의 인적자원 기본 현황 분석	21
3. 현 상황에서 본 인적자원 개발의 발전추세	34
4. 인적자원개발 변화 전망	39
5.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도전과 정책	41
III. 중국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53
1.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 전략	55
2. 중국의 인적자원 기본 현황 분석	56
3. 중국 인적자원의 주요 당면 문제	61
4. 인적자원 현황으로 본 교육 발전의 추세	93
IV. 일본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101
1.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 전략	103
2. 일본의 인적자원 기본 현황 분석	111
3. 최근 일본의 인적자원개발 동향	129
4.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제도의 특성과 과제	134
V. 한·중·일의 인적자원 관련 내용 비교 분석	137
1.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139
2. 인구와 노동력 분야	141

3. 교육 분야	146
4. 생활수준 분야	153
5. 시사점	156
VI. EU사례 분석	159
1. 유럽의 통합	161
2. EU의 교육체제	162
3. EU의 교육프로그램	174
VII. 공동체 형성의 경험적 장애요인과 가능성 논의	201
1. 동북아공동체의 개념과 성격	203
2.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문화·언어적인 장애요인	220
3.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비문화적 장애요인	230
4.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244
VIII. 결론 및 제언	253
1. 결론	255
2. 제언	258
참고 문헌	261

표 목 차

<표 II-1> 세부항목별 인적자원의 국가경쟁력 평가	21
<표 II-2> 연령별 취학률	22
<표 II-3> 학교 수	23
<표 II-4> 연령별 평균교육년 수 추이	23
<표 II-5> 학생 수	24
<표 II-6> 학급당 학생 수	25
<표 II-7> 교원 1인당 학생 수	25
<표 II-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증가 추이 (%)	26
<표 II-9>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27
<표 II-10>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27
<표 II-11> 각국별 GDP 대비 지식투자 순위	28
<표 II-12> 우리나라의 HDI 변화 추이(Human Development Index: HDI)	29
<표 II-13>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	31
<표 II-14> 산업별 취업구조로 본 산업구조 변화추이 및 전망 (신산업분류체계)	33
<표 II-15>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2000년)	42
<표 II-16> 전문직 인적자원 규모의 국제비교	43
<표 II-17>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전망	43
<표 II-18>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전망	44
<표 II-19> 제조업 기술수준별 취업자 수 전망	45
<표 III-1> 15세 이상 인구 문자 해독률 국제비교(1960~2000)	57
<표 III-2> 15세 이상 인구 평균 교육연한 국제 비교 (1980~2000)	58
<표 III-3> 1982, 1990, 2000년 종업원의 교육연한 및 교육총량	60
<표 III-4> 1982~2000년 중국 3차 산업 종업원의 교육수준 구성 비교	61

<표 III-5>	2000년 2015년(예측) 수입별 세계 노동력 인구 수 및 비중	64
<표 III-6>	15세 이상 인구의 고등교육 수혜자 수 국제비교 (1960~2000)	65
<표 III-7>	1999년 OECD국가에서 25~64세 노동력 평균 교육수준 구성	68
<표 III-8>	각국 1인당 GDP, 산업구조와 산업별 종업원 분포구성	71
<표 III-9>	중·일 양국 농림, 목축, 어업 종사자의 교육정도 비교 ..	73
<표 III-10>	2000년 중·일 양국 제조업 종사자의 교육수준 비교	74
<표 III-11>	중·일 양국 제 3차 산업 중 분야별 교육수준 비교 ..	77
<표 III-12>	1978~2000 중국 제 3차 산업 내부 취업 구조조정 상황	78
<표 III-13>	제 3차 산업 관련산업 종사자의 전체 산업종사자 비중 국제비교	79
<표 III-14>	각급 직업 종사자 비중의 국제비교	80
<표 III-15>	2000년 중국 관리자, 전문기술자, 사무직, 상업서비스, 및 공장근로자 교육수준구성	83
<표 III-16>	도·농 문맹률의 변동 상황	84
<표 III-17>	2000년 중국 도·농의 15~64세 인구 중 각종 교육 수혜 수준 인구 비중 및 평균 교육연한 상황	87
<표 IV-1>	인구추이 및 장래인구 추계	112
<표 IV-2>	각국의 평균수명 비교	113
<표 IV-3>	각국의 출산율	113
<표 IV-4>	주요국 고령화 속도 추이	113
<표 IV-5>	일본의 GDP와 1인당 국민총소득	114
<표 IV-6>	경제활동인구	115
<표 IV-7>	경제활동참여율(2001) 25~64세와 55~64세 인구의 학력별, 성별비교	116
<표 IV-8>	국가 간 실업률: 연령계층별·교육수준별 비교	117
<표 IV-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118
<표 IV-10>	산업별 취업자 수	119

<표 IV-11> 산업별 취업자 수	120
<표 IV-12> 직종별 취업자	121
<표 IV-13> 근로자세대의 가계수지현황	122
<표 IV-14> 학교 수의 추이	124
<표 IV-15> 일본의 프리타 추이	125
<표 IV-16> 총 공부 당 교육비(1995, 2000)	127
<표 IV-17> 학생 1인당 교육기관 교육비(2000)	128
<표 IV-18> 일본의 HDI 변화 추이(Human Development Index: HDI)	129
<표 IV-19> 커리어형성 촉진 지원제도의 유형	133
<표 V-1> 한·중·일 경제발전 수준 비교	139
<표 V-2> 한·중·일 국내 총생산 구성비	140
<표 V-3> 한·중·일 과학연구 현황	140
<표 V-4> 한·중·일 인구 구성 특징	142
<표 V-5> 한·중·일 근로자 분포 구조	143
<표 V-6> 한·중·일 총 노동력 중 제2·3차 산업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	144
<표 V-7> 1999년 OECD 국가 중 한·일 양국의 학력별 25-64세 노동참여율	144
<표 V-8> 한·중·일 노동생산물	145
<표 V-9> 한·중·일 1996년 교육보급 정도	146
<표 V-10> 취학률(2001) 연령별 공·사립 교육기관의 전 일제 및 시간제 재학생의 취학률	147
<표 V-11> 한·중·일 총 학생 수에서 사립학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148
<표 V-12> 한·중·일 학생 수당 교사 비율	148
<표 V-13> 1998년 한·중·일 교육비 투입 수준	149
<표 V-14> 학생 1인당 교육, 부가 서비스 및 연구·개발비 (2000)	149
<표 V-15> 1998년 한·중·일 각급 학생 평균 교육비	150
<표 V-16> 1999년 한·중·일 25-64세 인구의 교육연한	151
<표 V-17> 1999년 한·중·일 25-64세 인구의 교육정도 구성비	152

<표 V-18> 1999년 한·중·일 25-64세 노동자 교육정도 구성비	152
<표 V-19> 한·중·일 국민 소득 수준 정도	153
<표 V-20> 한·중·일 문화생활 수준 정도	154
<표 V-21> 한·중·일 의료 및 보건 수준	154
<표 VII-1> 동북아공동체와 유럽공동체 형성 긴급성에 대한 비교	209
<표 VII-2> 유럽연합모델과 동북아공동체 형성모델의 비교분석	210

그림 목차

<그림 II-1>	인적자원개발의 지원시스템	35
<그림 II-2>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36
<그림 III-1>	제 2, 3, 4, 5차 전국문맹인구 수와 문맹률 통계	57
<그림 III-2>	역대 인구조사에서 10만명 당 각종 교육수준정도 인구	59
<그림 III-3>	2000~2050년 중국노동활동인구 (15~64세) 예측	62
<그림 III-4>	1999년 4개국의 25~64세 인구 각종 교육수준구성 비율	65
<그림 III-5>	중국과 OECD주요국가의 노동력 교육수준 구성 비교	66
<그림 III-6>	2000년 중국 노동력 교육수준 구성도	69
<그림 III-7>	2000년 중국 농림, 목축 및 어업 종사자의 교육수준 구성도	72
<그림 III-8>	2000년 중국 제 2차 산업 종사자 교육 수준 구성도	74
<그림 III-9>	중·일의 제조·건축·전력 등 생산 공급업 종사자 교육수준 구성비교	75
<그림 III-10>	2000년 각 직업별 종사자 교육수준비중	77
<그림 III-11>	중국 관리자급 교육수준 구성 비교	81
<그림 III-12>	중·일 전문기술인력의 교육수준 구성 비교	82
<그림 III-13>	2000년 중국 각 지역 문맹률 차이 비교	85
<그림 III-14>	2000년 중국 도시·농촌 15-64세 인구의 각종 교육 수혜 수준의 비중 비교	86
<그림 III-15>	중국의 2000년 각 지역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도·농 간 비교	88

<그림 III-16>	2000년 중국 도·농간 인구 평균 교육연한 비교	89
<그림 III-17>	2000년 중국 도·농 인구 중 전문대이상 교육 수준 인구 비중 비교	89
<그림 III-18>	2000년 중국 각 지역별 근로자의 고교이상 교육 수준 구성 분포도	91
<그림 III-19>	2000년 중국 각 지역 종업원 중 전문대 이상 교육 수준 구성 분포도	92
<그림 IV-1>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104
<그림 IV-2>	능력개발시스템의 구성체계	105
<그림 V-1>	2000년 한·중·일 1인당 GDP	139
<그림 V-2>	한·중·일 과학연구 현황	141
<그림 V-3>	15-64세 인구비	142
<그림 V-4>	한·중·일 도시인구 비중	143
<그림 V-5>	고등교육입학율(1996)	147
<그림 V-6>	한·중·일 교육경비 투자 수준	150
<그림 V-7>	한·중·일 25-64세 인구 교육연한(1999)	151
<그림 V-8>	한·중·일 25-64세 노동력 인구 교육수준 구성 비율	153
<그림 V-9>	한·중·일 정보화 수준	154
<그림 V-10>	중국가정의 생활환경	155
<그림 VI-1>	유럽연합의 교육프로그램	175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세계는 국제화·개방화·지식정보화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병행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EU·NAFTA와 함께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참여정부는 동북아경제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며, 2003년 4월 16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구성의 배경은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과 동북아 비즈니스권의 대두라는 대외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다.

한편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데 인적자원분야는 경제특구 지정과 물류 중심지 건설 등 물적 분야와 함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식기반산업 및 디지털경제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한 국가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결국 인적자원 개발 분야는 동북아 중심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 제고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고, 국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상생적·상보적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분야의 문화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과학적·협동적·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래 지향적 정책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각 분야별 연구와 함께 협동적으로 연구하면서 특히 인적자원분야에서 주요국가의 인적자원 현황과 개발 실태를 파악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동북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의 인적자원 실태와 이에 대한 개발 동향 및 정책 등을 비교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 향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과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논리적·경험적 분석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추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에서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실태 비교 및 공동체 형성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활용하는 데 제1차 연도의 연구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주도적 역할 방안을 도출하는 선행 연구에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주요 국가의 인적자원 실태와 개발동향을 살펴보았다. 즉 동북아 주요 국가는 한·중·일 3국으로 이들 국가의 인적자원과 관련한 주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개발 동향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이들 실태를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인구와 노동력 분야, 교육 분야, 생활수준 분야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외국 사례에서 찾아보았다. 주로 EU를 중심으로 유럽의 통합과 EU의 교육체제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넷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이론과 논리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공동체의 개념과 성격,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서 문화·언어 및 비문화적 차원의 장애 요인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여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분야의 과제로 각국의 공동 과제와 우리의 과제를 제안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추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나. 연구 방법

첫째, 문헌분석 방법을 통하여 한·중·일 3국의 인적자원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각국의 인적자원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관련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공동체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둘째, 사례분석을 들 수 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갈등 및 오해에 대한 경험적 사례 분석을 하고, 외국(EU)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비교분석 방법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인적자원관련 내용 및 통계 등을 비교하였다.

넷째, 전문가 회의(국제 및 국내회의)를 통해 공동체 형성 및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국내외)의 주장과 논리 및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였다.

다섯째, 현장방문 및 현지 의견 수렴을 하였다. 연구진이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방문을 통해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3. 연구 범위와 용어 정의

가.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우선 동북아 국가에서 한(북한지역 제외)·중·일 3국으로 제한하였다. 사실 동북아 국가는 지리적으로 볼 때, 3국 외에 몽골이나 대만 및 러시아 동부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한 3국으로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내용의 범위는 3국의 인적자원 분야로 제한하였다. 공동체 형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협동 연구로서 각 분야별로 분담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내용은 주로 각국의 인적자원 분야의 실태 파악과 공동체 형성의 장애 요인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본 연구는 제1차년도와 과제 제로 각국의 실태 파악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인적개발과 관련한 인프라 및 제도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제2·3차년도의 연구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대상의 광범위성에 따른 구체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즉 연구의 시간·예산 등의 제약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 내용에서 공동체 형성의 근본적인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는 동북아 3국의 오랜 역사적·지리적 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추후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대전제인 문화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개념에 대한 모호성과 의견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즉 문화라고 하는 개념과 문화공동체 및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 등에 대한 개념 및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¹ 또한

정책 현장인 정부차원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국제 사회에서 쓰이는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만큼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학문²이라고 볼 수 있다.

1) 유사 개념의 정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정의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유사하게 자주 쓰이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및 인력(Man power)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인적자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OECD는 인적자원과 유사한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으로 “개인에게 통합되어 개인적·사회적·경제적 복지 창출을 촉진하는 지식·기술·능력 및 속성”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³ 이 개념은 1960년대 초부터 노동력의 교육훈련 수준 등 노동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한 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과는 다른 속성을 포함하는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개념의 인적자본은 개인의 물리적, 정서적 및 정신적 건강과 함께 동기 및 행동의 측면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⁴으로 볼 수 있

¹ 권대봉, 『인적자원개발의 개념변천과 이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 (2003), p. 24. 권대봉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정립에서 세 가지 유형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규범적 개념 정의. 둘째, 수단적 정의. 셋째, 조작적 개념 정의 등이다. 권대봉은 이 세가지 유형을 통합한 개념을 선보이고 있다. 즉 “인적자원개발은 학습이 중심이 되는 개인개발, 경력개발, 조직개발, 지역사회 및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풍토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개발, 조직의 성과 향상,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 국가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화된 활동 도는 시스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개념 정의에서도 본 문이 서술하고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주요 범위가 내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² 권대봉, 『인적자원개발의 개념변천과 이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 (2003).

³ OECD, “Evaluation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Higher Education: Teichler,” Ulrich & Friecheml Maiworm, *The ERASMUS Experience*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1997).

⁴ 인적자본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인적자본의 개념이 사람을 비인간화한다는 비난을 반박하는 데 도움을 주며, OECD의 1998년 보고서는 인적자본의 개념이 지식 및 능력 기반 경제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오히려 크게 강조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개념이 개인의 정서적 측면과 동기·행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지만, 위에서 제시된 능력은 개인에게 통합 또는 체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은 사람에 대한 투자결과가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이 늘어나고 고도화되면 그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인적투자는 생산증대에 기여하는 투입요소가 된다. 교육 등 인적자원 투자가 다른 투자와 다른 점은 인적자본의 형태로 특정한 사람에게 축적된다는 것이다.⁵ 결국 인적자본은 물질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요소로서 갖는 가치를 화폐적 단위로 국한하여 환산하고자 한다. 즉 근로자 내지 인적자원이 갖는 가치는 자유 경쟁적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노동생산성이 곧 임금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특정한 교육의 경제적 가치는 그 교육을 받는 근로자와 받지 못한 근로자간 노동생산성의 차이, 즉 임금격차로 나타내며, 이는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의 질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산출하는 기초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력의 일반적 개념을 살펴보면, 인력(manpower)은 일반적으로 노동력⁶과 유사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의미한다. 다만 노동력은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는 총체적 의미가 강한 데 비해 인력은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고급인력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어감에 따라 노동력과 인력의 차이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에 비견할 만하다.

이상의 인적자본 및 인력 개념과 구별되는 인적자원의 개념을 살펴보

⁵ Mankiw (1999).

⁶ 일반적으로 노동력(labor force)은 노동활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이른바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를 가리킨다. 즉 노동력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근로행위에 종사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다만 노동을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제외된다.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비경제활동인구 속에는 가사종사자, 취학자, 불로소득자, 노령자, 불구자 등이 포함된다.

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적 정의로 인적자원이란 의미를 보면, Oxford 사전에는 인적자원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사람(People as a significant asset of a business etc.)”으로 정의한다. 한편 국내에서 판단하는 인적자원의 정의로는 인적자원은 “사람 개개인 속에 체화된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경험과 지혜 등을 의미한다.” 즉 지식정보화 사회로 들어가면 갈수록 바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양과 질이 그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과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박세일, 2002). 김신복 교수는 인적자원을 “국가·사회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갖추어야할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도덕적 성숙 등 가치 있는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와는 달리 다른 측면에서 인적자원의 개념을 보면, 본래 인적자원이란 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인적자본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인적자본 개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때 인적자본이란 대체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존의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그리고 화폐자본 등에 대비된 개념으로 활용되며, 최근 경제학에서 새로운 생산요소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가 된다. 이는 인적자본을 주로 양적(stock)인 개념, 즉 쌓여져 있는 상태로 부가가치를 발하는 인적자원의 총량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음은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과 유사하다. 즉, 초기 산업화시대 인간은 생산과 비용을 유발하는 단순한 생산요소 중의 하나인 노동력으로만 인식되었으나, 점차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관리의 대상으로 변화하여 이제는 투자의 대상이며 국가나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원이란 쉽게 말해 사람(human)으로부터 나오는 또는 나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resource)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정책에 대한 국제동향과 국내 학계의 학술연구 등을 토대로 인적자원 개념과 인적자원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2001년에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에서도 인적자원을

사람에게 체화된 지식·기술·정보 등으로 상정한 바 있다. 즉, 인적자원의 개념을 지식, 기능, 태도 등 인적요소의 종합으로서 저장(stock)의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인적자원이란 구체적으로 사람 개개인에 체화되어 있는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 기술과 기능, 경험과 지혜, 도덕적 품성 등을 말한다. 즉 인적자원이란 이러한 가치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사람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는 이해되기도 한다. 지식경제에서 강조되는 지식이란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에게 체화된 지식을 지칭하며, 결국 개개의 ‘사람’⁷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정의에 의하면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인적자원을 양성·배분·활용하고,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인적자원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국민 개개인과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가치 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인적자원은 종래 물적 자원과 대칭 되는 개념으로 쓰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을 포함한 재정자원(financial resource)과 정보(information)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져 자원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있다. 즉 인적자원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인력이라는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단순한 노동력 수준의 생산요소가 아니라 지

⁷ 한편 인적자원은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속에서 체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연구소 등이 가지고 있는 지식자산과 시스템 등은 조직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최근 기업차원의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과 기술은 물론 정보와 도덕성 등 가치관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질을 의미한다. 결국 인적자원은 개개인들이 가진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과 품성을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인적자원의 개념을 “국민개개인·사회 및 국가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결국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Management)은 인적자원의 형성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성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넓은 의미의 총체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광의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의 개발·관리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Pacs(1991) 등은 인적자원개발을 광의로 해석하여 개인 및 단체나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반 활동으로서 개인개발, 직업생애개발, 조직발전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체제개선을 이룩하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서 개인개발은 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능력을 발전시키는 활동이며 직업생애개발은 조직구성원의 개인역량을 파악하고 적재적소 배치와 경력관리를 통해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조직발전은 구성원들의 능력과 자발적 참여확대를 통해 조직시스템 전체의 운영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말한다.⁹

과거에는 인적자원개발의 형성과 활용이 별도의 주체들에 의해 분리된 채 이루어져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통합된 과정으로서의

⁸ 인적자원관리란 양성보다는 충원단계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인사관리 전반을 포괄하며, 배치는 물론 재교육과 자기개발 등을 통한 지속적인 능력개발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⁹ 외국 학자들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개념 정의는 권대봉,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변천과 이론에 대한 종합적 고찰,” pp. 15-23. Lisa A Weinberger (1998), “Commonly held theori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1998), 1, pp.77-79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은 개개인의 잠재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사회와 국가전체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훈련활동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총괄하여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II

한국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1.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 전략

가. 정책의 기본구조

일반적으로 정책의 기본구조는 정책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정책의 개념은 몇 가지 기본속성¹⁰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정책은 주로 정부활동과 관련을 맺고, 특정의 목표를 내재한다. 또한 정책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제적 행동경로를 제시하고, 특정의 가치를 함축한다. 동시에 정책은 복합적 구성체로서 일정한 유형을 지니게 되어 거시적·총체적·근본적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기본구조를 보면, 첫째, 정책의 비전과 목표로 경쟁력 있는 국민·서로 신뢰하는 사회라고 하는 특정한 가치를 제시하고, 인적자원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킨다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둘째, 이러한 정책목표와 가치 실현의 구체적인 정책영역으로 전 국민 기본 역량 강화·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의 선진화·국가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제시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경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범부처적인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거시적·총체적·근본적 지침으로 개방화와 네트워크화·정보화·탈규제화와 자율화·여성 활용 극대화 등을 중점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기본구조는 현재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분야의 현황을 진단하여 그 강점과 약점을 제시하는 정책의 배경을 설명

¹⁰ 국내의 정치·행정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정책개념의 정의를 최종운(1986: 16)은 정책개념이 가지는 네 가지 기본적 속성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즉, 정책개념은 첫째, 어떠한 가치·목표·규범 등을 추구하는 당위성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개념은 특정한 사회적 환경 내지 상황 속에서 형성·집행되며, 그 점을 개념의 정의에서 표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은 ①행위 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이며, ②공공선 내지 국민복지를 위한다는 공공의 가치 지향적 목표를 가지며, ③전체 국민 또는 대상집단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며, ④국가기관의 정치적 강제성을 갖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에서 보면,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기본구조는 정책의 성격과 가치, 목표와 방법 등이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 및 추진 전략과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나. 정책의 비전과 목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특정 정책형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상위 가치 혹은 비전은 경쟁력 있는 국민·서로 신뢰하는 사회이다. 구체적인 목표로 첫째,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국민 개개인의 기초역량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토대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의 평생학습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높이고,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소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신뢰의 구축과 결속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능력주의의 확산, 집단 간·계층 간 갈등의 완화, 사회 구성원 상호간 규범과 가치의 공유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통합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인적자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제시하고 있다. 즉 우수 인재와 선진 지식·기술 기반은 산업 경쟁력의 근원인데, 인적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없이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이 확보되면 물질 자원의 부족문제는 해외자원의 활용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정책 비전과 목표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정책의 상위 목표

로서 충분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비전과 목표가 원활히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한데,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요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정책의 추진 전략

과거의 정책은 일반적이고 단순한 측면이 있어 관료제적 구조와 정치적 과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지만, 현대의 정책은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동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즉 다양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변수 등을 고려한 체계적·효과적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정책이 해결해야 할 정확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밝혀진 문제와 해결책은 다른 문제와 해결책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은 누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느 것이 공익인가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정책전략은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¹¹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화·네트워크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선택의 배경은 앞에서 밝힌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필요한 모든 인적자원을 국내에서 양성·활용하는 자급자족 모형은 지구촌 시대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유치 등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산의 유입과 활용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전략을 채택하여 세계 기술혁신의 중심지에서 수행되는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연구와의 연계 및 교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에 있어서는 학교와 연구기관, 기업 간의 정보 공유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학교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간 시설로 활용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¹¹ 곽효문 (1995).

둘째, 정보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화는 지식·정보의 유통 및 확산에 있어 핵심요건이며, 인적자원 정책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주도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는 시스템개혁의 도구로 정보화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적자원개발·배치·활용 등 전 부문에 걸친 정보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물리적인 인프라의 강화와 함께 교육·학술 등 지식분야의 정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중요하다. 동시에 인적자원개발 서비스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창출하고, 이 분야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셋째, 탈규제화와 자율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탈규제화와 자율화는 학교 및 직업훈련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수월성과 현장 적합성 확보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 규제의 제거와 인적자원개발 시장의 창출 및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기존의 교육·인적자원 관련 법령과 제도를 탈규제화·자율화 시대에 맞도록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넷째,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 극대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채택배경은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후진적 인적자원 활용구조는 국가 인적자원 잠재력의 극대화 및 총체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현대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여성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국가차원의 전략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전반에 걸쳐 여성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학생 직업교육·진로지도 개선,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철폐, 여성을 고려한 통계인프라 구축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 정책의 추진 체계

정부의 정책결정체계로부터 제기된 기존의 혹은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부의 활동지침을 정책이라고 볼 때, 이러한 정책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일련의 과정은 정책과정이라고 하며, 정책의 추진 체계는 특정 정책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한다면 정책의 추진 체계는 정책과정에서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정책과정은 그 시작과 끝은 물론 경계도 명확하지 않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과정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정책과정은 순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에 마무리 짓기보다는 장·단기의 시간적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동시에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과정 중에 정책변동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정책의 추진은 불확실성과 정치성, 그리고 순환성과 시간성 및 복잡성과 다양성 등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정책은 추진에 앞서 좀 더 명확한 추진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적자원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정책과제별로 해당 부처가 수립·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이번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둘째, 범부처적 정책협력과 민간의 참여 유도이다. 계획에서 관련부처와 민간기관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하여 정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시행계획의 수립과 성과점검 과정

에서 실무조정회의를 통한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과제별 정책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용이다. 이 계획에서 다수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과제는 과제별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과제별 책임관을 지정한다. 과제별 책임관은 정책 참여주체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정책과제의 추진성과를 매년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한다. 평가에서 상위 정책영역은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평가하고, 하위과제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중심의 정책 관리·평가방식을 채택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이다. 최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특히 지역단위 인적자원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다섯째, 정책 추진 결과의 체계적 평가이다. 국가 인적자원개발·배분·활용과 관련된 객관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진단·평가하여 후속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2. 한국의 인적자원 기본 현황 분석

가. 국민 소질의 기본 상황

<표 II-1> 세부항목별 인적자원의 국가경쟁력 평가

<p><인구의 특징>: 10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규모: 16위 • 부양률: 2위 • 기대수명: 33위 <p><노동인구의 특징>: 36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 32위 • 기술인력 확보의 용이성: 35위* • 두뇌유출: 30위* <p><삶의 질>: 15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33위* • 주택소유율: 4위 • Human Development Index: 27위 <p><사회문화적 가치>: 21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콜, 마약 남용: 12위* • 직장 내 폭력: 28위* • 사고의 유연성 및 적응력: 19위* • 기회의 평등: 44위* • 사회적 가치: 6위* 	<p><교육하부구조>: 34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38위* • 중등교육등록률: 4위 • 고등교육등록률: 7위 • 대학교육의 효율성: 43위* • 초등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44위 • 중등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42위 • GDP 대비 교육예산: 34위 • 문맹율: 26위 • 경제에 대한 이해도: 11위 <p><고용>: 14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규모: 16위 • 고용률: 28위 •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용증가추이: 37위 • 노동시간: 6위 <p><실업>: 9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률: 25위 • 실업자 중 청년비중: 7위
---	--

주 : 설문조사에 의한 정성적인 지표

자료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

스위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매년 47개 국을 대상으로 국내경제·세계화·정부·금융·하부구조·경영·과학기술·인적자원 등 8개 분야의 경쟁력 요소를 종합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249개의 경쟁력 요소를 종합 분석하였는데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 나타난 표와 같다.

IMD에 따르면 한국의 인적자원의 경쟁력 NICs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시아의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도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싱가포르(4위), 대만(18위), 홍콩(19위), 한국(27위)으로 소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서 인적자원 경쟁력이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정성적이며 질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교육하부구조(34위)와 노동인구의 특징(36위) 부문의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표 II-2>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주요국들에 비해 유아기 때의 교육과 중장년층의 취학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평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입시문제에 직면한 초·중·고등학교 때의 취학률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I-2> 연령별 취학률

(단위 : %)

구분	의무교육종료연령	90%이상이 취학하고 있는 연한	3-4세 취학률	5-14세 취학률	15-19세 취학률	20-29세 취학률	30-39세 취학률	40세이상 취학률
평균	16	11	39.6	97.2	76.3	20.4	4.4	1.2
한국	14	12	10.3	92.1	78.6	20.9	1.1	0.2
일본	15	14	49.7	101.0	m	m	m	m
독일	18	12	49.2	97.5	88.3	21.7	3.0	0.2
영국	16	12	50.6	98.9	69.5	18.1	8.8	3.2
미국	17	10	31.8	99.8	74.2	21.4	5.6	1.6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00.

<표 II-3>과 <표 II-4>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학교 수와 연령별 평균교육년 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학교 수와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규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II-3> 학교 수

구 분	1965년	1975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유 치 원	423	611	6,242	8,354	8,960	8,494	8,407	8,343	8,292
초등학교	5,125	6,367	6,519	6,335	5,772	5,267	5,322	5,384	5,463
중 학 교	1,208	1,967	2,371	2,474	2,683	2,731	2,770	2,809	2,850
고등학교	701	1,152	1,602	1,683	1,830	1,957	1,969	1,995	2,031
전 문 대	48	101	120	117	145	158	158	159	158
대 학 교	70	72	100	107	131	161	162	163	169
교육대학	13	16	11	11	11	11	11	11	11
산업대학	-	-	6	6	17	19	19	19	19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 2003,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표 II-4> 연령별 평균교육년 수 추이

		1970	1980	1990	2000
전 체	평 균	5.7(6.8)	7.6(9.1)	9.5(11.0)	10.6(12.3)
	남 자	6.9	8.7	10.6	11.5
	여 자	4.7	6.6	8.6	9.8
20~29세	평 균	8.3	9.9	12.0	13.1
	남 자	8.8	10.3	12.3	13.0
	여 자	7.5	9.4	11.8	13.2
30~39세	평 균	7.2	9.2	11.1	12.8
	남 자	8.7	10.2	11.8	13.2
	여 자	5.6	8.1	10.4	12.5
40~49세	평 균	4.8	7.5	9.5	11.2
	남 자	6.4	9.0	10.6	12.0
	여 자	3.4	6.0	8.4	10.5
50세 이상	평 균	2.0	4.2	5.5	7.2
	남 자	3.1	5.0	7.6	9.2
	여 자	1.1	2.3	3.9	5.5

주: ()안의 수치는 25-64세 인구에 대한 각 교육수준별비중임.

자료: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 보고서』, 『한국의 사회지표』, 각 년도.

또한 교육년 수의 추이 표를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년 수가 증가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불완전하기는 부분적으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II-5> 학생 수

(단위: 백명)

구분	1965년	1975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유치원	19,566	32,032	314,692	414,532	529,265	545,263	545,142	550,256	546,531
초등학교	4,941,345	5,599,074	4,856,752	4,868,520	3,905,163	4,019,991	4,089,429	4,138,366	4,175,626
중학교	751,341	2,026,823	2,782,173	2,275,751	2,481,848	1,860,539	1,831,152	1,841,030	1,854,641
고등학교	426,531	1,123,017	2,152,802	2,283,806	2,157,880	2,071,468	1,911,173	1,795,509	1,766,529
전문대	23,159	62,866	242,117	323,825	569,820	913,273	952,649	963,129	925,963
대학교	105,643	208,986	931,884	1,040,166	1,187,735	1,665,398	1,729,638	1,771,738	1,808,539
교육대학	5,920	8,504	18,174	15,960	19,650	20,907	21,418	23,259	23,552
산업대학	-	-	20,254	51,970	120,670	170,622	180,068	187,040	191,455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 2003,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각종 발표 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하고 있고,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역시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인적개발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각급 학교가 획일적인 입시위주 교육으로 편향된 인적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6> 학급당 학생 수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65년	65.4	60.7	57.1
1975년	56.7	64.5	58.6
1985년	44.7	61.7	56.9
1990년	41.4	50.2	52.8
1995년	36.4	48.2	47.9
2000년	35.8	38.0	42.1
2001년	35.6	37.3	39.7
2002년	34.9	36.7	33.9
2003년	33.9	34.8	33.1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각각 동등과정의 각종 학교와 특수학교 제외.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 200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표 II-7> 교원 1인당 학생 수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65년	62.4	39.4	30.2
1975년	51.8	43.2	31.4
1985년	38.3	40.0	31.0
1990년	35.6	25.4	24.6
1995년	28.2	24.8	21.8
2000년	28.7	20.1	19.9
2001년	28.7	19.6	18.3
2002년	28.1	19.3	15.7
2003년	27.1	18.6	15.3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각각 동등과정의 각종학교와 특수학교 제외.
 자료: 간추린 교육통계, 200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표 II-6>과 <표 II-7>은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간접적으로나마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판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즉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표 II-8>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증가 추이 (%)

구 분	고등교육기관	대 학 교
1970년	26.9	25.6
1975년	25.8	20.7
1980년	27.2	25.0
1985년	36.4	25.8
1990년	33.2	25.8
1995년	51.4	39.0
2000년	68.0	41.1
2001년	70.5	43.0

주 : 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진학자/졸업자×100. 2) 대학교 진학률=대학교 입학정원/고등학교 졸업예정자×100. 3)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포함, 대학교는 4년제 일반대학

자료: 교육통계편람(2001),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교육기본통계자료(2001), 연도별 대학진학률 추이,
교육인적자원부(대학지원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표 II-8>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97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학교의 진학률보다는 고등학교에 대한 진학률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학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의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전체 국민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교육 정책적 배려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교육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I-9>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연 도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1990년	60.0	14.6	62.8	67.3	75.6	78.8	72.4	35.6
1995년	61.9	12.0	63.1	69.1	75.6	80.0	71.8	38.8
2000년	61.0	11.9	57.3	70.1	75.1	79.1	68.5	38.2
2001년	61.3	11.6	57.0	70.8	74.9	78.8	68.5	38.5
2002년	61.9	10.6	58.0	71.7	75.1	78.9	69.4	39.1

주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15세 이상 인구×100.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성·연령별 15세 이상 인구, 경제·비경제활동인구.

<표 II-10>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추이

연 도	전체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0년	74.0	47.0	10.8	18.7	79.6	53.5	97.1	53.2	95.0	62.2	87.6	57.5	49.9	26.4
1995년	76.5	48.3	9.3	14.5	76.9	57.1	97.0	53.2	96.0	63.8	87.9	56.4	54.2	28.9
2000년	74.2	48.6	11.5	12.4	72.0	58.1	95.5	53.9	93.6	64.1	84.0	53.3	49.6	30.1
2001년	74.2	49.2	10.7	12.6	70.7	59.5	94.9	54.2	93.5	63.9	83.4	53.8	50.5	29.9
2002년	74.8	49.7	9.4	11.7	70.7	60.9	95.0	54.4	93.6	63.9	84.7	54.2	51.7	30.1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성·연령별 15세 이상 인구, 경제·비경제활동인구.

<표 II-9>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의 전체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 II-10>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미세하나마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도 선진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의 교육 참여와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 분야의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1>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 <표 II-11>은 각국별 GDP 대비 지식투자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를 살펴보면 한국이 GDP 대비 5.1%를 지식투자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GDP 대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식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인적자원개발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II-11> 각국별 GDP 대비 지식투자 순위

국가별	순위	지식투자					년평균성장률 (1991-98)
		GDP 대비 투자비율 (1998)				공·사교육비	
		계	R&D	S/W	공·사교육비		
스웨덴	1	6.5	3.8	1.9	0.8	7.6	
미국	2	6.0	2.6	1.5	1.9	3.9	
한국	3	5.2	2.6	0.4	2.2	-	
핀란드	4	5.2	2.9	1.2	1.1	6.8	
스위스	5	4.8	2.8	1.5	0.5	3.2	
캐나다	6	4.7	1.6	1.6	1.5	2.6	
일본	7	4.7	3.0	1.1	0.6	2.6	
덴마크	8	4.6	1.9	1.5	1.1	5.9	
네덜란드	9	4.3	2.0	1.7	0.7	3.8	
독일	10	4.2	2.3	1.2	0.7	2.2	
프랑스	11	4.1	2.2	1.2	0.8	3.0	
노르웨이	12	4.0	1.7	1.2	1.0	5.6	
영국	13	3.9	1.8	1.3	0.8	3.6	
호주	13	3.9	1.5	1.2	1.2	4.0	
오스트리아	13	3.9	1.5	1.2	1.2	6.3	
벨기에	16	3.7	1.9	1.4	0.4	-	
체코	17	3.3	1.3	1.2	0.8	-	
아일랜드	18	3.1	1.4	0.5	1.1	10.2	
헝가리	19	2.6	0.7	1.0	0.8	1.6	
스페인	20	2.2	0.9	0.5	0.8	4.3	
이태리	21	2.1	1.0	0.5	0.6	-0.6	
포르투갈	22	1.8	0.6	0.4	0.8	5.4	
그리스	23	1.7	0.6	0.2	0.9	10.1	
멕시코	24	1.5	0.4	0.4	0.7	-	
OECD 평균	-	4.7	2.2	1.2	1.2	3.4	

자료: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1, OECD

<표 II-12> 우리나라의 HDI 변화 추이(Human Development Index: HDI)

년도	순 위	기대수명(세)	성인 문해율(%)	총취학률(%)	1인당 GDP (ppp US\$)	HDI
1999	30	72.4	97.2	90	13,590	0.852
2000	31	72.6	97.5	90	13,478	0.854
2001	27	74.7	97.6	90	15,712	0.875
2002	27	74.9	97.8	90	17,380	0.882

자료: Human Development Report, 각 년도, UNDP
(hdr.undp.org/reports/default.cfm)

우리나라의 HDI(인간개발지수)의 순위를 살펴보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취학률도 높고 성인 문해율도 세계 1~2위권으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나 전략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인적자원의 문제점

인적자원의 문제점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양적 공급기반은 양호하나 질적 경쟁력이 미흡하다. 의무교육의 확대와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인적자원의 양적 공급 기반은 대체로 양호하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등 고학력 인력의 대량 공급체제로 진입한 상태이다. 또한 법학·의학 분야 등 특정 분야로 우수 인재가 집중되고, 이공계 및 자연계 분야로의 진학을 기피하는 추세로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대학의 교육환경은 악화되었고, 대학 교육의 질도 저조해 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년 간 4년제 대학 수는 3배, 학생 수는 1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과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상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아래에 나타난 것과 같다.

※ 대학 수(4년제) : 71교(1970년) → 192교(2001년)

학생 수(4년제) : 146천명(1970년) → 1,931천명
(2001년)

※ 교수 1인당 학생 수 (2000년) :

한국 30.7명, 미국 14.6명, 일본 11.8명

※ SCI 논문 수(2000년) : 미국의 4.6%, 영국의 16.4%,
일본의 17.7%¹²

둘째, 대학과 지역산업의 연계구조가 취약하다. 그 동안 대학은 순수 학문연구 및 고급소양을 갖춘 지도자 양성이라는 전통적 대학이념에 주력한 나머지 지식의 실용화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적 특성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대학별 특성화가 미흡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지식창출 및 확산의 핵심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부족한 나머지 고급인력의 양성과 첨단 기술의 획득은 주로 유학 및 기술도입 등 해외부문에 의존해 온 경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직성과 폐쇄성은 교육·훈련기관의 경직성과 폐쇄성이 창의적 인재양성과 교육기회의 확대를 저해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 자율성이 취약하게 만들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저조하게 만든다. 또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지식창출 기관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게 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지식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확산하는 데 필요한 기구나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게 만든다.

넷째, 외국의 우수대학 및 연구소·연구자의 유치, 국제 공동연구 참여 등 국제적 수준의 지식과 인력 교류가 부족하다.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¹² 김태기 (2004).

다섯째, 교육·훈련체제와 노동시장의 괴리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괴리 현상은 인력수급 전망, 직업 정보, 자격 제도 등 교육·훈련과 노동 시장을 연계하는 기본적 정보 인프라가 부족하게 만들고,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하는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 현상이 심각하여, 고학력자가 저직능 직종에 하향 취업하는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가 발생시킨다. 특히, 직업세계의 인력수요를 교육·훈련체제에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수요전달 체제가 미발달하게 됨으로 인해 교육·훈련내용과 산업현장 요구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여 기업이 별도의 재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또한 진로지도 및 고용서비스 기능이 취약하여 학교의 진로지도와 고용에 있어 공공 서비스 기능이 취약하고, 민간에 주로 의존하게 되고 노동시장이 부문별, 생애 단계별로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직업세계로의 참여 경로가 제약받아 인력의 채용기준과 경로가 다양하지 못하고, 학력수준별로 노동시장 참여 방식이 양극화 현상을 야기 시킨다.

<표 II-13>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 (단위: %)

	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	그런대로 일치	매우 일치
고졸이하	50.6	18.3	24.2	6.9
인문계	58.9	19.2	17.1	4.7
실업계	41.6	18.6	31.1	8.8
전문대졸	33.3	15.8	26.7	24.1
대졸	25.4	15.0	27.9	31.6
전체	40.5	16.8	25.8	16.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3. 5).

<표 II-1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고졸의 경우에는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로 인한 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재교육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고학력으로 올라가면서 불일치 정도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불일치와 약간불일치의 비중이 40~50%를 육박하고 있

어 기업의 직원에 대한 이중교육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기업이 요구하는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인력수요 개발 부진을 들 수 있다. 인문·사회분야의 고급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산업의 인력수요가 특히 취약하다. 이것은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와 실용화 노력이 부진하고 이미 양성된 고급인력조차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능력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근로관행 및 고용구조로의 전환이 미흡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고위임원 및 관리자의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래의 표에서 한국의 산업별 취업구조로 본 산업구조 변화 추이 및 전망이 나타나 있는데, 서비스업과 금융업 부문에서만 취업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제조업을 포함한 1, 2차 산업의 취업구조는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러한 산업구조와 취업구조는 이공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인적자원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산업전체의 취업자 수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4%씩 증가하여 약 300만 명의 순증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림어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0년에는 2001년보다 약 47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고, 제조업 전체 취업자 수는 연평균 0.23% 감소해 2001년 대비 2010년에는 약 85천 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며, 서비스업 전체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2.34% 증가해 2001년 대비 2010년에는 약 3,464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¹³

¹³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추진현황과 방향” (2002).

<표 II-14> 산업별 취업구조로 본 산업구조 변화추이 및 전망(신산업분류체계)

(단위: 천명, %)

산업분류	1993년	2000년	2005p	2010p	연평균 증가율			
					93-00	00-05	05-10	00-10
전 산업	19,328 (100)	21,061 (100)	22,819 (100)	24,269 (100)	1.23	1.62	1.24	1.43
농림어업	2,849 (14.7)	2,288 (10.9)	2,008 (8.8)	1,723 (7.1)	-3.08	-2.58	-3.01	-2.80
광업	53 (0.27)	18 (0.08)	19 (0.08)	18 (0.07)	-14.28	1.22	-1.08	0.07
제조업	4,677 (24.2)	4,244 (20.2)	4,130 (18.1)	4,114 (16.9)	-1.38	-0.54	-0.08	-0.31
서비스업	11,749 (60.8)	14,510 (68.9)	16,662 (73.0)	18,414 (75.9)	3.06	2.80	2.02	2.41
전기가스 및 수도	65 (0.3)	63 (0.3)	55 (0.2)	55 (0.2)	-0.46	-2.62	-0.14	-1.39
건설업	1,688 (8.7)	1,583 (7.5)	1,643 (7.2)	1,723 (7.1)	-0.92	0.75	0.96	0.85
도소매 음식숙박	4,648 (24.1)	5,687 (27.0)	6,316 (27.7)	6,798 (28.0)	2.92	2.12	1.48	1.80
운수,창고,통신	1,007 (5.2)	1,263 (6.0)	1,688 (7.4)	2,073 (8.5)	3.29	5.96	4.20	5.08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	1,353 (7.0)	2,072 (9.8)	2,556 (11.2)	2,839 (11.7)	6.28	4.28	2.13	3.20
사회 및 개인 서비스	2,988 (15.5)	3,843 (18.3)	4,404 (19.3)	4,927 (20.3)	3.66	2.76	2.27	2.52

주 1) p는 전망치 2) ()안의 수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일급제, 여성 인적자원과 청년층의 저활용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비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활용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2000년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60.7%이며, 남성이 74.0%, 여성이 48.3%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공학 분야, 과학기술분야 등 특정분야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저조한 현상은 여성에게 유리한 고부가가치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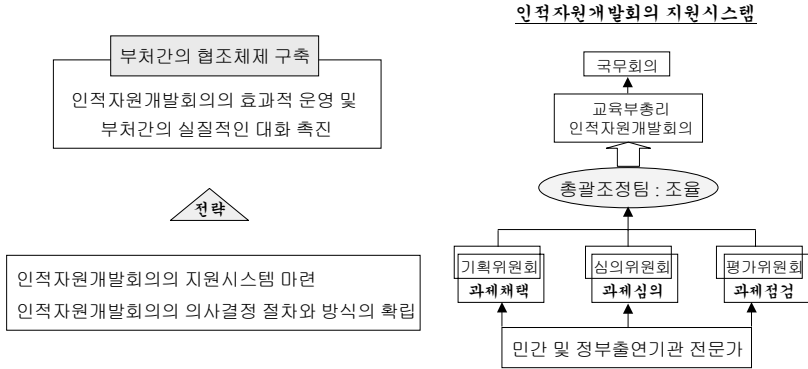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성인단계의 평생학습 참여 저조를 들 수 있다. 40~50대 경제활동인구의 다수가 중졸이하 학력의 저학력 계층으로 향후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성인단계의 계속교육 참여비율이 매우 저조하고,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미발달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 대학 등 기본 교육시설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기여가 저조하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¹⁴

3. 현황에서 본 인적자원개발의 발전추세

인적자원개발의 비전 및 목표와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처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조체계 구축,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첫째, 부처 간의 협조체계 구축은 정책의 일관성 확보, 지원대상의 중복성 지양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조체계 구축은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민간과 정부 간의 협조체계 구축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II-1>이라고 할 수 있다.

¹⁴ “대통령보고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04).

<그림 II-1> 인적자원개발의 지원시스템



자료: 국가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연구(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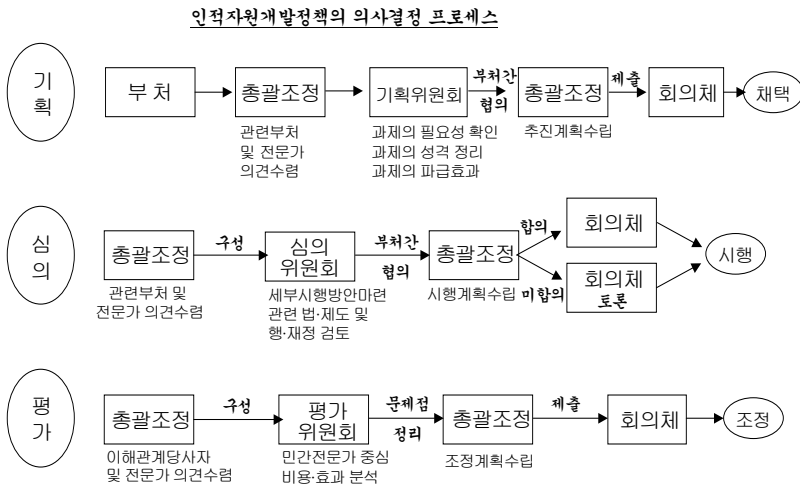
또한 부처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효과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사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확립하고, 인적자원부총리 산하에 총괄조정기구를 설치하며, 관련부처의 실무국장이나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것이다. 먼저, 총괄조정기구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전반을 조율(Orchestrating)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기획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 회의에서 다룰 의제의 개발·채택을 담당하고, 기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연구·조사팀(Think Tank Team)을 구성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채택된 과제단위로 구성하고, 필요시 문제해결팀(Problem Solving Team)을 구성되고, 마지막, 평가위원회는 과제에 대한 여론 뿐 아니라 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성과점검팀(Monitor Feedback Team)을 구성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의사결정의 절차와 의사결정의 방식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담당 부처가 의제제출의 배경 등을 설명하는 제안서를 총괄조정기구에 제출하고, 총괄조정기구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함. 기획위원회는 채택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총괄조정기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하면, 총괄조정기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안과 선택기준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며 심의 결과서를 총괄조정기구에 제출하게 한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조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총괄조정기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는 각 의제의 성과 점검 결과를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제출하고, 마지막 인적자원개발 회의의 의사결정은 공감대 형성(consensus-making) 방식을 지향하되,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지체되는 경우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II-2>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자료: 국가 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연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방식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및 조정과 사후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부처 간 사전협의 및 조정과 사후점검 기능의 강화를 통해 인적자원의 형성과 인적자원의 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나홀로 식’ 정책을 지양하고, ‘공동문제 해결적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공동문제 해결적 정책’은 과제의 해결방안의 모색에 있어서 부처 간의 대화를 중시하고, 해결방안을 관련부처가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창의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인적자원전략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분야별·부처별 행·재정 지원의 중복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중복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일단 벌이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지양하고, ‘목적별 교차 관리식’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목적별 교차 관리식’ 정책은 각 사업이 가진 장점을 살리되, 유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처 간의 협의 기능미비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와 파급효과가 큰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기능미비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와 파급효과가 큰 정책과제의 우선 추진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조기에 착근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백화점식’ 정책이나 ‘부처 할거주의식’ 정책은 지양하고, ‘선별·집중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별·집중식’ 정책은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재정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논란이 있거나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과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논란을 줄이고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논란이 있거나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과제는 신중하게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서 ‘대중요법식’ 정책은 지양하고, ‘원인치료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원인치료식’ 정책은 과제가 갖고 있는 인과관계를 중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행·재정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의 기획·집행·평가 권한은 분산하되 관련 정보를 집중화해야 한다. 정책의 기획·집행·평가권한은 분산하되, 관련 정보를 집중화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후관리 부재식’ 정책은 지양하고, ‘투명성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투명성 지향적’ 정책은 각 단계별로 정책의 실패가능성을 줄이고, 정책의 책무성과 정책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는 발전을 하도록 뒷받침하고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파급효과를 제고해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식(top-down)’의 정책은 지양하고, ‘네트워크(network)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네트워크형’ 정책은 정책의 수요자와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실제로는 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인적 자원 개발 산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리 감독식’ 정책은 지양하고, ‘동반자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반자적’ 정책은 정책당사자의 마인드가 잠재력을 가진(민간) 당사자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도록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⁵

¹⁵ 김태기,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교육부, 2000).

4. 인적자원개발 변화 전망

인적자원개발 변화를 전망하자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말할 수 있다. 세계는 점차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등 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산업전반에 걸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지식집약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경제에 있어 국경이 사라지고 국가 간 지식·정보의 교류가 확대되는 지구촌 경제시대가 가속화되고 있고, 세계경제의 통합은 연구개발에서 생산·판매에 이르는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국제 분업관계를 촉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적 경쟁압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이나 국가의 도태 위험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은 노동 및 자본투입의 증가를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이러한 전통적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없을 경우 후발 경쟁국의 추격 속에, 현 상황의 유지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즉 신기술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원천·응용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 고도화를 추진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동북아 국가와 발전적 분업관계를 구축하고, 역내 인적자원 이동의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즉, 사회가치관의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의 증대는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산업사회의 획일화, 동질화로부터 다양화, 개성화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 여가생활 및 문화 활동 등 개인 및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의 국제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정체성의 확립 요구가 증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지적·창의적 활동이 산업과 접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탈규제화와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시장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지역사회와 생활문제 중심의 다양한 시민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확대된 시장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기반으로 신 지식인 운동, 지식혁명 캠페인 등 지식과 학습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반면 학벌주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등 뿌리 깊은 전근대적 관행은 사회적 신뢰의 형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구조 변화, 세대 간 의식격차, 개인주의적 문화 속에서 청소년 문제, 여성 및 중장년층 문제,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정보격차와 사회적 소외문제의 대두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하면서 지식·정보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의 확충이 시급하다.

셋째, 노동시장의 변화와 평생학습 수요의 증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력수요 고도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감소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직종 간, 산업간 인력의 이동이 심화시키고 특히, 서비스업 부문은 지식기반 제조업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2000년 현재 서비스산업은 전체 취업자 수의 68.9%, GDP의 5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지식집약화로 전문기술직과 지식근로자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고 단순 생산직과 사무직 인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고위임원직과 관리자, 전문기술직의 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WTO 뉴라운드의 출범에 따른 서비스무역 자유화로 국가 간 전문 인력의 이동과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선진국형 교육·훈련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즉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가 고도화되고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

으로 변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교육·훈련과 학원 등 민간 부문에 의한 인적 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구증가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고령인구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재교육·훈련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평생학습과 개인의 진로발전을 연계한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인구증가율 변화 전망 :

1.0% (90년대) → 0.7% (2001~2010년)

※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 :

7.1% (2000년) → 14% (2022년)

(대통령보고서, 2004)

5.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의 도전과 정책

가. 인적자원개발의 환경 변화

첫째,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인적자원의 구조변화.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층 인구의 감소와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등의 신규 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동력의 중장년화로 인한 산업인력의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중장년 노동력의 노동시장퇴장(조기퇴직, 명퇴 등)에 따른 새로운 직업의 탐색과 사회적 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평균 수명이 증가되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노년 부양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인력의 활용이 미흡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인구감소에 따라 노동력의 부족 압박이 나타나고 있어 지식기반경제에서 우수 인력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II-15>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2000년)
(단위: %)

	전체			남자			여자		
	15-24세	25-54세	55-64세	15-24세	25-54세	55-64세	15-24세	25-54세	55-64세
오스트레일리아	69.0	80.5	49.0	69.8	90.3	61.5	68.1	70.7	36.3
캐나다	64.4	84.8	51.2	65.9	91.1	61.0	62.9	78.6	41.6
프랑스	29.5	86.2	37.2	32.7	94.1	41.6	26.2	78.4	32.9
독일	52.5	86.5	44.7	57.1	95.8	55.2	47.6	76.9	34.1
일본	47.0	81.9	66.5	47.4	97.1	84.1	46.6	66.5	49.7
한국	31.8	75.2	59.2	26.7	82.0	70.8	36.1	57.8	48.2
영국	69.7	84.1	52.8	73.7	91.9	63.3	65.6	76.1	42.6
미국	65.9	84.1	52.8	68.6	91.6	67.3	63.2	76.8	51.8
유럽연합	46.4	80.2	42.0	52.3	93.1	53.0	40.4	68.0	29.6
OECD 평균	51.9	80.5	51.0	57.1	92.9	63.0	46.6	68.2	38.7

자료 : OECD(2001), Employment Outlook.

둘째, 잠재 경제성장하에서 향후 전문 인력 수요가 증대. 지식을 창출·활용·확산하는 핵심 인력은 전문직 인력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직 인력은 독일이나 영국 및 호주 등에 비하여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직업별 취업자 전망에서 전문직 인력의 수요는 2010년까지 연평균 3.96%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표 II-16> 전문직 인적자원 규모의 국제비교

(단위: 천명, %포인트)

	한 국 (2001년)	독 일 (2000년)	영 국 (1999년)	호 주 (2000년)
총취업자 (A)1)	21,362	35,758	27,252	9,010
전문직 취업자수 (B)1)	4,003	14,083	10,140	3,368
전문직 취업자의 비중 (C=B/A)	18.7	39.4	37.2	37.4
(25-64)인구에서고등교육 학력자의 비 중(D)2)	23	23	25	27
(C-D)	-4.3	16.4	12.2	10.4

주 : 독일 및 영국은 군인 및 직업분류 불가능 인원을 총취업자에서 배제.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ILO(2001),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3) OECD(2001), Education at a glance.

<표 II-17>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1993	2000	2005p	2010p	연평균 증가율			
					1993- 2000	2000- 2005	2005- 2010	2000- 2010
전 체	19,328(100)	21,061(100)	22,819(100)	24,269(100)	1.23	1.62	1.24	1.43
관 리 자	521(2.7)	487(2.3)	517(2.3)	572(2.4)	-0.96	1.07	2.02	1.62
전 문 가	882(4.6)	1,093(5.2)	1,384(6.1)	1,611(6.6)	3.10	3.69	3.08	3.96
준전문가	1,480(7.7)	2,310(11.0)	2,670(11.7)	2,904(12.0)	6.57	2.62	1.70	2.32
사 무 직	2,418(12.5)	2,355(11.3)	2,574(11.3)	2,711(11.2)	-0.38	1.83	1.04	1.42
서비스직	1,809(9.4)	2,754(13.1)	3,063(13.4)	3,489(14.4)	2.15	2.64	2.64	2.39
판 매 직	2,142(11.1)	2,186(10.4)	2,627(11.5)	2,840(11.7)	3.75	1.57	1.57	2.65
농림어업직	2,561(13.3)	2,154(10.2)	1,870(8.2)	1,592(6.6)	-2.45	-3.30	-3.17	-2.98
기 능 직	2,929(15.2)	2,860(13.6)	2,803(12.3)	2,901(12.0)	-0.34	-0.46	0.69	0.14
조작조립직	2,467(12.8)	2,245(10.7)	2,460(10.8)	2,607(10.7)	-1.34	1.75	1.17	1.51
단순노무직	2,118(11.0)	2,617(12.4)	2,851(12.5)	3,042(12.5)	3.07	1.94	1.31	1.52

주 : 1) p는 전망치임. 2) ()안의 수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등의 국가전략분야의 인적자원(IT, BT, NT, ST, ET, CT 분야)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활

용할 체계를 확립이 요청된다. 한편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교육·의료·문화 등의 영역에 있어서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중요하다.

셋째, 생산직 및 서비스직 인력 능력개발의 중요성 증대. 직업별로는 판매 및 서비스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종별로 서비스업의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의 인력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표 II-18> 산업 대분류별 취업자 수 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명, %)

산업분류	1993	2000	2005p	2010p	연평균 증가율			
					93-00	00-05	05-10	00-10
전산업	19,328 (100)	21,061 (100)	22,819 (100)	24,269 (100)	1.23	1.62	1.24	1.43
농림어업 소계	2,849 (14.7)	2,288 (10.9)	2,008 (8.8)	1,723 (7.1)	-3.08	-2.58	-3.01	-2.80
광업 소계	53 (0.27)	18 (0.08)	19 (0.08)	18 (0.07)	-14.28	1.22	-1.08	0.07
제조업 소계	4,677 (24.2)	4,244 (20.2)	4,130 (18.1)	4,114 (16.9)	-1.38	-0.54	-0.08	-0.31
서비스업 소계	11,749 (60.8)	14,510 (68.9)	16,662 (73.0)	18,414 (75.9)	3.06	2.80	2.02	2.41
전기가스및 수도	65 (0.3)	63 (0.3)	55 (0.2)	55 (0.2)	-0.46	-2.62	-0.14	-1.39
건설업	1,688 (8.7)	1,583 (7.5)	1,643 (7.2)	1,723 (7.1)	-0.92	0.75	0.96	0.85
도소매 음식숙박	4,648 (24.1)	5,687 (27.0)	6,316 (27.7)	6,798 (28.0)	2.92	2.12	1.48	1.80
운수,창고,통신	1,007 (5.2)	1,263 (6.0)	1,688 (7.4)	2,073 (8.5)	3.29	5.96	4.20	5.08
금융,보험 및 사업서비스	1,353 (7.0)	2,072 (9.8)	2,556 (11.2)	2,839 (11.7)	6.28	4.28	2.13	3.20
사회 및 개인 서비스	2,988 (15.5)	3,843 (18.3)	4,404 (19.3)	4,927 (20.3)	3.66	2.76	2.27	2.52

주 : 1) p는 전망치임. 2) ()안의 수치는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한편 제조업의 기술수준별로는 ICT 및 중·고위 기술 분야의 인력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중·저위기술 또는 저위기술의 인력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19> 제조업 기술수준별 취업자 수 전망
(단위 : 천명, %)

구 분	1993	2000	2005p	2010p	연평균 증가율			
					1993 -2000	2000 -2005	2005 -2010	2000 -2010
제조업전체	4,677 (100)	4,244 (100)	4,130 (100)	4,114 (100)	-1.38	-0.54	-0.08	-0.62
ICT 및 중고위기술제조업	1,176 (25.2)	1,332 (31.4)	1,334 (32.3)	1,395 (33.9)	1.79	0.04	0.89	0.93
중저위기술제조업	1,399 (29.9)	1,208 (28.5)	1,178 (28.5)	1,197 (29.1)	-2.08	-0.51	0.33	-0.18
저위기술제조업	2,106 (45.0)	1,709 (40.3)	1,623 (39.3)	1,527 (37.1)	-2.94	-1.02	-1.22	-2.23

주 : 1) p는 전망치임. 2) ()안의 수치는 비중임.

따라서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인적자원 수급 불일치의 심화. 우선 지적되는 것은 교육시장에서 수급의 불일치 현상이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생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방소재 대학교를 포함한 전문대학은 입학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서비스의 공급 체계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한편 해외 조기 유학의 증대와 이공계 기피 현상 대두, 학생의 수학능력 저하 등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수급의 불일치를 들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를 비롯한 과학기술분야의 고급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능 인력도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형편이다.

다섯째, 정보인프라의 부재. 현재 우리나라는 인적자원 양성과 관련한

통계 인프라가 취약(직업훈련 및 교육시장과 관련한 통계 취약 또는 부재)하며, 인적자원 활용과 관련되는 통계(졸업생 통계, 사업체 또는 재직자 통계 등)가 부재하여 인적자원 관련 이론적 토대를 검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합도가 높은 관련 지표 또는 지수의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시장 통계도 인적자원의 활용·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통계청의 통계도 직업세계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에 기초한 인적자원 정보의 생성이 요구되며, 더욱이 공신력 있는 정보의 유통을 위한 통계적 기반의 구축이 요망된다. 또한 기존의 교육통계와 NEIS와 같은 행정정보로부터 인적자원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실현이 불투명하다. 특히 교육통계는 인적자원정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섯째,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연계 인프라 부재. 국가직무능력표준(NSS) 개발은 그 필요성에 비하여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각 부처(노동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총괄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산업계가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자격은 노동시장에서 신호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지식기반경제에 부합하는 자격제도의 개편이 요청된다. 한편 학교에서 일터로 이행과 일터에서 학교로 이행이 원활하게 작동되게 하는 시스템이 부재(청년실업과 중·장년 능력개발 기제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정규 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장기 인력양성 시스템이외에 단기적인 능력개발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적자원 인프라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재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기본 방향과 전제

첫째, 기본적으로 전 국가 정책과 유기적 협력·조정·연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립·결정·추진·평가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분야는 우리 국민 전체의 관심과 국가발전의 핵심 요인으로 타 분야의 정책과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분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 분야별 정책과 유기적 관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총체적 정책 시각은 교육인적자원분야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전 국민 기본역량의 향상·강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래의 우리 사회는 지식기반이나 국제화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변동에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변화에서 교육인적자원분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변동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반응할 수 있는 역량 개발·축적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발전 및 지속성장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질분야의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은 바로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그 효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도 역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발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교육인적자원분야의 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세계는 기존의 질서와 다른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지역별 블록화 추세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즉 EU·NAFTA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블록화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과 전망에서 교육인적자원분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적자원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 안정 및 화합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 사

회는 다양화·다극화·다분화·다형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 분야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를 극복하여 사회적 안정과 회합·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과 미래 통일 국가 상황의 고려는 교육인적자원분야의 정책에서 기본적·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다.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과제

향후 인적자원부문의 변혁을 위한 과제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과제는 이 분야의 거시적·기본적·제한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정책은 일차적으로 교육·노동·산업정책 등과 관련한 큰 방향의 흐름을 제시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측면에서 교육인적자원개발 개혁의 과제 설정 및 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거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문의 권한 및 책임 분산.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공공분야의 지방 분권화가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서 교육인적자원부문의 권한과 책임 분산은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영역은 우선 공립학교 설립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 즉 각 지방정부도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청이 설립한 학교와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이원화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원자격 등에 대한 제한을 풀고, 그 교육성과에 따라 교육시장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사학은 준 공립화 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의 초·중등 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장기적으로 학교정책실과 지방교육지원국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문의 권한과 책임분산에 부응한 교육정책 기제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평가(성과분석)체계 확립이나 교육의 성과 지표의 개발, 그리고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의 평가나 학생들의 능력평가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계속교육체제의 확립 및 강화. 현재 사회변동의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속교육체제의 확립 및 강화는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체계를 확립·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과제는 이행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인턴십, 멘터십 등), 진로 및 직업 상담과 취업정보체계 재확립, 일에서 학교로의 이행체계 확립¹⁶, 근로자 또는 성인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 확립 등이다.

셋째, 교육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국가 교육인적자원부문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는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기관 및 기업 등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체제에 반영되어 각 체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중앙과 각 지역 간의 합의를 통한 국가 학습목표의 설정과 이의 공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의 규명이 필요하고, 국가 학습 목표의 설정과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전략의 공유와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조와 조직은 수평적 연계체제와 수직적 연계 체제의 확립을 통해 효율화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정책추진 체제의 비전 공유 및 수평적·수직적 연계,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차원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 공급 및 관리에 있어서 시장 지향의 모델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여 교육 운영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포괄적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교육 운영방식을 포괄적 허용과 선별적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며, 단위학교의 기관 운영의 자율화를 병행

¹⁶ 예컨대, 실업계 고졸자들이 직업세계로 나아간 후 일정 경력을 갖출 경우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고등교육으로의 지나친 진학 열기를 억제하는 것이다.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교육자치제의 정착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소비자의 학습 체제 선택권 확대, 단위 학습조직별 책임경영체의 정착, 대학들의 학생선발의 다양성 추구 등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 학습자의 동기 유발 체제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개인과 조직이 주도적인 학습과 변화를 이끄는 조직학습의 강화와 학습조직화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미래사회 기능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육방법의 적합성과 다양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전문성과 열의가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행정가의 전문성 및 리더십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열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식경영체 리더십의 배양, 교원의 핵심역량과 전문성의 증진, 학습공동체 구성원간의 역할 명료화와 파트너십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육성을 통한 신뢰회복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교육문제의 대부분은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불신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구성원간의 신뢰구축을 통한 학습사회의 구현은 신뢰회복을 통한 교육문화의 개선과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평생학습 운동을 통한 교육문화 혁신, 학습지역 및 학습도시 건설, 학습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 학력·학벌주의 타파,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가 학습목표는 국가적 차원의 학습체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가는 각 교육기관이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적 차원의 학습체제 질 관리 시스템 구축, 학교 기관평가의 정착, 학력과 각종 자격증의 호환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국가 학습목표는 국가적 차원의 학습체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의 구

축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가는 각 교육기관이 추구해야 할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학습을 위한 정보체제의 구축, 행정지원 네트워크 체제 구축, 관련 법 정비 등이 필수적이다.

III

중국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1.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 전략

21세기 중국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총체적 목표는 총량을 충족시키고, 균형적 안배, 능력 우선, 현대적 국민교육 체계의 실현, 세계 최대의 학습형 사회 건설로 십억 인구의 인적자원이 전면 개발 및 상승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교육 대국에서 교육 강국으로 실현되는 것이며, 인구 대국에서 인적자원 강국으로 향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며, 21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교육과 인적 자본 강국의 건설이 달성되는 것이다.

첫째, 총량 충족은 지속적이며 빠른 속도로 교육 훈련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고, 교육훈련의 종합 실력과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며, 모든 인민의 교육 수혜 연한이 부단히 제고되며, 인민들의 능력이 고급화되고, 다양한 교육을 희망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둘째, 균형적 안배는 교육 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이 지역에서 총체적 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점차적으로 상대적 균형을 이루며, 구조가 더욱 합리화되는 것이다. 서부 대개발 전략 중에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을 선행적으로 관철하며, 서부 대개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지식을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의 연계 발전 과정 중에 다른 지역이 실제 교육훈련 발전의 방식 및 방법이 적합한지를 탐색하여, 인민을 위한 다양화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셋째, 능력 우선은 전 인민 학습능력과 취업 능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핵심을 삼고, 교육훈련의 능력 제고를 강화하며, 교육과 훈련이 인민의 생존 해결 및 발전 문제의 중요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자가 취업 능력을 제고하는 것과 노동 생산을 제고가 중요 수단이 되며, 전체 인민이 전면적 발전 목표의 중요 수단으로 실현된다. 국가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취업 확대를 위하여 실업을 감소하고, 교육구조 조정, 교육내용 개혁, 양성 모형의 개혁이 급박하게 요구된다.

넷째, 현대적 체계는 현행 학교 교육체계를 개혁하고, 현대 국민교육

체계를 건설·완비하여, 평생학습 이념으로 삼고 전 국민을 광범위하게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학교와 기업 및 지역이 학습형 사회의 핵심이고, 교육과 인적자원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시키며, 최종적으로 중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 발전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2. 중국의 인적자원 기본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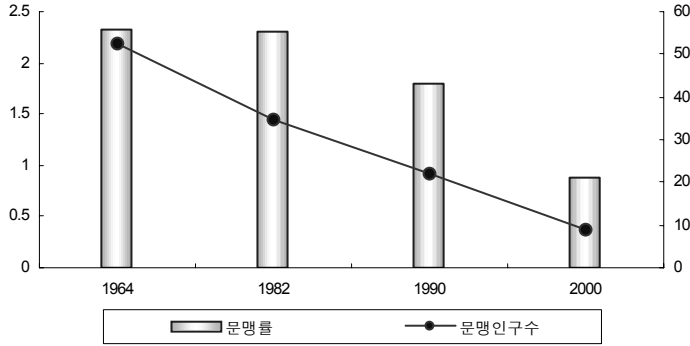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진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로서, 20세기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 이래 성장한 중국 경제는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1/5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연적으로 인적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숫자상의 인구 규모에 불과하고, 실제로 인구 수는 중국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열세를 우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은 침전되어 있는 인구의 부담을 인적 자원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만이 21세기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잃지 않고, 중국이 선진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중국의 각종 자료와 통계에 근거하여, 중국 인적 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문맹 인구의 대폭 감소

중국은 개혁 개방이 이루어진 20년 이래 문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전국 15세 및 이상의 문맹이 2.30억 명에서 0.87억 명으로 62% 감소되었고, 문맹률은 34.5%에서 9.1%로 감소되었다(<그림 III-1>). 1964-2000년 기간에 중국의 15세 및 이상 성인 인구 비문맹률은 43.3/100 증가되었고, 이는 개발도상국의 평균 보다 13.6/100 급증하여, 세계의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상승되었다. 2000년 중국 성인 비문맹율은 세계 평균보다 약 15/100 높게 나타났다(<표 III-1>).

<그림 III-1> 제 2, 3, 4, 5차 전국문맹인구 수와 문맹률 통계



자료: 중국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 p. 93.
 중국인구연감(1985). 중국사회과학출판사. pp. 617-618.
 중국 1990년 인구조사 자료 제 1책, (1993), 중국통계출판사. p. 38.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결과표.

<표 III-1> 15세 이상 인구 문자 해독률 국제비교(1960~2000)
 (단위: %)

	1960	1970	1980	1990	2000	변화량
선진국(13개국)	95.5	96.9	97.2	98.3	97.8	2.3
개발도상국가(23개국)	93.9	94.9	95.2	95.5	96.3	2.4
세계(109개국)	63.6	68.6	70.5	73.6	75.8	12.2
중국	47.6 (1964)		65.6 (1982)	77.8	90.9	43.3
동아시아/태평양(10개국)	47.5	64.6	77.4	73.6	80.2	32.7
라틴아메리카(23개국)	37.9	31.2	23.8	17.2	14.6	-23.3
개발도상국(73개국)	35.9	43.9	50.3	58.3	65.6	29.7
남아프리카(22개국)	31.1	36.2	43.2	54.1	57.2	26.1
동남아시아(7개국)	25.7	30.7	33.1	44.8	54.8	29.1
중동/북아프리카(11개국)	19.0	30.2	44.5	57.2	68.0	49.0

자료: Robert J. Barro, Jong-Wha Lee, International Data on Educational Attainment Updates and Implications (2000), p. 29.

나. 교육 수혜 정도의 지속적 향상과 고교 이상의 학력 인구의 증가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국민의 교육 수혜 정도가 대폭적으로 향상되어, 15세 및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이 1982년의 5.33년에서 2000년에는 7.85년으로 높아졌고, 2.52년이 증가하여 세계 평균의 4배가 상승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평균에 비하여 3.6/100 정도 상승된 것이다. 2000년에 이르러 중국 15세 및 이상 인구 평균 교육 연한이 세계 평균 수준보다 1.2년 높아졌으며, 개발도상국 평균 수준에 비하여 2.7년 상승하였다(<표 III-2>). 이처럼 중국 인구 수가 많고, 평균 교육 연한이 대폭적으로 상승함으로 세계 인구 소양 향상에 공헌을 하게 되었다.

<표 III-2> 15세 이상 인구 평균 교육연한 국제 비교(1980~2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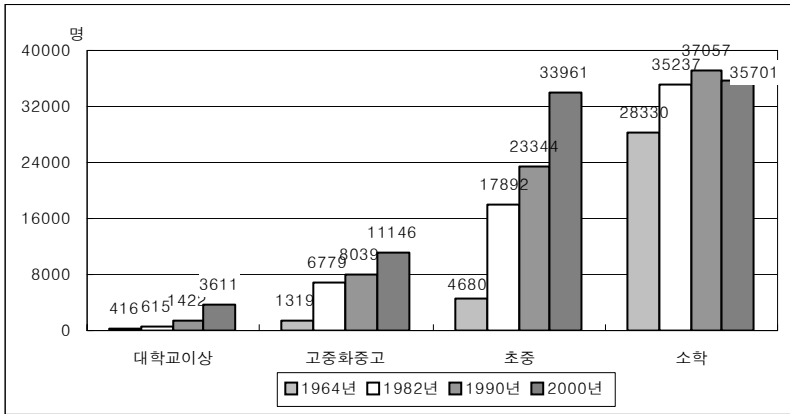
	1980	1990	2000	상승폭(%)
세계(109개국)	5.92	6.43	6.66	12.50
개발도상국가(23개국)	8.86	9.19	9.76	10.16
선진국가(13개국)	8.90	9.97	9.68	8.76
동아시아/태평양(10개국)	5.10	5.84	6.71	31.57
개발도상국(73개국)	3.57	4.42	5.13	43.70
중국	5.33 (1982)	6.40	7.85	47.28
동남아시아(7개국)	2.97	3.85	4.57	53.87
중동/북아프리카(11개국)	3.29	4.38	5.44	65.35
남아프리카(22개국)	2.39	3.14	3.52	47.28
라틴아메리카(23개국)	4.43	5.32	6.06	36.79

자료: Robert J. Barro, Jong-Wha Lee: International Data on Educational Attainment Updates and Implications (2000), p. 29.

중국의 제 2·3·4·5차 인구 조사에 근거하여, 1964-2000년 기간에 중국 매 10만 인구 중에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416명에서 3,611명으로 증가하였고, 매 10만 인구 중에 고교 및 중등전업학교 학력 소지

자가 1,319명에서 11,14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매 10만 인구 중에 초·중학교 학력 소지자가 4,680명에서 33,961명으로 증가하였다(<그림 III-2>). 1964년 이래 매 10만 명 인구 가운데 고등교육, 중등교육 수혜 인구 비율이 8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기초교육과 고등교육을 보급한 이래 명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전체 소양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상위 교육을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중국 인구 전체의 학력이 진일보 향상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III-2> 역대 인구조사에서 10만명 당 각종 교육수준정도 인구



자료: 중국인구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 p. 35.

다. 근로자의 교육 및 문화 소양 향상

개혁 개방 이래 중국 근로자의 교육 수혜 연한이 2년 정도 연장되었고, 교육 총 수혜 연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다. 1982-2000년 기간에 근로자의 규모는 4.5억 명에서 7.2억 명으로 증가되어 5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한은 5.81년에서 7.99년까지 증가되었고, 2.18년이 향상되었다. 근로자의 총 교육 연수는 26.3억 명에서 57.6억 명으로 1.2배의 증가를 나타내었다(<표 III-3>).

<표 III-3> 1982, 1990, 2000년 종업원의 교육연한 및 교육총량

연도	종업원수/만명	1인당평균 교육연한/년	교육수혜자 인구년수/만명	교육수혜자 중 총 연한증가 (1982년 100기준)
1982	45295	5.81	263073	100
1990	64749	6.81	440617	167
2000	72085	7.99	575815	219

자료: 중국통계연감(2002), 중국통계출판사. p. 118.

중국인구연감(1985). 중국사회과학출판사. pp. 653-656.

중국 1990년 인구조사 자료 제 2책, (1993), 중국통계출판사, pp. 532-553.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결과표.

1982년에서 2000년까지 중국 근로자 가운데 전문대학 및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0.87%에서 4.66%로 증가하였고, 고교교육 수혜 인구는 10.54%에서 12.65%로 증가하였으며, 초등 및 이하 교육 수혜자는 62.58%에서 40.98%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에 제 3차 산업 근로자의 문화 소양이 평균적으로 상승되었다. 제 1차 산업 근로자의 교육 연한은 4.82년에서 6.79년으로 증가하여, 대략 2년 정도가 연장되어 40% 넘게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 초등학교 및 초등 이하 교육 수혜자는 73.1%에서 55.0%로 감소하였고, 전문대학 및 이상 교육 수혜자의 비율은 0.04%에서 0.14%로 상승하였다. 제 2차 산업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한은 8.09년에서 9.44년으로 1.4년이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16.7%이다. 그 가운데 중학 및 이하의 교육 수혜자 비율은 78.4%에서 71.6%로 감소하였고, 전문대학 및 그 이상 교육 수혜자의 비율은 1.58%에서 5.95%로 상승하였다. 제 3차 산업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한은 9.29년에서 10.79년으로 연장되어 1.5년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16.1%이다. 그 가운데 중학 및 이하 교육 수혜자의 비율은 62.3%에서 49.6%로 감소하였고, 전문대학 이상 교육 수혜자의 비율은 5.64%에서 18.99%로 상승하였다(<표 III-4>).

이 분석이 나타내는 것은 최근 20년 간 중국 의무교육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제 1차 산업 근로자의 전체 소양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주로 문맹, 반문맹율의 감소 및 중학교 교육 수

혜자의 비율이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 2, 제 3차 산업 근로자의 차이는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 이들 제 2, 3차 산업 근로자 가운데 전문대학 및 이상의 교육 수혜자의 비율이 명백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I-4> 1982~2000년 중국 3차 산업 종업원의 교육수준 구성 비교
(단위: %)

	문맹,반문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평균교육 연한연
1982	28.20	34.38	26.01	10.54	0.87	5.81
제1차산업	35.90	37.16	21.47	5.43	0.04	4.82
제2차산업	7.75	30.68	39.93	20.06	1.58	8.05
제3차산업	4.98	20.48	36.88	32.01	5.64	9.29
1990	16.92	37.83	32.31	11.07	1.87	6.81
제1차산업	22.25	45.10	28.15	4.45	0.05	5.78
제2차산업	3.21	22.22	48.33	22.74	3.50	8.97
제3차산업	2.83	14.87	36.87	35.05	10.37	10.08
2000	8.14	32.84	41.70	12.65	4.66	7.99
제1차산업	11.82	43.13	40.31	4.61	0.14	6.79
제2차산업	1.44	17.32	52.84	22.43	5.95	9.44
제3차산업	1.54	11.53	36.52	31.42	18.99	10.79

자료: 중국인구연감(1985), 중국사회과학출판사. pp. 653-656. 중국 1990년 인구조사 자료 제 2책, (1993), 중국통계출판사. pp. 532-571.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결과표.

3. 중국 인적자원의 주요 당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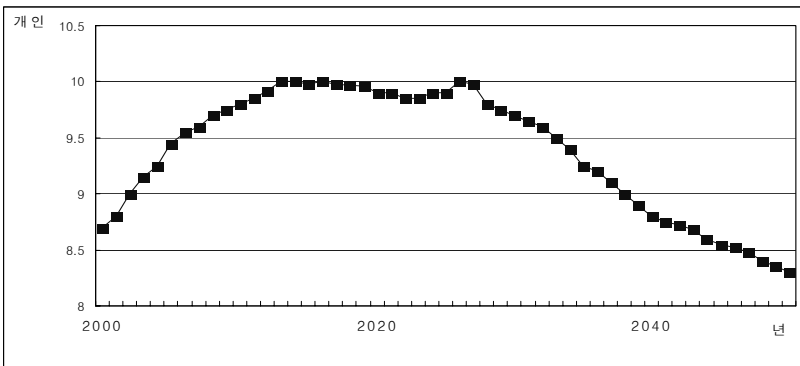
가. 인적자원의 양적 증가, 그리고 질적 수준 낙후

(1) 거대한 중국 노동 적령 인구 규모, 풍부한 노동력 자원

20세기 말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인구 성장 방식의 전환이 ‘저 출생률, 저 사망률, 저 자연성장률’을 실현되었고, 인구 연령의 급자탑 형식에서 감람형 모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노동 적령 인구의 비중이 점차적으

로 확대되고 있다. 제 5차 인구 조사 수에 근거하여 정방형 모형이 예측되고, 향후 20년 중국의 노동력 공급이 점차적으로 상승되어, 2013년에는 노동 적령 인구가 10억 명 정도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2025년 후 중국 노동 적령 인구 규모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될 것이다(<그림 III-3>). 연합국개발계획국(UNDP)의 『인류 발전보고』(2002)에서 인류 발전 지표의 수에 근거하면(<표 III-4>), 2000년 중국의 총 노동량 규모는 8.71억 명으로, 이는 세계 총 노동량의 22.3%에 해당하고, 고소득 국가의 1.48배에 해당한다. 향후 2015년에 이르러 중국 총 노동량 규모는 10억 명에 이르며, 이는 세계 총 노동량의 21.2%를 점유하게 된다. 중국 노동력이 세계 노동자원 총량의 비율은 세계 제2인구 대국인 인도에 비하여 4-5/100보다 높게 나타나며, 기타 인구 대국은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림 III-3> 2000~2050년 중국노동활동인구 (15~64세) 예측



자료: 중국 전국 제5차 인구조사 자료

(2) 노동 적령 인구 비중 추세

노동 적령 인구수를 총인구의 점유 비율이 2000년 중국은 68.3%에 이르렀고, 세계 평균 수준에 비하여 5%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노동 적령 인구 비중이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되며, 아울러 시종 일관 세

계 평균 수준 및 각종 수입별 국가의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11억 이 넘는 세계 11개 국가 비교에 있어 중국 노동 적령 인구는 총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비교적 우세하다.

(3) 거대한 문맹 인구 수, 분포의 불균형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문맹 인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5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2000년 문맹률이 9.1%에 이른다. 이러한 지표는 선진국(3-5%)의 성인 문맹률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다. 더욱이 중국 인구의 기본수가 매우 방대함으로 2000년 중국 15세 및 이상 문맹인구는 여전히 8,700만 명 정도에 이르러, 독일의 총 인구수보다 많음으로, 문맹인구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계 제 2대국이 되는 것이다.¹⁷

(4) 선진 국가에 비하여 인구 전체 문화 소양의 명백한 격차

중국의 제5차 인구조사와 연합국 경제 협력 및 발전 조직의 유관 자료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중국 25-64세 인구의 교육 수혜 연한은 7.97년이 고, 이는 100년 전의 미국의 국민 교육 수준에 해당하며, 1999년 미국과 일본의 교육 수혜 연한이 12.75% 및 12.55년과 비교할 때, 약 5년이나 미비하다. 이어 후기 발전 국가인 한국의 11.48년에 비교할 때 3년이나 부족하다. 선진 국가 및 신흥 공업국가 가운데 고등교육과 중등교육 수혜 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으며, 각각 87%와 66%를 점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고등교육 수혜 인구 비율은 각각 35%와 23%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

¹⁷ 지역적 분포로 볼 때, 중국의 15세 및 이상 인구의 문맹률이 15%를 초과하는 지역이 6개(서장, 칭해, 귀주, 감숙, 영하 및 운남)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장, 칭해, 귀주, 감숙 4개 지역의 문맹률은 20%를 초과하거나 근접한다. 즉 5명 가운데 1명이 문맹이다. 서장자치구의 문맹률은 더욱 높아 47.3%에 달하여 2명 가운데 1명이 문맹이다. 문맹인구 비율이 이와 같이 높기에 중국의 서부 지역 개발은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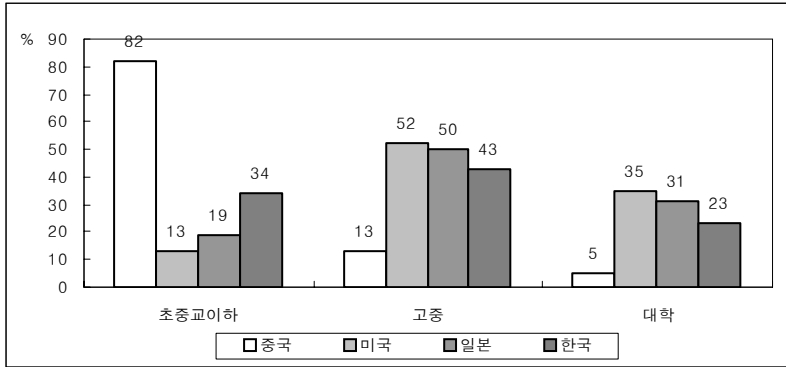
교할 때 중국은 2000년 25-64세 인구 가운데 고교 이상의 교육 수혜자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중학 및 이하 교육 수혜자는 82%이고, 초등학교 및 이하 교육 수혜자 비율은 42%에 이른다. 매 100명의 전문대학 및 이상 교육 수혜 수는 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그림 II-6>). 각종 교육 수혜 인구 분포는 상술한 바와 같이 차이가 있고, 이는 중국 인적 자원의 소양이 낙후한 원인이 되고 있다.

<표 III-5> 2000년 2015년(예측) 수입별 세계 노동력 인구 수 및 비중

수입별	노동력공급/백만명		세계총수점유비율 %		15~64세 인구비율 %	
	2000	2015	2000	2015	2000	2015
저수입국가	1405	1932	36.7	40.7	58.6	62.4
중간수입국가	1766	2105	46.1	44.3	66.0	69.3
고수입국가	587	612	15.3	12.9	66.9	65.9
발전중국가	2920	3781	76.3	79.6	62.2	65.5
인구 1억명 초과국가의 1인당 평균 GDP 순위						
미국	187	215	4.9	4.5	66.0	66.9
일본	87	78	2.3	1.6	68.1	60.9
러시아	101	97	2.6	2.0	69.5	72.6
브라질	113	138	2.9	2.9	66.1	68.4
중국	871	1006	22.8	21.2	68.3	71.3
인도네시아	137	172	3.6	3.6	64.4	68.9
인도	621	821	16.2	17.3	61.5	66.7
파키스탄	77	118	2.0	2.5	54.5	57.6
방글라데시	80	116	2.1	2.4	58.2	63.4
나이지리아	59	91	1.5	1.9	51.9	55.3
전세계	3828	4749	100.0	100.0	63.2	65.9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2002*, pp. 162-165, pp. 191-193.

<그림 III-4> 1999년 4개국의 25~64세 인구 각종 교육수준구성 비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p.43.

(5) 고등교육 수혜 인구 비율이 여전히 매우 적다

제 2, 3, 4, 5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고등교육 수혜 인구 비율이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으며, 2000년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고등교육 수혜 인구 비율은 4.6%에 이르렀다. 이는 1970년 세계 평균 수준에 해당하고, 개발 국가의 평균 수준에 비하여 10년이나 낙후한 상황이며, 선진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하여 5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표 III-6>).

<표 III-6> 15세 이상 인구의 고등교육 수혜자 수 국제비교(1960~2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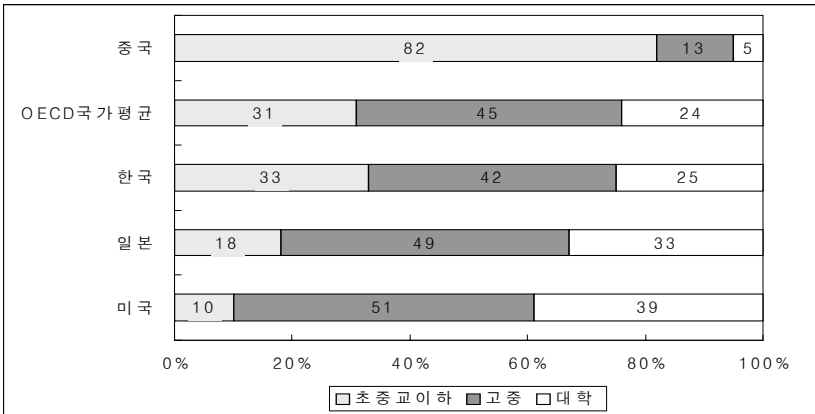
	1960	1970	1980	1990	2000
세계(109개국)	3.3	5.0	7.5	10.3	12.6
발전중 국가(73개국)	0.8	1.7	3.1	4.6	6.5
발전국가(23개국)	6.7	9.9	15.8	22.4	28.1
개발도상국	3.8	6.3	7.7	11.2	13.9
동아시아/태평양(10개국)	1.6	2.7	5.0	7.4	11.7
중국	0.70 (1964)		0.93 (1982)	1.95	4.60

자료: Robert J. Barro, Jong-Wha Lee: *International Data on Educational Attainment Updates and Implications 2000*, p. 29.

(6) 인적자원 소양 제고의 ‘관건’이 되는 고교 졸업 인구 비중이 낮다

현재 중국의 인적자원이 양적으로 많으나 질적으로 낮은 문제는 중등 및 고등교육 수혜 인구 비율이 비교적 낮은 데 있다. 2000년 제 5차 인구 조사에 의하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고교 및 이상의 교육 수혜자 비율이 18.96%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고교 및 중등 전업 학력인구 비율이 14.36%이다. 선진 국가 및 신흥 공업국가의 인구 가운데 고교 및 그 이상의 문화 수준과 비교할 때, 1999년 OECD 국가 25-64세 인구 가운데 고교 및 그 이상의 교육 수혜자는 평균 69%에 이르며, 그 가운데, 고교 교육 수혜 비율은 45%이고,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 국가는 고교 교육 수혜의 비율이 50% 정도이며,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III-5>).

<그림 III-5> 중국과 OECD주요국가의 노동력 교육수준 구성 비교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p. 44.

위의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1990년대 중국 직업교육의 학생 모집에 있어, 명백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고, 직업교육 규모의 감소와 일반 고교 규

모의 급속한 성장에 상호 영향을 끼쳤다. 2001년에 중국 중학교 졸업생의 진학률이 52.6%가 되었고, 이를 지역별 분포로 볼 때, 동부·중부지역 및 서부지역 중학교 졸업생 진학률은 각각 56.7%, 47.3% 및 55.7%이다. 중부지역의 일부 인구인 대도시의 중학교 졸업생 진학률은 여전히 45% 정도였고, 이는 중국 고교 단계 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50% 정도의 중학교 졸업생 진학률은 매년 절반의 중학교 졸업생이 진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향후 취업 및 가정에서 취업을 기다리는 것으로, 많은 중학교 및 이하 교육 수혜 근로자가 중국 인적 자원의 전체 소양을 향상시키는 데 불리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1982년 제 3차 인구조사 및 2000년 제 5차 인구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최근 20년 이래 중국 15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전문대학 졸업 및 이상의 교육 수혜 근로자 비율은 0.9%에서 4.6%에 이르고, 4/100 넘게 증가하였고,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다. 따라서 고교 교육 수혜 인구 비율이 완만하게 증가한 것은 중국 인적 자원의 전체 수준이 비교적 낮은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이고, 이는 중국의 인적 자원 소양 향상을 위한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7) 선진 국가에 비해 대중의 과학 수준이 명백하게 낙후하다

중국과학기술협회의 「2001년 중국 대중과학 소양 조사 보고」에서, 2001년 중국은 기본 과학 기술 소양의 비율은 1.4% 정도 구비하고 있고, 그 가운데 대중이 이해하고 있는 기본 과학 지식은 5.1%이며, 기본적으로 과학과 사회의 관계는 14.1%로 나타난다. 1990년대 초 이미 유럽 국가의 대중이 기본 과학 소양 비중은 5%, 미국은 12%에 이르고 있음을 보아 중국 대중의 기본 과학 소양 수준은 선진 국가에 비해 명백하게 낙후하다. 이처럼 낮은 문화적 소양의 인구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은 현대화 건설 진행 및 지식 경제 도전을 받아들여야 함과 동시에 중국 인구가 방대하여, 2000년 노동 적령 인구가 8.7억 명에 이르며, 교육 투자 및 인적 자본 투입이 단기간 내 매우 부족함으로 장차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

이 증가하고 있다.

(8) 노동 문화 구조의 중심이 낮고, 중·고급 인재가 부족하다.

제 5차 인구조사에 근거하여, 2000년 중국의 25-64세 근로자 가운데 고교 및 이상의 학력 소지자 비율은 18.0%이고, 이는 1999년 OECD국가의 25-64세 노동력 평균치인 69%에 비하면 3배의 차이가 있다. 고등교육 학력 소지자와 비교할 때, 중국은 2000년에 5.2%에 불과하나 1999년 OECD국가의 평균치는 24%와는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중국 25-64세 근로자의 평균 교육 수혜 연한을 OECD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1999년 미국은 이미 13.17년이고, 영국은 12.86년, 일본 12.78년, 한국은 11.50년인데, 중국은 7.99년에 불과하다(<표 III-7>).

<표 III-7> 1999년 OECD국가에서 25~64세 노동력
평균 교육수준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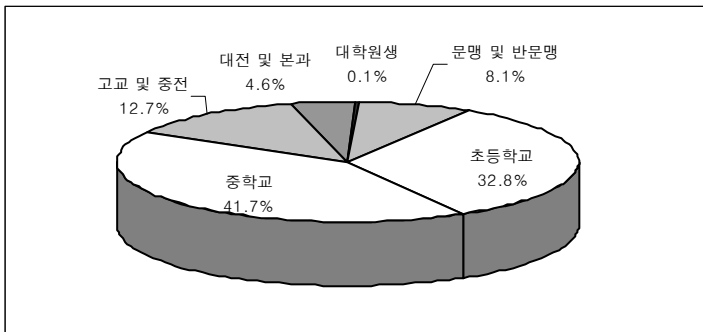
국 가	고등학생이상	대학생	평균교육연한/년
29개 OECD 국가평균	69	24	11.67
중 국(2000년)	18	5	7.99
미 국	90	39	13.17
영 국	88	28	12.85
캐나다	84	43	13.16
독 일	85	26	12.58
일 본	82	33	12.78
한 국	67	25	11.50
오스트레일리아	63	30	12.09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p. 44.

(9) 근로자들은 중학 및 이하의 문화 정도이고, 고급 인재가 부족하다.

2000년 제 5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2000년 중국 근로자는 여전히 중학 및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근로자 위주로, 75%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33%는 초등교육을 받았고, 문맹은 8%나 되며, 고교 및 중등직업 기술 교육을 받은 자는 12.7%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자는 4.7%에 불과하다(<그림 III-6>). 고등교육 및 고급 중등교육을 받은 근로자 비율이 17.3%로 근로자의 지식 및 기능의 수요가 현대 경제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실제 고급 전문가 및 숙련공이 매우 결핍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식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영향은 장차 점점 더 커질 것이다. 2000년 중국 근로자 가운데 대학 본과 및 대학원생 학력 소지자인 고급 인재의 비중은 1.38%에 불과하고, 총 인원은 1,000만 명도 되지 않는다. 중국의 7억이나 되는 방대한 근로자를 볼 때 고급 인재의 심각한 부족 현상은 산업 구조의 승급 및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적응하기 어렵다. ‘연합국개발계획국’의 2001년 인문 발전 보고에 의하면, 1987-1997년 중국의 매 10만 명 인구 가운데 연구 개발(R&D)과학자 및 엔지니어는 454명에 불과하나, 일본은 4,909명, 미국 3,587명, 한국 2,193명에 비하면, 중국은 5-10배 정도의 격차가 있다.

<그림 III-6> 2000년 중국 노동력 교육수준 구성도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나. 산업인력자원의 구조적 모순

(1) 노동력의 산업구조의 불균형

중국 취업구조의 총체적 수준 및 현대적 취업구조의 격차가 크며, 1차 산업의 취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3차 산업의 취업 비중이 낮게 증가하는 산업 노동 구조의 변화가 완만한 취업 구조를 이루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중국은 후진국가의 일반적인 산업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인구가 많고, 제 1차 산업의 비중이 선진 국가에 비하여 명백하게 높으나,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등의 나라보다는 낮은 편이다. 선진 국가를 볼 때, 제 1차 산업비중은 일반적으로 5%이하이고, 제 2차 산업은 대체로 20-30% 정도이고, 서비스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제 3차 산업의 비중은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장기적으로 공업화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여, 제 2차 산업이 기형적으로 발달하였고, 산업구조 조정이 불충분하며, 그 비중이 편파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제 3차 산업의 발전이 억제되어, 그 비중이 편파적으로 낮고, 중국의 3차 산업 비중을 선진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격차가 크며, 심지어는 개발도상국가와 비교하여도 심한 격차가 난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제 1차 산업 취업 구조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 정도가 되었다. 2001년 중국의 제 3차 산업 취업 구조의 비율은 50.0:22.3:27.7이 되었으며, 선진국, 신흥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도 중국의 제 1차 산업 근로자의 비중은 명백하게 높게 편중되어 있고, 제 3차 산업 근로자의 비중은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제 3차 산업 근로자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60%에서 75%에 이른다(1977년 3차 산업 근로자의 비중은 한국이 11:31:58, 싱가포르 0.3:30.7:70이고, 일본은 5:33:62, 미국은 3:24:73). 브라질,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등의 개발도상국의 제 3차 산업 근로자 비중은 각각 54.3%, 44.1%, 39.8%, 34.6%로 중국보다 명백하게 높다. 1인당 평균 GDP가 중국 보다 낮은 농업 국가와 비교하면, 예를 들어, 인도, 파키스탄 및 이집트는 제 1차 산업 비중이 높게 편중되어 있다(<표 III-8>).

<표 III-8> 각국 1인당 GDP, 산업구조와 산업별 종업원 분포구성

국별	GDP/PPP\$	산업구조비중(%)			산업별 종업원 분포구조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미국	31910	1.7	26.2	72.0	2.7	24.1	73.1
캐나다	25440	2.4	28.1	69.4	3.9	23.2	73.0
일본	25170	1.7	36.0	62.3	5.3	33.1	61.6
싱가포르	22310	0.2	35.8	64.1	8.7	23.9	67.5
한국	15530	5.0	43.5	51.5	11.0	31.3	57.7
멕시코	8070	5.0	28.2	66.8	24.2	22.4	53.4
브라질	6840	8.6	30.6	60.8	26.1a	19.6a	54.3a
중국	3550	15.2	51.1	33.6	50.0	22.3	27.7
이집트	3460	17.4	31.5	51.0	34.0a	21.9a	44.1a
인도	2230	27.7	26.3	46.0	41.2	19.0	39.8
파키스탄	1860	27.2	23.5	49.4	46.8a	18.5a	34.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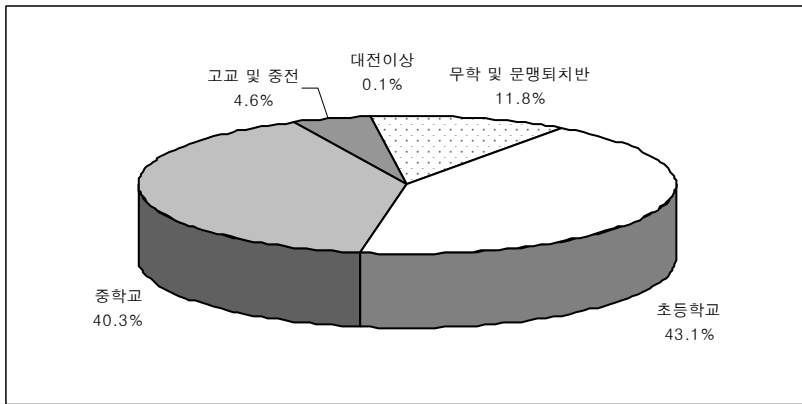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2001), 세계발전지표, 중국재정경제출판사. 국제통계연감(2001).

(2) 제 1차 산업 근로자는 초등학교 정도의 문화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제 5차 인구조사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중국 농·목축업 종사자의 평균 교육 수혜 연한은 6.79년이고, 중학교 및 이하 교육 수준의 종사자 비율은 95%를 초과하였고, 그 가운데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수료한 비율은 43.1%이고, 중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종사자는 40.3%를 차지하고, 이들의 합은 83.4%이며, 비문맹반과 취학을 한 적이 없는 종사자도 11.8%이다(<그림 III-7>). 예컨대, 중국 제1차 산업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을 지닌 근로자 위주이고, 아울러 상당수의 문맹인구도 있다는 것이다. 농업 중심의 경제 발전의 기초에서 산업화의 수요에 의하여 간단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높은 소양을 지닌, 전문 기능인을 동일하게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농·목업 축의 종사자 가운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은 0.14%에 불과하고, 매 1,000명의 농·목축업 종사자 가운데 중등전업기

술자는 2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농·목축업 종사자의 전체적 소양이 낮은 것을 일본과 비교할 때 그 격차가 매우 크다.¹⁸ 2001년 <세계발전지표>에서 노동 생산률이 편중되게 낮은 것은 중국의 국가 상황으로 볼 때, 1997-1999년 기간 동안 중국 농·목축업 생산율은 \$316에 불과하며, 이는 일본의 1.03%, 한국의 2.58%, 브라질의 7.35%, 인도의 80%정도에 해당한다.

<그림 III-7> 2000년 중국 농림, 목축 및 어업 종사자의 교육수준 구성도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¹⁸ 중국 농·목축업 종사자의 문화 소양을 일본과 비교할 때, 일본의 농·목축업 종사자의 전체 문화 구조의 중심은 중국보다 한 단계 높게 상승되어 있다. 1인당 평균 교육연한이 중국에 비하여 4년이나 많았다. 일본 농·목축업 종사자는 고교 및 중학 졸업자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중국 농·목축업 종사자 가운데 중학교 및 이하 교육 수혜자는 95%를 초과하였다. 고급 인재의 비율은 그 격차가 심하여, 일본 목축업 종사자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종사자의 비율은 8.2%이나, 중국은 0.1%에 불과하다. 중국 농·목축업 종사자의 평균 교육 연한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경이나, 기타 1인당 평균 교육 연한에 있어서는 일본과는 여전히 2.7년의 차이가 있었고, 고등교육 수혜자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중국 각 지역에서 농·목축업 종사자의 교육 연한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장이고, 1인 평균 교육 수혜 연한은 2년이며, 취학해 본 적이 없는 종사자와 탈 문맹반 종사자의 비율은 68%나 되었다.

<표 III-9> 중·일 양국 농림, 목축, 어업 종사자의 교육정도 비교
(단위: %)

	평균교육 연한/년	구성	대학본과 이상	전문대	고교	중학교	초등 및 이하
일본	10.67	100	3.4	4.8	41.8	49.3	0.7
중국	6.79	100	0.02	0.1	4.6	40.3	55.0
중국 : 북경	7.93	100	0.3	0.4	10.1	55.2	34.1
중국 : 저장	2.03	100	0.01	0.05	0.3	2.1	97.6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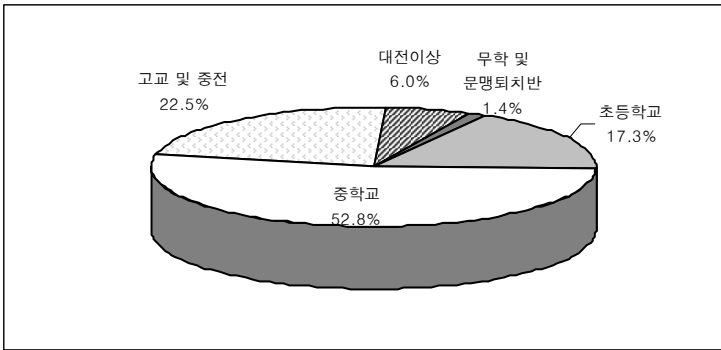
(3) 제 2차 산업 근로자는 중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을 지니고 있다

제 5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제조업, 건축업 위주의 제 2차 산업 근로자의 평균 교육연한은 9.44년으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 중학교 및 이하교육을 이수한 자는 71.6%에 이르고, 그 가운데 중학교 교육 수준의 근로자는 50%를 초과한다. 전문대학 및 이상의 교육 수혜 근로자의 비율은 6.0%에 불과하다(<그림 III-8>). 제 2차 산업인 제조업, 건축업 및 전력, 가스, 열, 수산업 근로자의 문화 소양을 일본과 비교하는 가운데 발견된 사실은 중국 제조업과 건축업 종사자의 평균 교육연한은 일본의 동등한 업종과 3년 정도가 차이가 있고, 전력, 가스, 열, 수산업 종사자의 평균 교육연한은 일본과 2년 정도 격차가 있었다. 중국의 전문대학 및 그 이상의 교육 수혜 근로자의 비율을 일본과 비교할 때 더욱 크게 격차가 났다. 일본 제조업 및 건축업의 지표에 있어 중국에 비하여 5배 정도가 있었고, 전력·가스·열·수산업의 지표는 중국의 2배에 해당하였다¹⁹(<그림 III-9>). 중국 제 2차 산업 노동력의 전체 문화 소양

¹⁹ 중국 산업 근로자의 문화 소양과 선진 국가와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제조업을 실례로, 일본 제조업 근로자의 문화 소양과 비교하면 선진 국가의 산업근로자 문화 구조가 중국보다 한 단계 상승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01년 일본 제조업 근로자는 고교 졸업 정도로서 53%를 점유하고 있고, 중학교 졸업 정도의 근로자 비중은 18%로서, 일본 제조업 근로자 가운데 고교 및 중학교 교육 정도의 비중이 중국 제조업 근로자 가운데 중학 및 초등학교와 그 이하의 교육 정도 비중과 일치하며, 고학력 소지자의 비중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본 제조업 근로자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28%에 이르는 반면에 중국

은 현재 중국의 제조 기술 진보 및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림 III-8> 2000년 중국 제 2차 산업 종사자 교육 수준 구성도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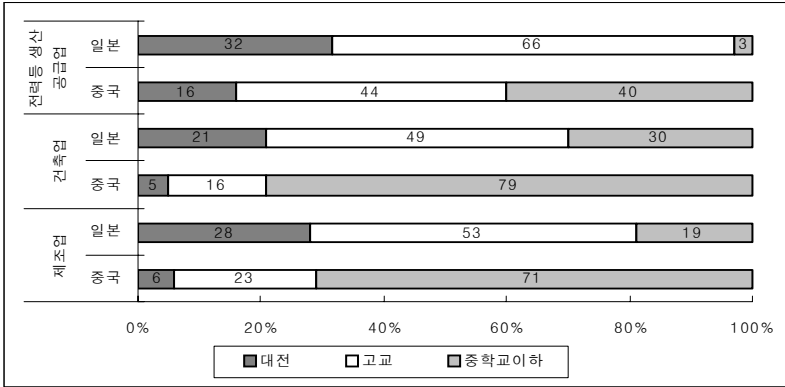
<표 III-10> 2000년 중·일 양국 제조업 종사자의 교육수준 비교 (단위: %)

	평균교육 연한/년	구성	대학본과 이상	전문대	고교	중학교	초등 및 이하
일본	12.33	100	18.6	9.7	52.8	18.3	0.6
중국	9.47	100	1.6	4.2	22.8	53.6	17.9
북경	10.71	100	6.0	8.2	32.3	46.4	7.2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은 5.8%에 불과하다. 중국 각 지역에서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한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경인데, 1인당 평균 교육 연한이 일본과 여전히 1.6년이나 차이가 난다. 그 가운데 대학 본과 및 그 이상 교육을 받은 고학력 인재의 비율도 차이가 크며, 북경이 6%인 데 비하여 일본은 3배가 넘는 18.6%이다. 중국 산업 근로자의 전체 소양과 선진 국가의 격차가 있으며, 현재 노동 생산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편중되어 있다. <세계발전지표21>에 의하면, 1995-1999년 기간에 중국 제조업 노동 생산율은 2885\$에 불과하다. 이를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의 3.1%, 미국의 3.5%, 독일의 3.6%, 한국의 7.1%에 불과하다.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미국은 31%, 일본은 29%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은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서 한 기업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림 III-9〉 중·일의 제조·건축·전력 등 생산 공급업
종사자 교육수준 구성비교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4) 제 3차 산업 근로자 전체 문화 수준이 현대 산업 구조의 요구에 적응하기 어렵다.

제 5차 인구조사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중국 금융, 보험 종사자의 평균 교육 연한이 13.19년에 이르고, 대학 1학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3차 산업 종사자의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분야이다. 금융보험 종사자는 고교 및 전문대학 수준의 근로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비율은 3/4 정도로 중학교 및 이하 교육 수혜자는 13.9%에 이른다. 또한 본과 및 이상의 교육 수혜자는 10.86%를 점유하고, 대학원 정도의 고학력 소지자는 매 100명 종사자 가운데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0년 부동산 종사자의 평균 교육연한은 11.75년이고, 고교 졸업 정도의 교육 수준에 근접한다. 부동산 종사자는 중학 및 고교 수준의 교육 수혜자가 주류를 이루고, 비율은 2/3을 점유하며, 초등 및 이하 교육 수혜자는 6.9%이고, 전문대학 및 이상의 교육 수혜자는 26.89%이며, 그 가운데 대학 본과 및 이상 교육 수혜 종사자 비율은 7.44%이다(〈그림 II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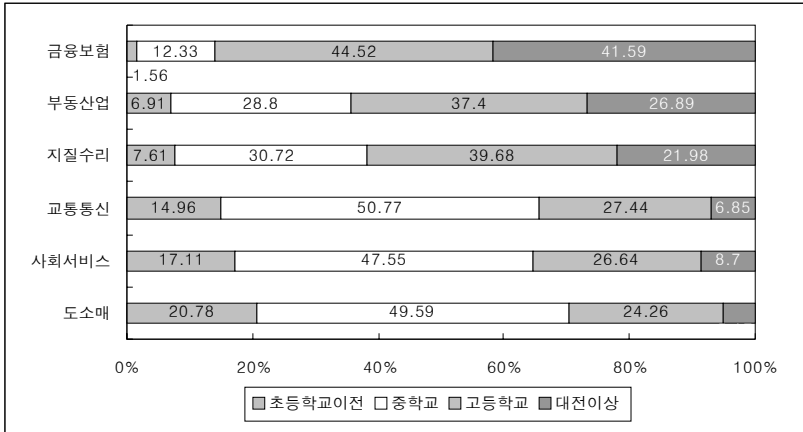
일본과 비교하면, 중국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평균 교육 연한이 일본과는 0.8년의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 이상의 종사자가

고교 및 이상의 교육 수준을 소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하며, 일본은 5.6%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 비율로 보면, 전문대학 및 이상 교육 수혜 근로자 비율의 차이는 16.6/100에 이르고, 대학 본과 및 이상 교육을 받은 근로자 비율은 중국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일본은 36.65%로 일본은 중국의 3.7배나 된다.

지질·수리·관리업에 있어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의 교육 수혜 근로자의 비율은 21.98%를 점유하고, 중학 및 고교 교육 수혜자 비율은 70%를 초과하며, 근로자 평균 교육 연한은 11.46년이고, 고교 졸업 정도에 해당한다. 교통운송·우편통신업, 도매무역, 요식업 및 사회 서비스업에 종사자의 문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들 종사자의 교육 연한은 기본적으로 9-10년 사이이며, 중학교 교육 정도의 근로자들이 대부분이고, 이들 3개 직종의 종사자는 중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이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교통운송, 우편 통신업에 전문대학 및 그 이상의 교육 수혜율은 6.85% 정도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 정도의 근로자 비율은 65% 정도이다. 도매 및 무역, 요식업에 종사하는 전문대학 및 그 이상의 교육 수준 근로자는 5.17%이고, 중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을 지닌 근로자 비율은 50%에 근접한다. 사회서비스업 가운데 전문대학 및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8.70%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 정도의 근로자 비율은 60%를 초과한다.

일본과 비교하며 보면, 중국의 교통운송, 도매무역, 요식업 및 사회 서비스업종의 평균 교육 연한을 일본과 비교하면 2-3.5년의 차이가 있다. 이들 3가지 업종이 각각 30-36%의 근로자가 중학교 및 그 이하의 교육 수준을 지녔으나 일본은 이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등교육의 인재 비율로 볼 때, 중국은 상술한 3개 업종에서 전문대학 및 그 이상의 교육 수혜 근로자 비율이 일본과 3-6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 본과 및 그 이상의 교육 수혜 근로자 비율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며, 중국은 1-3%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과는 8-17배의 격차가 있다.

<그림 III-10> 2000년 각 직업별 종사자 교육수준비중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표 III-11> 중·일 양국 제 3차 산업 중 분야별 교육수준 비교

	평균교육연한/년		대학본과이상 종사자비중(%)		전문대이상 종사자비중(%)		고등학교 이상 종사자비중(%)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중국	일본
금융·보험·부동산업	12.79	13.58	9.90	36.65	37.45	54.18	79.96	94.42
교통통신업	9.80	12.08	1.75	13.88	6.85	22.25	34.29	81.34
도·소매 및 요식업	9.32	12.57	1.13	20.10	5.17	34.04	29.63	83.65
서비스업	9.75	13.24	2.54	29.02	8.70	51.62	35.34	88.67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5) 3차 산업이 전통적 서비스업 위주이며, 지식 밀집형 서비스업 비중이 낮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제 3차 산업 내부 취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업종으로 기타 업종, 도매 및 소매무역 요식업, 사회 서비스업 등이 있다. 그리고 지질수리관리업, 교통통신업, 위생, 교육, 과학연구 및 기관 등의 지식 밀집형 서비스업 취업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금융보

협 및 부동산업의 취업 비중의 변동 폭이 적어졌다. 2000년 제 3차 산업 취업 구조 가운데, 5%를 초과하는 업종으로 기타 업종, 도매 및 소매 무역, 요식업, 교통통신업, 교육, 기관 및 사회 서비스업이 있고, 과학연구,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등의 지식 밀집형 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III-12>). 총체적으로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제 3차 산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을 가져왔고, 일부 신흥 서비스업종이 개발되어, 현대 경제 발전에 상응되는 각종 서비스업이 이미 구성되어, 비교적 완전한 제3차 산업의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중국의 제 3차 산업 내부 구조변화가 크지 않기에, 전통적인 제 3차 산업은 여전히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표 III-12> 1978~2000 중국 제 3차 산업 내부 취업 구조조정 상황
(단위: %)

	1978년	1990년	2000년	1978-2000년 기간 증가폭
합계	100.00	100.00	100.00	
지질 조사 및 수리 관리업	3.64	1.88	0.64	-3.00
교통통신·저장 및 우정통신업	15.34	14.91	11.83	-3.51
도·소매 및 무역·요식업	23.31	27.04	27.33	4.02
금융보험업	1.55	2.08	1.91	0.36
부동산업	0.63	0.42	0.59	-0.04
사회서비스업	3.66	5.66	5.37	1.71
위생·체육 및 사회복지업	7.42	5.10	2.85	-4.57
교육·문화예술 및 광고·영상·영화업	22.35	13.87	9.13	-13.22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업	1.88	1.65	1.02	-0.86
국가기관·사회단체	9.55	10.28	6.44	-3.11
기타산업	10.65	17.12	32.91	22.26

자료: 중국통계연감(2002), 중국통계출판사.

(6) 일부 생산 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이 낮다

선진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중국과 비교할 때, 중국의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 도소매 무역 요식업, 교통 통신업 및 사회 서비스업의 취업 비중은 현저히 낮다. 더욱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생산 활동 서비스 업종의 취업 비중은 기타 국가와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표 III-13>).

<표 III-13> 제 3차 산업 관련산업 종사자의 전체 산업종사자 비중 국제비교

(단위: %)

	중국 (2000)	미국 (1999)	프랑스 (1990)	말레이시아 (1999)	브라질 (1999)	필리핀 (199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교통통신업	2.85	6.06	6.27	4.75	3.93	7.09
도·소매 및 무역·요식업	6.59	20.66	16.74	18.79	13.42	16.09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0.60	12.03	10.20	5.27	1.88	2.56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22	35.41	31.62	21.10	37.28	20.18

자료: 국제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

다. 불합리한 직업 구조

(1) 불합리한 직업구조, 전문 기능을 요구하는 고도의 지식 밀집형 직업 종사자의 비중이 낮다

1982년과 2000년의 전국 제 3, 5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중국 근로자의 직업 분포에 일련의 변화가 나타난다. 2000년 농목축 수리 생산 근로자의 비중이 1982년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감소하였고, 7.5/100 감소하였다. 상업 및 관리직 종사자의 비중이 대폭적으로 상승하여, 1982년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5.17/100과 1.80/100의 증가폭을 나타내었다. 전문기술자의 비중 또한 0.63/100 상승하였으며, 완만한 증가를 나타냈다. 농목축 수리

생산 근로자 및 생산, 운송설비기술자 및 엔지니어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 두 가지의 합계 비중은 여전히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농·임·목축·어업 생산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식밀집형 직업(관리자, 전문기술자, 사무직 등의 직업)의 근로자 비중이 명백하게 낮다. 2000년 중국 전문기술자는 재직 총 인원수의 비중이 있어 5.70%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1/3 정도에 해당하고, 일본과 오스트리아의 1/2에 해당한다. 2000년 중국 사무직 및 유관 종사자의 비중은 3.10%에 불과하고, 이는 일본의 1/6, 캐나다의 1/5, 미국과 한국의 1/4에 해당한다. 『중국국제경쟁력발전보고(2001년)』에 의하면, 1999년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지표 득점에 있어 중국은 4.20이나, 같은 시기에 미국은 7.43이고, 일본은 7.03이며, 한국은 6.28이고, 브라질은 7.54, 인도는 8.53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구 및 개발 인원의 비율 지표 득점에 있어, 중국은 0.25이고, 동 시기에 미국은 2.96, 일본은 4.65, 한국은 1.97이다(<표 III-14>).

<표 III-14> 각급 직업 종사자 비중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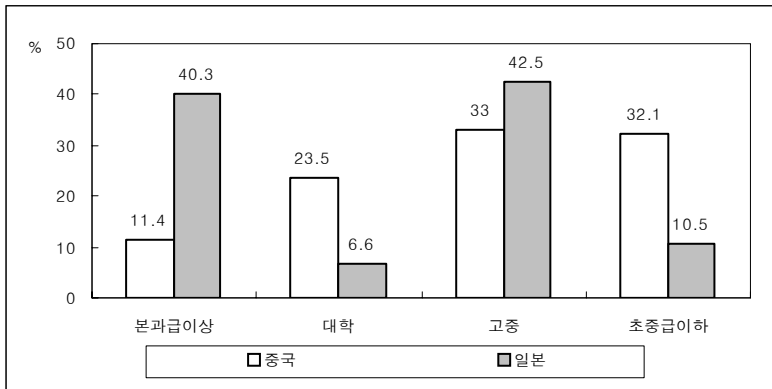
	중국		미국 (1999)	일본 (1999)	한국 (1990)	캐나다 (1990)	호주 (1990)
	(1982)	(2000)					
관리자	1.56	1.67	14.67	3.33	10.48	12.93	12.67
전문기술인	5.07	5.70	18.91	13.09	7.23	17.23	11.02
사무직원	1.30	3.10	13.82	19.07	13.01	16.70	5.85
상업서비스직원	4.01	9.18	25.50	24.59	25.68	22.84	32.47
농림·목축·어업생산원	71.98	64.46	2.57	5.14	17.78	4.25	14.90
생산·운송설비조작 및 공인	15.99	15.83	24.54	33.58	34.82	26.05	22.80
기타노동자	0.09	0.07	0.00	0.60	0.00	0.00	0.00

자료: 국제통계연감(2001), 중국통계출판사.

(2) 관리자 및 전문 기술자의 전체 소양이 선진국과 현저한 격차가 있다

2000년 중국 당 기업 단위 책임자의 평균 교육 수혜 연한이 12.24년에 이르고, 중학교 및 이하 교육, 고교, 전문대학 및 그 이상 교육 수혜자의 비율이 각각 1/3 정도이다. 이는 일본의 관리직 전체 평균 교육 연한과 비교할 때, 1인당 교육 연한이 1년 정도 낙후하다. 동시에 고급 관리직 비율의 차이가 비교적 크고, 대학 본과 및 그 이상 학력의 관리자 비율이 중국은 11.4%에 불과하다. 일본은 40.3%인 데 비하여 그 차이가 대략 4배 정도이다(<그림 III-11>). 이처럼 낙후한 중국 관리직의 소양이 중국의 경제 및 정부 직능에 있어 진일보한 시대적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상당히 요원하다.

<그림 III-11> 중국 관리자급 교육수준 구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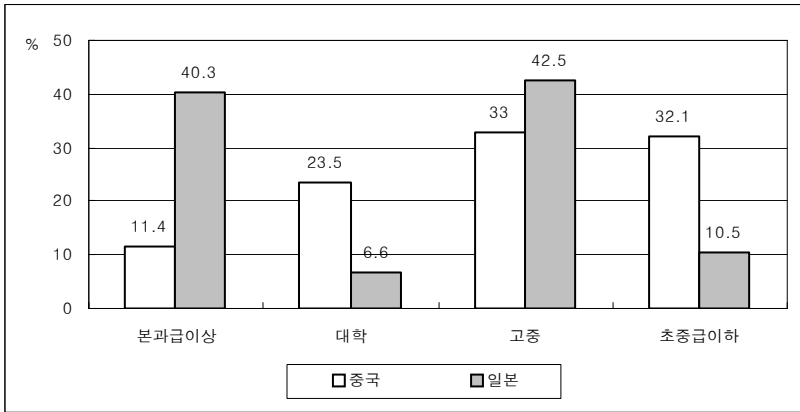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2000년 중국 전문 기술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한은 13.05년이고, 이는 대학 1학년 정도의 수준이다. 이들 가운데 전문대학 및 이상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은 60%에 근접하고, 대학원생 학력을 지닌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한다. 일본의 전문 기술 근로자와 비교할 때 일본은 이미 14.4%

에 이르고, 그 가운데 전문대학 및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이미 3/4을 초과하고, 대학 본과 학력 소지자의 비율이 50%에 이른다. 중국 전문 기술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한은 일본에 비하여 1.4년 정도 적고, 대학이상의 학력 소지자의 전문 기술자의 비율은 13.5%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III-12>). 이러한 전문 기술자의 소양이 지식경제 시대에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중국 인적 자원의 수요로 만족시키기 어렵고,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의 부단한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III-12> 중·일 전문기술인력의 교육수준 구성 비교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2000년 중국의 사무원 및 유관 직원의 평균 교육연한이 각각 12, 15년이지만, 전문대학 및 이상의 교육 수혜자 비율은 오히려 67.7%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중국의 당 기업 단위 책임자, 전문기술자와 사무원 및 유관 직원 등 이 세 직종의 문화 소양이 비교적 높아야 함에도, 이들 중 초등학교 및 이하 교육 수혜자는 여전히 2-7%정도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종사자의 비율은 30-40%에 이르기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데 매우 부적절하다.

2000년 중국 상업 서비스직 및 산업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한이 각각

9.25년과 9.08년 인 것을 1990년에 비하여 0.96년과 0.50년이 상승되었다. 이는 6대 직종의 종사자 평균 교육 연한의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상업 서비스직과 산업 근로자는 여전히 중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 정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수혜자의 비중은 2-4% 정도에 이른다(<표 III-15>). 이러한 근로자의 소양이 중국의 산업 구조의 승급 및 부단히 상승하는 제조업 노동생산율의 수요에 만족시키기 어렵다.

<표 III-15> 2000년 중국 관리자, 전문기술자, 사무직, 상업서비스, 및 공장근로자 교육수준구성

(단위: %)

	평균교육 연한/년	무학자 및 문맹퇴치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국가기관·당 및 단체조직·기업사업 단체 책임자	12.24	0.28	5.74	26.10	32.95	34.93
전문기술자	13.05	0.15	2.06	14.14	43.40	40.26
사무직 및 관련자	13.15	0.82	5.74	23.24	37.85	32.34
상업·서비스 종사자	9.25	2.65	18.09	50.33	24.90	4.03
생산·운송 설비 조작자 및 관련자	9.08	1.46	18.56	57.28	20.46	2.23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라. 도시와 농촌 노동력 인구의 문화 소양 차이가 크다.

(1) 도시·농촌 문맹률의 차이가 존재하며, 3/4이상의 문맹인구가 농촌에 분포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문맹인구에 있어, 15세 및 이상 인구의 비율을 비교하면, 최근 20년 사이에 중국의 도시 농촌 성인 문맹률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그 차이는 여전히 6/100이상이다. 즉, 문맹·반문맹 인구의 분포를 볼 때, 도시 농촌 인구간의 문화 소양에 있어 명백한 차이

가 있다. 2000년 중국 15세 및 이상의 인구 가운데 8,699.2만 명의 문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 대도시 상주인구의 12.8%가 문맹이며, 중소도시 인구의 9.7%가 속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농촌인구가 77.5%로 점유하고 있다. 예컨대, 3/4를 초과하는 문맹·반문맹 농촌에 있는 것으로, 이는 향후 문맹 해소 작업의 중점 및 난제가 모두 광활하게 분산되어 있는 농촌 인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도시·농촌의 문맹률 차이는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문화 소양의 차이를 나타내며, 농촌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 농촌 노동 생산률의 제고, 농업 산업화 및 현대화 건설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표 III-16> 도·농 문맹률의 변동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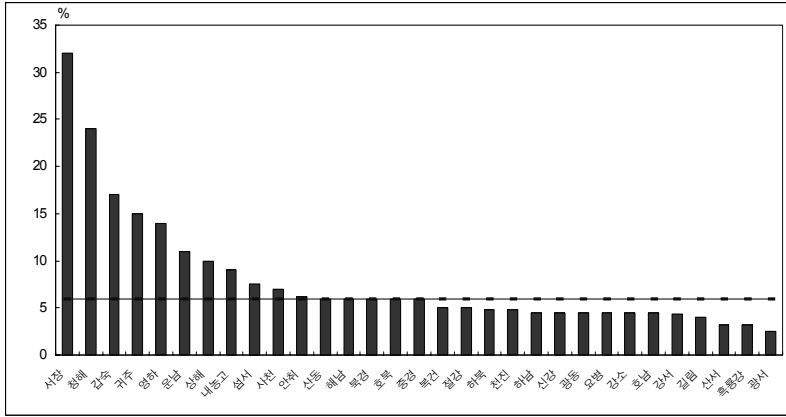
	도시문맹률	농촌문맹률	도·농간 문맹률 차이
1982	16.43	34.98	18.55
1990	11.97	26.23	14.26
2000	5.22	11.55	6.33

자료: 중국 제 3. 4. 5차 인구조사.

(2) 현저한 도시·농촌 지역의 문맹률 불균형

전국 31개 지역과 농촌 문맹률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80.22%에 이르고, 최대 차이는 29.03이다. 도시·농촌 문맹률의 차이에 있어 가장 큰 10개 지역 가운데 9개 지역은 서부 지역이며, 그 가운데 차이가 가장 큰 5개 지역으로 저장(31.51%), 청해(23.46%), 감숙(17.08%), 귀주(15.15%), 및 영하(13.42%)이다(<그림 III-13>).

<그림 III-13> 2000년 중국 각 지역 문맹률 차이 비교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자료.

(3) 도시·농촌 여성의 문맹률의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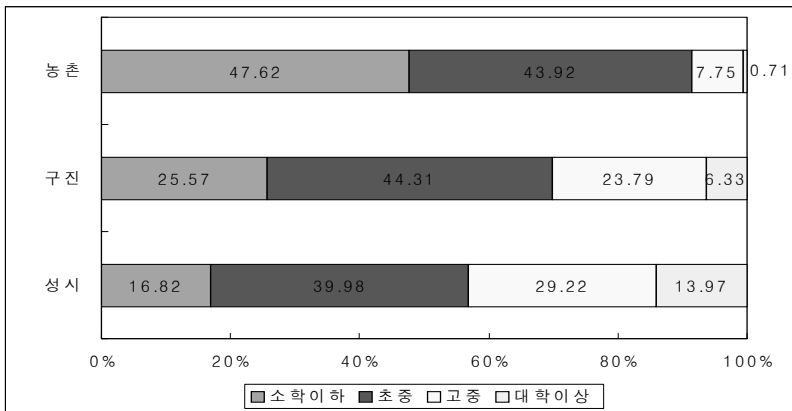
도시·농촌 문맹률의 차이 가운데, 도시·농촌 여성 문맹률의 차이가 남성에 비하여 명백하게 높게 나타난다. 전국 도시·농촌 여성 문맹률의 차이가 8.72/100에 이른다. 11개 지역의 도시·농촌 여성 문맹률의 차이가 10/100정도이고, 그 가운데 9개 지역은 서부 지역이다. 도시·농촌 여성 문맹률 차이의 상대 계수는 73.08%에 이르고, 가장 큰 차이는 26.27이다.

(4) 도시·농촌 인구의 전체 소양 차이가 크기에 도시화의 수요에 적응하기 어렵다.

2000년 농촌 노동인구(15-64세)의 평균 교육 연한은 7.33년으로 도시 인구의 10.20년에 비하여 2.87년이나 낮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인구 가운데 문화 계층의 다양한 분포의 차이가 있고, 농촌 노동력 인구 가운데 고교 이상의 교육 수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 교육 수혜자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15-64세 농촌 노동 인구 가운데 초등학교 및 이하의 교육수혜자는 47.62%

이고, 문맹인구는 8.74%이다. 농촌 노동 인구 가운데 전문대학 및 이상 교육 수혜자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는 도시에 비하여 13%나 낮은 것이다. 15-64세 인구 가운데 각종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이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 인구간의 현황을 보면, 전문대학 및 이상 교육 수혜 인구 비율이 20:9:1이고, 그 가운데 대학 본과 및 이상 교육 수혜 인구는 55:13:1이며, 고교 교육 수혜인구 비율은 4:3:1이고, 중학교 교육 수혜 인구 비율은 0.91:1.01:1이며, 초등학교 교육 수혜 인구는 0.37:0.55:1 (<그림 III-14>, <표 III-17>)이다. 이처럼 중국 도시·농촌 간 노동력의 교육 수준에 있어 명백하게 차이가 존재하고, 더욱이 중·고급 단계의 교육 수혜 인구 비율이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 현재 중국 도시 인적 자원이 기본적으로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 처해 있으나, 농촌 인적 자원은 중학 및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림 III-14> 2000년 중국 도시·농촌 15-64세 인구의 각종 교육 수혜 수준의 비중 비교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자료.

<표 III-17> 2000년 중국 도·농의 15~64세 인구 중 각종 교육 수혜 수준 인구 비중 및 평균 교육연한 상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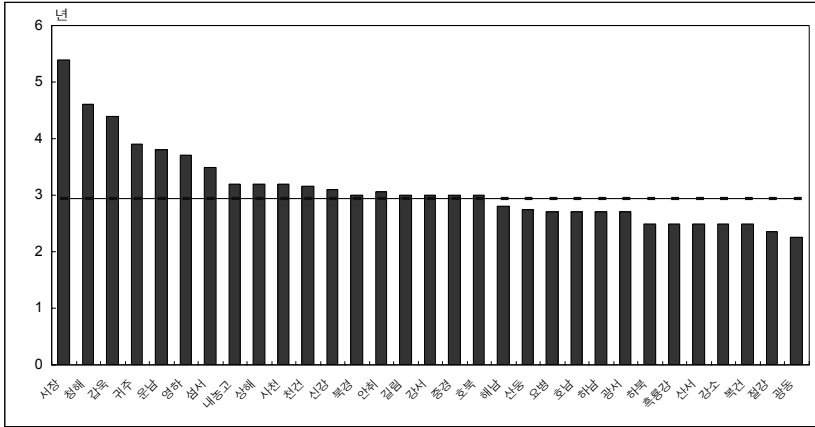
	무학 및 문맹·퇴치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이상	전문대 이상 및 대학본과 이상	평균교육 연한/년
도시	2.49	14.34	39.98	29.22	13.97	5.49	10.20
향·진	4.20	21.37	44.31	23.79	6.33	1.27	9.14
농촌	8.74	38.88	43.92	7.75	0.71	0.10	7.33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자료.

(5) 도시·농촌 인구의 문화 소양의 차이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불균형하다

전국 31개 성시자치구에서 7개 지역의 도시·농촌 15세 및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한의 차이가 3.5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격차가 4년을 초과하는 지역은 서장(5.39년), 청해(4.62년), 감숙(4.33년)이다. 각 지역의 15세 및 이상 인구의 각종 교육 수준의 분포 차이가 명백하고, 초등학교 이하 교육 수혜 인구 비율의 차이는 앞에서 10위인 이 지역은 예외 없이 중서부 지역이고, 그 가운데 차이가 가장 큰 5개 지역은 서장(50.1%), 청해(46.3%), 감숙(43.8%), 운남(43.6%)과 귀주(43.5%)이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 수혜 인구 비중이 가장 큰 5대 지역은 각각 북경(22.56%), 섬서(17.78%), 천진(16.07%), 신장(15.34%) 및 상해(14.14%)이다(<그림 III-15>).

<그림 III-15> 중국의 2000년 각 지역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도·농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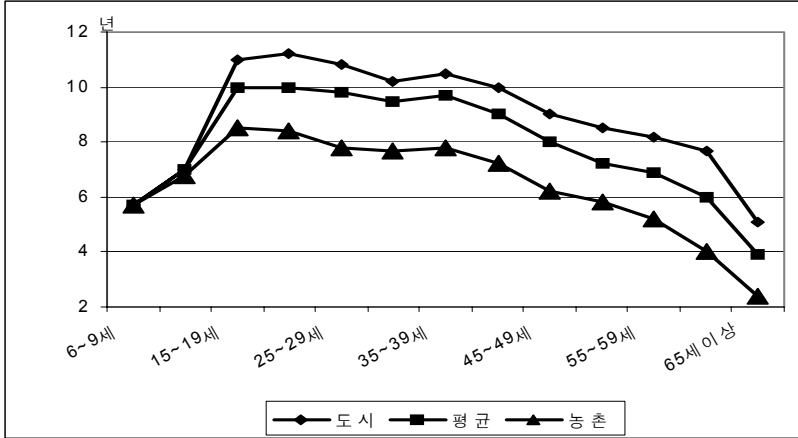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자료.

(6) 15세 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인구의 각 연령별 평균 교육연한의 차이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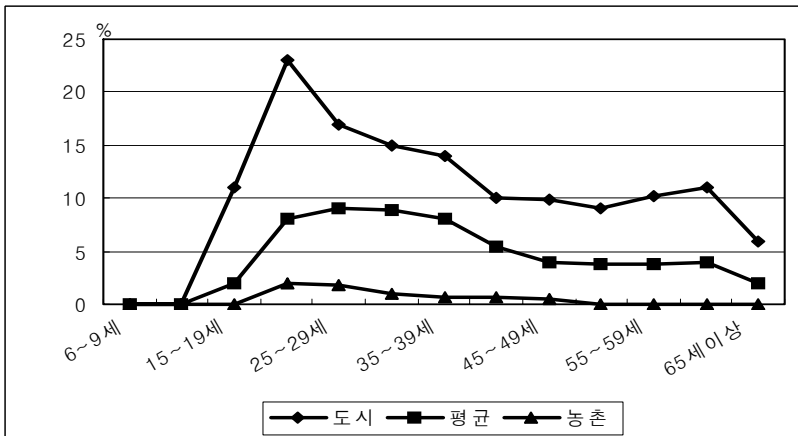
도시농촌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 차이로 볼 때, 15세 및 이상 인구의 각 연령별 평균 교육 연한의 차이는 계단식으로 나타나며, 대도시는 중소도시 보다 0.9-1.7년 높고, 중소도시는 농촌에 비하여 1.5-1.9년 높게 나타나고, 대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는 2.4-3.5년에 이른다. 각 연령 단계 인구의 3개 연령 단계의 차이가 가장 명백하며, 각각 2.93, 3.23, 3.46년이다 (<그림 III-16>). 격차의 원인은 여전히 각 연령 단계 각종 교육 수혜 인구 비중의 차이에 있어, 농촌 전문대학이상의 교육 수혜 인구의 비중이 대도시에 비하여 상당한 격차가 있다(<그림 III-17>).

<그림 III-16> 2000년 중국 도·농간 인구 평균 교육연한 비교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자료.

<그림 III-17> 2000년 중국 도·농 인구 중 전문대이상 교육 수준 인구 비중 비교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자료.

마. 지역 노동력 문화 소양의 불균형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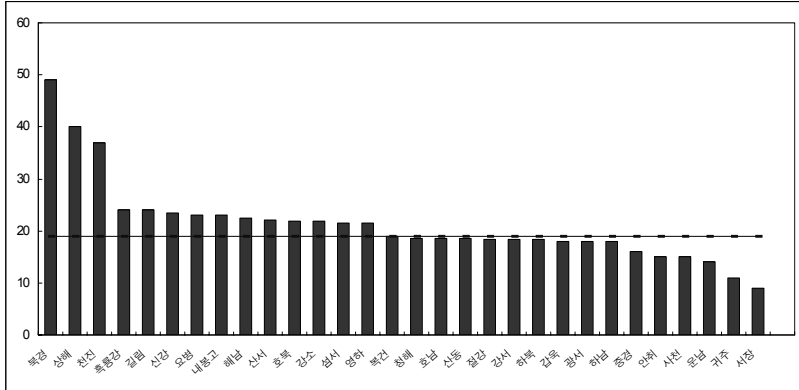
(1) 근로자 식자율의 지역별 차이가 크다.

전국 근로자의 식자율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경으로, 98.46%에 이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장으로 이곳의 지표는 42.55%에 불과하다. 그 다음은 칭해 70.06%, 귀주 77.05%, 감숙 77.47%, 영하 81.44%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전국 근로자의 평균 식자율인 10/100이상보다 낮다. 가장 양호한 북경과 가장 낮은 서장의 근로자의 식자율 수준 격차는 55/100이다.

(2) 노동력 평균 교육 연한의 지역별 차이가 크다.

2000년 중국 근로자의 평균 교육 연한이 9년을 초과하는 지역이 4개이다. 이들은 각각 북경, 상해, 천진, 요녕이며, 그 가운데 북경, 상해는 10년 이상이다. 또한 근로자의 평균 교육연한이 6년 정도인 지역은 4개가 있으며, 귀주, 칭해, 운남 및 감숙이다. 이들 지역은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교육 수준에 해당하고, 전국 평균에 비하여 1.4년 이상의 격차가 있고, 그 중에서도 서장은 3.23년에 불과하여, 이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그림 II-20>).

<그림 III-18> 2000년 중국 각 지역별 근로자의 고교이상 교육 수준 구성 분포도



자료: 중국 제 5차 인구조사 자료

(3) 중·고급 인재의 지역별 차이가 크다.

전국 근로자 가운데 고교 및 이상 교육 수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은 북경(49.09%), 상해(40.50%), 천진(36.99%), 흑룡강(24.24%), 길림(23.91%)이며, 비중이 가장 낮은 5개 지역은 서장(6.53%), 귀주(9.05%), 윈남(10.08%), 사천(11.15%) 및 안휘(11.37%)이다.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북경과 가장 낮은 서장의 차이는 7.5배이다. 전문대학 및 이상 교육 수준의 지역별 차이는 매우 현저하며,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북경은 가장 낮은 서장의 11배이다. 북경, 상해, 천진 3개 지역의 근로자 가운데 전문대학 및 이상의 교육 수혜자 비율은 이미 12%를 초과하며, 이는 전국 평균의 2.5배 이상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5개 지역인 서장, 윈남, 안휘 및 사천의 비율은 각각 1.94%, 2.61%, 3.04% 및 3.13%이고, 이 5개 지역에서 각 30-50명의 근로자 가운데 1명이 고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4. 인적자원 현황으로 본 교육 발전의 추세

- (1) 창의적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고급 인재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국가 종합 발전 능력을 제고한다.

현대 경제 발전 과정 중에서, 대다수의 국가(영국 제외)들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을 거쳤다. 일부 국가의 성공은 현실을 초월하였고, 일부 국가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상당히 복잡하며, 예를 들어, 국민소양, 창의적 체제, 금융제도, 경제 운행 규범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인은 국가 기술 창의 능력의 강약에 있고, 일부 선진국은 자신들이 영도적 위치를 점유하여 부단한 창의적인 능력을 지녔다.

상관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며, 1개 후진국이 일반적으로 3단계를 거치는데, 제 1단계는 자본 누적 및 노동력 투입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이 단계에서 자본은 생산율은 노동 생산률보다 높고, 경제 성장은 주로 자본의 증가에 의존한 것이다. 제 2단계는 기술 모방이 자본의 누적에 대신하여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후진국은 이 단계의 발전 중에 자본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동생산율은 부단히 제고된다. 제 3단계는 창의적 기술이 경제 성장을 추진하며, 이 단계에서 모방 위주의 제 2단계의 모험이 더 커지고, 불확실한 요인이 더욱 많아지며, 경제속도는 완만하지만, 이는 미래의 지속적 발전 및 영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추월은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것이고,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 것이다. 미국은 19세기 중반에 영국을 추격하였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을 추월하는 데 성공하였고, 시종일관 세계적으로 선두위치를 점유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미국의 과학기술 창의력이 작용하였다. 미국은 1980년대 생산 원가가 높은 제조업이 선두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지향성을 통하여, 강력한 기술 축적을 하였고, 산업노동을 정보로 활용하여, 세계 신경제의 최고봉

을 점령하여 경제 성장을 실현하였다. 1980년 이래 일본, 연방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가장 발달한 국가인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초월할 수 없었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의 발전 과정을 거쳐 기술 및 생산 원가 경쟁을 하였고, 신속한 발전을 하여 미국을 추격하였다. 그럼에도 일본이 1990년대에는 미국을 추격할 수 없었고, 오히려 10년 간의 정체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시아 금융위기 및 세계 자원 원가 상승의 원인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여전히 일본 기술적 역량의 부족이었고, 독립적 창의력이 강하지 않았으며, 선진 과정의 제3단계에서 멈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를 살펴 볼 때,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자본의 축적 및 기술 진보의 조건을 창출하여, 경제의 국제화 및 정보시대의 도래에 기술 모방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였다. 또한 중국은 또한 대량의 노동력 자원, 노동력의 상대적 저가 등이 자본 경쟁의 국제 환경에 비교할 수 없는 우세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중국은 현재 발전과 추격의 가장 좋은 시기로서, 현재 당면한 것은 제 2단계 진입로서, 대량으로 고급 인재 및 중등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제 2단계를 완성하고, 순리적으로 제 3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을 발전시켜 대량으로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이 중국이 지속적으로 선진국으로 향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중국 과학 기술의 창의성과 국가 발전의 수요 및 국제적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직면할 때, 미래를 향하여 중국은 반드시 고등교육의 개혁을 심화하여야 하며, 대대적으로 고등교육을 발전시켜, 세계 선진 기술의 동력이 되도록 추격하여야 한다. 인재 양성을 중시하여, 지속적으로 대학원생 양성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세계 경제 발전을 참조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체계를 가속화하여, 완전한 국가 창의적 체계를 신속하게 건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 과학연구기관 및 연구형 대학이 지식 창조 체계의 핵심이 되며, 기업과 과학연구기관이 기술 창조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대학 및 직업 훈련

기관은 지식 전달 계통의 핵심으로 역할하고, 기업과 사회는 지식 응용 계통으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가의 창의적 체계는 경제 및 사회 발전 경제와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하며, 중국의 종합적인 국력과 국제 경쟁력의 지주가 되어야 한다.

(2) 고교 단계의 교육 보급을 가속화하여 인적자원 개발의 난관을 극복한다.

중등교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인적 자원 소양의 관건이다. 현재 중국 인적 자원은 대량이나 질이 낮은 모순을 안고 있다. 노동력에 있어 중등 및 고등교육 수준의 근로자 비율이 낮게 편중되어 있고, 2000년 제 5차 인구조사 자료 분석에 의거하면, 중국 노동력이 고교 및 이상의 교육 수혜 인구 비중이 17.3%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고교 및 중등 전업 학력 소지 근로자의 비중은 12.7%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선진국과는 차이가 많다.

중국 고교 졸업 근로자의 비중이 낮게 분포되어 있어, 이를 타파할 유일한 지름길은 고교 단계 교육을 가속화하여 보급하고, 진일보 나아가 전국 및 각 지역의 중학교 졸업 진학률,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제고하며, 대도시와 발달 농촌 지역에 중등교육을 대대적인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기본적으로 9년 의무교육 보급이 실현된 후임으로 향후 교육 규모 발전의 진행 방향은 고교 단계 교육이다. 그 규모의 확장이 고등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것은 고교 교육이 고등교육에 비하여 기본적인 자원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중등직업교육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일반 근로자의 문화적 소양을 제고하는 관건이며, 더욱이 중서부 지역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곳이므로, 교육 적합성을 강조해야 하며, 이것이 해당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중등전업기술 근로자의 공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중국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유한하기에, 의무교육 발전 투입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 투자 분배 구조의 조정을 적절히 하여, 중국 고교교육 투자의 길을 진일보 확대하며, 원가 부담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국 인적 자원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관건적인 문제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3) 전 국민의 완전 평생학습 체계를 건립하여, 전체 국민의 소양을 제고한다.

창의력과 근로자 기능의 제고, 교육 수혜자의 비율과 연령상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 훈련 체계의 완전성 및 운영상의 효율을 기획하여야 한다.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 기술의 진보가 인적 자원의 소양 및 교육 자체에 새로운 요구를 제안한다. 경제의 발전은 국민적 소양으로 하여금 이미 수료한 일종의 교육 수준 혹은 개인의 평균 교육 연한으로는 부족하기에, 변화에 빠르면 빠를수록 이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기술의 진보는 점점 빨라져서 계속교육, 평생 교육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완전한 전 국민 평생학습의 체계 건립은 전체 국민 소양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보장이 된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평생교육·평생학습은 일종의 국제 교육사조가 아니고, 수많은 국가의 교육정책이며, 실제 행동으로 변화되었다. 중국의 인적 자원이 ‘양적 방대, 질적 저하’의 국가적인 상황에 대하여, ‘완전한 전 국민 평생 학습 체계’가 점차적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이는 장차 중국의 국제화 추세에 순응하고, 전 국민의 소양을 높이는 전략적 방침이 되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풍요하지 않은 국가이기에, 전 국민의 평생 학습 체계 건립으로 정보화 기술의 광범한 운용을 강화하며, 원격교육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여, 개방형 교육 시스템을 건립하여야 한다. 성인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전 사회가 다양한 모형의 현대화 직업 훈련 체계를 가속하여 형성하고, 현재 정보 및 통신기술을 운용하여, 기업, 학교 및 사회 훈련 기구의 종합적 우세를 발휘하도록 하며, 직업 훈련의 개방성 및 탄력성을 증가시켜, 재직 근로자의 계속교육을 실시한다. 동시에 사회 훈련 교육 기구를 조직하여, 기

업에서 재취업 훈련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농민은 평생 학습 체계 중에 중요 구성 부분임으로 이들을 초청하여 과학 분야를 학습하게 하고, 과학을 이용한 평생학습이 농업 생산율을 제고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의 유용한 도구로서 개진하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농촌 학습내용의 실용성과 적합성을 부단히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각급 정부는 정규 학교의 대량 교육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개방형 원격 교육 및 각급 교육 훈련 기구를 발전시키며, 각종 매체, 정보기관 및 공공도서관의 교육 기능을 개발하여, 사회 각 구성원 모두로 하여금 ‘배우는 자가 있는 곳이 학교’라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한다.

또한 중국 특색을 지닌 지역학원을 창설하여, 지역사회, 중소도시, 농촌 등이 내려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필요한 사회 인재의 긴급 수요 양성소가 되도록 한다. 지역 사회교육, 가정교육을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지역, 가정의 정신문화 및 청소년의 교외 교육 발달을 촉진한다. 지역사회에 의탁하여 가정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대학, 학부모 학교 등을 설립하여, 학습형 가정을 창설하며, 노인대학을 설립하여 노년 교육의 네트워크를 건립한다. 지역사회 정부의 통괄 하에 각급 각류 성인학교가 주요 근거지로 활동하고, 사회 각종 역량이 연합하여, 시민에게 과학 상식, 법제 상식 및 사회 문화건설을 위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서는 TV교육, 통신교육, 독학고시 및 사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른 연령, 성별, 경력, 배경 및 취업 전망이 있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 국민 평생학습 체계의 개방성·광활성·계통성·다기능성의 특징을 발휘하여, 전체 국민인 유아에서 노인까지 인생 전 과정의 완전한 평생 학습 체계를 건립한다.

(4) 중서부 인적자원 개발을 가속화하여, 합리적인 업무 분담 체계를 건립하고, 염가의 노동 자원을 확보한다.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염가의 노동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세계발전지표2001>에 의하면, 1995-1999년 기간 제조업의 각 근로자의 노동력 원가가 중국은 \$729이고, 이는 미국의 1/40, 일본의 1/43, 한국의 1/15, 태국의 1/4에 해당하며, 심지어는 인도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물가 요인을 고려 할 때, 상술한 차이는 감소할 것이지만, 그러나 국제 원가 경쟁에 있어, 저렴한 노동력의 원가는 경쟁력의 우세를 가지게 된다. 이는 일본 제조업이 성공한 원인이고, 동남아 경쟁국인 일본을 승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의 해열 전기가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중국의 '세계 근로자'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저렴한 노동 원가를 지속하여 산업 국가 경쟁력의 우위를 제고하는 것이다. 향후 20년 생산 연령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저렴한 노동력 원가를 유지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여, 경제 발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연해 지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1인당 평균 GDP 수준이 이미 대폭적으로 상승하였고, 예를 들어 상해 2000년 1인당 평균 GDP는 PPP\$로 이미 고소득 국가 수준에 이르렀고, 생산 원가는 이미 상승됨에 따라 중국의 산업 구조는 진일보 조정되었다. 국가의 산업 정책이 중서부 지역으로 치중됨에 따라, 합리적인 산업 분담 체계가 전국 범위 내에서 통괄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동부 연해 발달 도시 산업 구조는 진일보 완성되었고, 제 3산업이 대대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정보 산업 위주가 되었으며, 고도의 신기술 산업이 가속화 되었고, 국제 경쟁력의 우세 산업을 구비하게 되었다. 중서부 지역은 유리한 자원을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현대화 공업을 완성하였다.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서부 지역은 노동 원가의 유세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에 서부 대개발 전략에 적합하여, 점차적으로 산업의 지역적 전이를 실현하였고, 전통적인 제조업이 점차적으로 연해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옮겨졌다. 아울러

대대적으로 중서부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수준이 상승되었고, 창의적 기술 인재의 개발이 가속화되었으며, 고급 관리 인재 및 전문 기술을 갖춘 숙련 근로자를 구비하여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장차 중국 지역 경제 격차의 감소와 중국 전체 생산 원가의 경쟁력 창출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할 것이다.

IV

일본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1.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 전략

가. 정책추진을 위한 주요제도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와 더불어 인적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화기 중등교육과정에서 공업·농업·상업중학 등의 직업학교를 설립하여 경제발전 초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후 교육제도의 개편(6334제 도입)과 기업 내부의 고용관리 방식의 개발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종신고용, 연공서열 방식의 인력관리 체제가 일반화되어 취업 후 이루어지는 사내교육훈련의 비중이 커졌다(<그림 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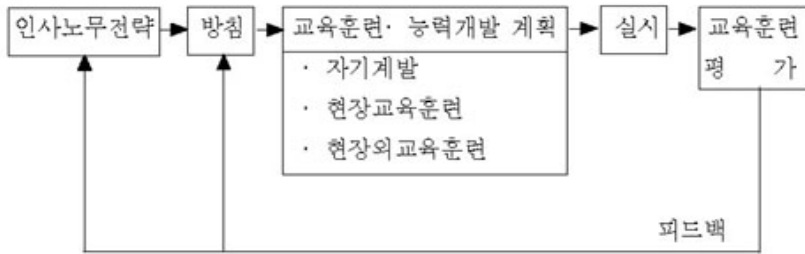
고등학교는 인문계와 기술계로 구분되며, 기술계는 상업·공업·농업·가정·후생·수산 및 과학계 고교로 세분된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은 4년제 대학, 2년제 단기대학,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인 전문학교, 5년제 고등전문학교 등이 있다.

1960년대까지는 중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높았으나, 1980년대 이후 고등학교 진학률이 95%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점차 인문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구가 전수학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교육체제내의 부족한 적응력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외에도 훈련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과 민간직업훈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공직업훈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능력개발기구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수요와 훈련내용에 따라 보통직업훈련, 고도직업훈련 및 지도원훈련으로 구분된다. 그 외 대부분 기업 내에서 OJT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기업 내의 민간훈련이다(<그림 IV-2>).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실시되는 인정훈련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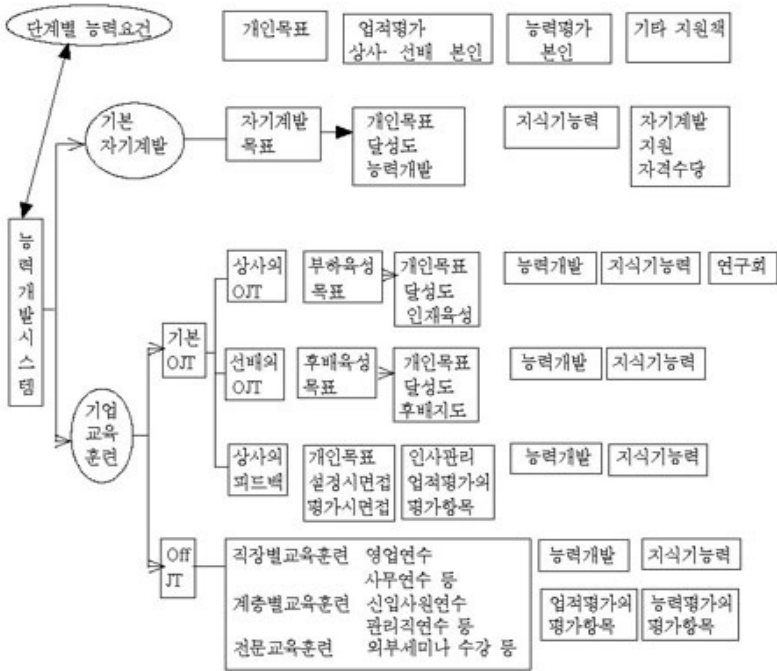
일본의 직업훈련은 일본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는데, 근대화 과정에서는 도제제도가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공장제 공업의 발달로 숙련공을 사내에서 자체 교육하여 양성하는 형태와 이를 공공훈련이 보완해 주는 형태로 발전했다.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빠른 기술발전과 노동력부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졸 근로자를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훈련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IV-1>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과정



자료 : 森 五郎 編著(1995). 現代日本の人事務管理. 有斐閣. 103.

<그림 IV-2> 능력개발시스템의 구성체계



자료 : 河合克彦(1999). 業績貢獻度別人事. 經營書院. 84.

나. 직업능력개발시설

일본의 직업훈련시설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인정직업훈련시설로 구분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은 국가 및 도도부현의 고용·능력개발기구가 실시하는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직업능력개발고, 직업능력개발대학교,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 장애인직업능력개발고, 국립장애인직업능력개발고, 도도부현립인가 장애인직업능력개발고가 있다.

공공직업훈련의 실시현황을 보면, 신규학교졸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

이·전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전직자의 직업훈련은 파트타임근로자훈련, 직업전환훈련, 농업자 전직훈련, 부인취직촉진훈련, 고령자 직업훈련, 장애자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세분된다.

인정직업훈련이란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서 사업주 등의 신청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훈련이 후생노동성령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도도부현지사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수는 2000년도 4월 말 현재 1,471개소로, 그 중 단독 직업훈련사무소가 420개소, 공동 직업훈련 실시 단체 수가 1,051개 단체이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다.

그리고 실업자의 직업훈련지원을 들 수 있는데, 실업자의 직업훈련지원에는 교육훈련지원, Ability과정훈련, 위탁훈련과정, 취직지원훈련과정, 파트타임 등 단기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이 있다.

다. 직업능력개발체계

1998년 이후, 직업능력개발은 크게 보통직업훈련(보통과정, 단기과정), 고도직업훈련(전문과정, 전문단기과정, 응용과정, 응용단기과정), 지도원 훈련(장기과정, 전문 과정, 연구과정, 응용연구과정, 연수과정)이 있으며, 훈련주체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과 민간직업훈련(인정직업훈련), 훈련대상에 따라 사무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비즈니스 커리어제도)로 나뉜다.

보통직업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기능(고도의 기능 제외) 및 이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보통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뉜다. 보통과정은 중·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 및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졸자는 2년(2,800시간), 고졸자는 1년(1,400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단기과정은 재직근로자, 고령자, 파트타임 노동 희망자, 이·전직자, 기능검정 수험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훈련기간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도직업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고도의 기능 및 이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과정으로서 전문과정, 전문단기과정, 응용과정 및 응용단기과정으로 구분된다. 전문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2년(2,800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전문단기과정은 6개월 이상의 단기과정을 말하며, 응용과정은 전문과정의 고도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2년(2,800시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응용단기과정은 훈련기간이 1년 이하인 과정을 말한다.

지도원훈련은 직업훈련지도자가 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시키거나 지도원으로서의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의미하며, 장기과정, 전문 과정, 연구과정, 응용연구과정, 연수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장기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년의 훈련기간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과정은 직업훈련지도원 또는 해당훈련과정의 훈련과에 대해 2급 기능검정에 합격한 후, 3년 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훈련기간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연구과정은 장기과정의 지도원 훈련을 수료한 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 또는 기능을 갖춘 자로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전공분야별로 직업훈련지도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훈련기간은 1년(1,60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응용연구과정은 연구과정의 지도원훈련을 수료한 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 또는 기능을 갖춘 자로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1년(80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수과정은 직업훈련에서 훈련을 담당하는 자, 또는 담당하려고 하는 자, 직업훈련지도원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생산기술의 진보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및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최소 12시간의 훈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공직업훈련은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이 설립하는 직업훈련교, 직업훈련단기대학교, 신체장애자직업훈련교, 직업훈련

대학교, 지역직업훈련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무상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수당 등이 지급된다.

인정직업훈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정을 받은 사업체, 해당업종관련 단체, 직업훈련법인, 노동조합 등의 훈련기관을 통해 피고용자, 구직자, 노조조합원 등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이다.

일본의 직업훈련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정부는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에 대해 평생교육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라.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

일본의 패전 후의 인적자원개발을 역사적으로 개관해 보면, 경제부흥기, 고도경제성장기, 석유파동과 전환기, 글로벌화와 장기불황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경제부흥기(1945-1954년)는 패전으로 인적자원개발이 미비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동란 특수로 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동우회, 일본상공회의소,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경련) 등의 경제단체에서 기능자 양성, 체계적인 인력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도 1947년 노동성 설치를 계기로 노동법에 의한 기능자 양성, 직업지도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일경련은 최고경영자에게 경영강좌, 중간관리자에는 MTP(관리훈련계획)를, 감독자에게는 TWI(산업내훈련) 등을 보급하였다.

둘째, 고도경제성장기(1955-1975)에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개발을 다각화하여, 사내교육훈련이 체계화되고, OJT가 활성화되었다. 개별기업은 장기계획에 입각한 인재육성계획(CDP)이 수립되었고, 교육체계의 정비와 인사관리체계와 교육훈련기능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에서 집합교육이 직능별 계층별로 분화되고, 이의 보완책으로 통신교육이 널리 보급되어 활성화 된 시기이다. 또한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숙련 노동자

의 양성을 필요로 하여 종전의 부과(部課)단위의 인적자원개발계획이 전사적 차원에서 통합 정비 되어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체계를 수립(OJT, Job Rotation, 계층별 교육 등)한 시기로, 기업이 독자적인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확립하여 종업원의 직업능력을 체계화 전문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석유파동으로 인한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전환기(1979-1985)이다. 1979년의 급격한 석유파동으로 안정적 고도경제성장을 위해 종전의 업계공통의 인적자원개발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중고령자 활성화와 능력개발, OA화 추진을 위한 능력개발, 첨단기술자의 확보와 양성을 위해 자사만의 인적자원개발체계의 수립이 요구되어졌다. 또한 1980년대는 국제화와 더불어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고학력화, 고령화로 이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이 요구되어지기도 하였다.

넷째, 글로벌화와 신인류의 등장한 장기불황기(1985년 버블경제 이후)이다. 1980년대 후반의 버블현상은 경영자, 근로자의 의식구조가 바뀌어 소위 신인류의 등장과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1990년대도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의 최대과제는 이 신인류를 포함한 근로자의 질적인 직업능력수준의 향상이었다. 이 시기에 있어 능력개발의 중점대상은 과장급 중간관리자의 리더십과 여성근로자의 활용이었고, 한편으로는 인적자원의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자의 인적자원개발과 전문능력의 심화와 활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기로 근로자 개개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강화되었다. 또한 경제의 글로벌화로 일본적 경영제도도 변화가 일어나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제에서 능력중심제도가 도입되어 교육훈련도 종전의 집합교육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교육훈련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카페테리아식 교육훈련체제로 전환하여 가고 있다.

마. 후생노동성의 인적자원개발

후생노동성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촉진하고, 직업의 안정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꾀하는 한편,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사업주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실업자와 취업 전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직업훈련, 직업능력평가제체의 정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고용정세에 대응한 능력개발의 추진, 21세기에 적합한 인재육성 계획의 추진,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의 추진, 사업주가 실시하는 인적자원개발의 추진, 공공직업훈련의 강화, 기능을 존중하는 사회실현을 위한 대책 등이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일본은 제 1차에서 제 7차에 걸쳐 직업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제 1차 직업훈련기본계획(1971~1975)은 고도경제성장하에서 인력공급과 사내의 자주적인 직업훈련체제를 확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제 2차 직업훈련기본계획(1976~1980)은 평생훈련의 기초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석유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력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그리고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설립하였다.

제 3차 직업훈련기본계획(1981~1985)은 평생훈련체제의 정비를 슬로건으로 하여, 2차·3차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경제구조와 고령화의 진전, 여성노동자의 증가, 고학력자의 증가라는 경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재직하는 전 기간에 걸쳐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제 4차 직업훈련기본계획(1987~1990)은 신시대의 직업능력개발로 요약되는데, 기술혁신, 경제의 서비스화, 소프트화, 국제화의 진전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적응력을 갖춘 근로자의 양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 5차 직업훈련기본계획(1991~1995)은 기능자 부족에 대한 대비와

풍요로운 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폭넓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근로자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 6차 직업훈련기본계획(1996~2000)은 개인의 개성을 살리면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청년층의 노동력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여성근로자의 증가 등에 대비한 고용의 안정·확대를 지향하는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하였다.

제 7차 직업훈련기본계획(2001~2005)은 최근의 기술혁신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자의 취업의식의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이동의 증가, 직업능력의 미스매치의 확대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직업의 안정성, 사회적인 평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일본의 인적자원 기본 현황 분석

가. 인적자원 현황

일본의 인적자원분포를 보면, 총인구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45년 약 7,215만 명에서 2002년 현재 1억 2,744만 명(남자 6,225만 명, 여자 6,518만 명)으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중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1945년 0-14세의 연소자인구는 총인구의 36.8%인 2,645만 명,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58.1%인 4,182만 명,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5.1%인 370만 명에서, 2002년에는 0-14세의 연소자인구는 14.2%인 1,810만 명,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67.3%인 8,571만 명,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18.5%인 2,363만 명으로 변화했다.

일본의 이러한 인적자원구조 변화의 특징을 보면, 출생률의 감소로 인한 14세 이하의 연소자인구의 대폭적인 감소와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약 2배로 증가하였고,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는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1945년보다 6.4배나 증가하여 인적자원의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일본의 인적자원구성의 특징은 2002년 현재 여성이 51.1%인 6,518만 명이고, 남성이 48.9%인 6,225만 명으로 1945년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적자원량을 파악하기 위해 출생률을 보면, 2002년도의 인구 1,000명 당 출생률은 9.2%이고 사망률은 7.8%라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1.4%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인구가 최대로 예상되는 것은 2026년의 1억 2,774만 명을 피크로 2027년부터 인구의 감소가 예측되어, 향후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는 급속하게 진전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인적자원의 감소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표 IV-1> 인구추이 및 장래인구 추계 (단위: 천명, %)

	합계	총인구			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70	104,665	25,153	72,119	7,393	24.0	68.9	7.1
1975	111,940	27,221	75,807	8,865	24.3	67.7	7.9
1980	117,060	27,507	78,835	10,647	23.5	67.3	9.1
1985	121,049	26,033	82,506	12,468	21.5	68.2	10.3
1990	123,611	22,486	85,904	14,895	18.2	69.5	12.0
1995	125,570	20,014	87,165	18,261	15.9	69.4	14.5
2000	126,926	18,472	86,220	22,005	14.6	67.9	17.3
2010	127,473	17,074	81,665	28,735	13.4	64.1	22.5
2020	124,107	15,085	74,453	34,559	12.2	60.0	27.8
2030	117,580	13,233	69,576	34,770	11.3	59.2	29.6
2050	100,593	10,842	53,889	35,863	10.8	53.6	35.7

厚生労働省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日本の将来推計人口」

나. 평균수명

일본인의 평균수명(0세의 평균여명을 말함)은 남자는 1970년의 69.31세이고 여자는 74.66세에서 2002년 남자가 9.01세 증가한 78.32세이고,

여자는 10.57세 증가한 85.23세로 늘어났다. 출산율은 70년대에 2.13%에서 2001년에는 1.33%로 0.80%가 감소하였다(<표 IV-3>). 그리고 일본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1970년에 고령화 사회, 1994년 고령 사회, 2006년 초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표 IV-4>).

<표 IV-2> 각국의 평균수명 비교

(단위: Year)

국가	남자(A)	여자(B)	수명차(A-B)
한국(2001)	72.8	80.0	7.2
일본(2001)	78.1	84.9	6.8
미국(2000)	74.1	79.5	5.4
프랑스(2001)	75.5	83.0	7.5
OECD평균	74.4	80.4	6.0

자료 :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03. 10)

<표 IV-3> 각국의 출산율

(단위 : %)

국가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70	'01	감소폭	'70	'01	감소폭	'70	'01	감소폭	'70	'01	감소폭
합계 출산율	4.53	1.30	△3.23	2.46	2.03	△0.43	2.47	1.90	△0.57	2.13	1.33	△0.80

자료 :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03. 10)

<표 IV-4> 주요국 고령화 속도 추이

	도 달 연 도			소 요 년 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한국	2000	2019	2026	19	7	26
일본	1970	1994	2006	24	12	36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156
미국	1942	2013	2028	71	15	86
독일	1932	1971	2012	39	31	80
영국	1928	1974	2020	47	45	92
이탈리아	1926	1988	2006	62	18	80

자료 : 일본 인구 통계자료집, (2000).

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보면, 1990년의 4.8%를 피크로 급속히 하락하여 1998년에는 마이너스 1.1% 성장을 기록하고 그 후 점차 회복하여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 29,701억 달러에서 2001년 41,414억 달러로 증가하여, 1인당 국민소득은 동년 25,082달러에서 33,061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의 1인당 소득수준은 25,082달러에서 2001년 33,061달러로 증가했으나 1995년의 42,500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듯이 거품경제의 붕괴와 장기불황의 늪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내총생산이 1990년대 중반에 미달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5> 일본의 GDP와 1인당 국민총소득
(단위: %, billion US dollars, US dollars)

	경제성장률	GDP	1인당 국민소득
1990	4.8	2,970.1	25,082
1995	1.6	5,291.8	42,500
2001	-0.6	4,141.4	33,06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2), 해외노동통계.

라. 노동력인구(학력별,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직종별)

일본의 인적자원 중 노동력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인적자원 중 상품생산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 총인구 1억 2,354만 명중의 81.7%인 1억 89만 명에서 2003년은 873만 명이 증가한 1억 962만 명이 되었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1990년 6,384만 명에서 2003년 6,666만 명으로 282만 명이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동년 63.3%에서

60.8%로 하락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990년의 3,657만 명에서 2003년에는 4,285만 명으로 628만 명이 증가했다(<표 IV-6>). 이는 일본의 오랜 장기불황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되어 실망실업자가 증가한 측면과, 노동력인구의 구성이 15~64세의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자층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 전체에 남자 95%, 여자 63%로 나타난다. 하지만 남자 84%, 여자 49%인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IV-7>).

<표 IV-6> 경제활동인구

(단위: 만명, %)

	총인구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피고용자 비율
1965	9,803	7,287	4,787	57	1.2	2,497	65.7	60.8
1970	10,357	7,885	5,153	59	1.1	2,723	65.4	64.9
1975	11,158	8,443	5,323	100	1.9	3,095	63.0	69.8
1980	11,683	8,932	5,650	114	2.0	3,249	63.3	71.7
1985	12,078	9,465	5,963	156	2.6	3,450	63.0	74.3
1990	12,354	10,089	6,384	134	2.1	3,657	63.3	77.4
1995	12,520	10,510	6,666	210	3.2	3,836	63.4	81.5
1998	12,639	10,728	6,793	279	4.1	3,924	63.3	82.4
1999	12,664	10,783	6,779	317	4.7	3,989	62.9	82.5
2000	12,688	10,836	6,766	320	4.7	4,057	62.4	83.1
2001	12,715	10,886	6,752	340	5.0	4,125	62.0	83.7
2002	12,740	10,927	6,689	359	5.4	4,229	61.2	84.2
2003	12,758	10,962	6,666	350	5.3	4,285	60.8	84.5

자료: 總務省統計局 「勞働力調査報告」.

<표 IV-7> 경제활동참여율(2001) 25~64세와 55~64세 인구의 학력별, 성별비교

OECD 회원국가		25~64세					55~64세			
		후기 중등 교육 미만	후기중 등 및 중등후 비고등 교육	B유형 고등 교육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	전체 교육 단계	후기 중등 교육 미만	후기 중등 및 중등후 비고등 교육	고등 교육	전체 교육 단계
캐나다	남	73	88	91	90	86	52	64	66	61
	여	48	73	81	83	72	28	46	51	41
독일	남	77	84	88	92	84	44	49	67	53
	여	50	70	81	83	67	26	35	53	34
일본	남	87	95	98	97	95	80	86	86	84
	여	56	63	66	68	63	48	49	47	49
한국	남	84	89	94	91	88	74	67	70	71
	여	61	53	58	56	57	51	25	42	48

출처: OECD. 부록3 참조(www.oecd.org/edu/eag, 2003).

마. 실업 동향

1990년에는 완전고용이라 할 수 있는 2.1%(134만 명)의 실업률이 2003년에는 경기불황으로 5.4%(350만 명)까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특히 불경기로 인한 청년실업문제와 장기불황에 의한 다수의 청소년층이 프리타임 형태로 취업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노동력의 재생산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실업률을 연령층과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15세에서 64세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15~24세 연령층이 10%이고, 25~54세 4.9%, 55~64세가 5.8%로 연령층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으며,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고졸미만이 5.9%, 고졸 4.8%, 대졸이상 3.1%로 고학력일수록 실업률이 적

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IV-8>).

한편 일본 인적자원의 종사상 지위별로 취업자를 살펴보면, 1990년 전체취업자 6,249만 명 중 자영업주가 8.3%인 878만 명, 가족종사자가 8.3%인 517만 명, 피고용자가 77.4%인 4,835만 명에서, 2003년에는 전체 취업자 6,316만 명 중 자영업주가 10.5%인 660만 명, 가족종사자가 4.7%인 296만 명, 피고용자가 84.5%인 5,335만 명으로 변화했다(<표 IV-9>). 즉,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영업주와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피고용자의 비중은 증가되어 가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표 IV-8> 국가 간 실업률: 연령계층별 · 교육수준별 비교
(단위: %)

	연령계층별			교육수준별		
	15~24세	25~54세	55~64세	고졸미만	고졸	대졸이상
한국	8.1 (289)	2.8 (100)	1.6 (57)	2.9 (100)	3.4 (117)	3.3 (114)
일본	10.0 (204)	4.9 (100)	5.8 (118)	5.9 (100)	4.8 (81)	3.1 (53)
미국	12.0 (250)	4.8 (100)	3.9 (81)	8.1 (100)	3.8 (47)	2.1 (26)
독일	9.7 (118)	8.2 (100)	10.6 (129)	13.5 (100)	8.2 (61)	4.2 (31)
네덜란드	5.9 (227)	2.6 (100)	2.3 (89)	3.1 (100)	1.8 (58)	1.3 (42)
영국	11.0 (268)	4.1 (100)	3.5 (85)	7.6 (100)	3.9 (51)	2.0 (26)
OECD평균	13.1 (218)	6.0 (100)	4.9 (82)	7.3 (100)	5.7 (78)	3.1 (43)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표 IV-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만 명)

	전산업				농림 업취 업자	비농림업					
	합계	자영 업주	가족종 사자	피고 용자		취업자	자영 업주	가족종 사자	피고 용자	상용	임시, 일고
1965	4,730	939	915	2,876	1,046	3,684	545	322	2,817	2,564	253
1970	5,094	977	805	3,306	842	4,251	614	354	3,277	3,005	271
1975	5,223	939	628	3,646	618	4,605	637	343	3,617	3,327	290
1980	5,536	951	603	3,971	532	5,004	698	354	3,941	3,567	375
1985	5,807	916	559	4,313	464	5,343	698	341	4,285	3,847	437
1990	6,249	878	517	4,835	411	5,839	682	330	4,806	4,296	510
1995	6,457	784	397	5,263	340	6,116	615	260	5,229	4,686	543
1998	6,514	761	367	5,368	317	6,197	605	240	5,334	4,726	609
1999	6,462	754	356	5,331	307	6,155	602	234	5,298	4,666	631
2000	6,446	731	340	5,356	297	6,150	585	224	5,322	4,660	662
2001	6,412	693	325	5,369	286	6,126	554	215	5,331	4,649	683
2002	6,330	670	305	5,331	268	6,063	541	205	5,292	4,576	717
2003	6,316	660	296	5,335	266	6,050	535	195	5,296	4,570	726

자료: 總務省統計局 「勞働力調査報告」.

바. 산업별 취업자

1990년은 총취업자 6,249만 명 중 농림업이 6.6%인 411만 명이고 비농림업이 93.4%인 5,839만 명에서, 2002년에는 농림업이 4.2%인 268만 명이고 비농림업이 95.8%인 6,063만 명으로 농림업분야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농림업 중에서는 제조업의 취업자(동년 1,505만 명에서 1,222만 명)가 현저히 감소하고 그 대신 서비스업 취업자(동년 1,394만 명에서 1,904만 명)가 크게 증가했다(<표 IV-10>).

<표 IV-10> 산업별 취업자 수

연도	합계	농림업	비농림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 가스 열공수 도업	운수 통신	도소 매업 음식 업	금융 보험 부동산 업	서비스 업	공무
1970	5,094	842	4,251	44	20	394	1,377	28	324	1,012	132	751	161
1975	5,223	618	4,605	43	16	479	1,346	32	332	1,127	170	855	196
1980	5,536	532	5,004	45	11	548	1,367	30	350	1,248	191	1,001	199
1985	5,807	464	5,343	45	9	530	1,453	33	343	1,318	217	1,173	199
1990	6,249	411	5,839	40	6	588	1,505	30	375	1,415	259	1,394	195
1995	6,457	340	6,116	27	6	663	1,456	42	402	1,449	262	1,566	218
1996	6,486	330	6,155	26	6	670	1,445	37	411	1,463	256	1,598	214
1997	6,557	324	6,232	26	7	685	1,442	36	412	1,475	253	1,648	215
1998	6,514	317	6,197	26	6	662	1,382	37	405	1,483	257	1,685	217
1999	6,462	307	6,155	28	6	657	1,345	38	406	1,483	251	1,686	214
2000	6,446	297	6,150	29	5	653	1,321	34	414	1,474	248	1,718	214
2001	6,412	286	6,126	27	5	632	1,284	34	407	1,473	240	1,768	211
2002	6,330	268	6,063	28	5	618	1,222	34	401	1,438	241	1,804	217

자료: 總務省統計局 「勞働力調査報告」.

산업별 취업자를 크게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보면, 1990년은 1차, 2차, 3차 산업의 취업자 구성비가 7.2 : 33.6 : 59.2에서, 2003년에는 4.6 : 28.3 : 67.0으로 변화하여 1차, 2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졌다(<표 IV-11>). 경제가 발전하면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그 비중이 변화해간다는 글라크의 법칙과 같이 일본의 산업구조도 변화하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산업별 취업자 구성도 서비스업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11>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만 명, %)

산업, 직업	취업자수				구성비			
	1990	1995	2000	2003	1990	1995	2000	2003
합계	6,249	6,457	6,446	6,316	100.0	100.0	100.0	100.0
제1차산업	451	367	326	293	7.2	5.7	5.1	4.6
제2차산업	2,099	2,125	1,979	1,787	33.6	32.9	30.7	28.3
건설업	588	663	653	604	9.4	10.3	10.1	9.5
제조업	1,505	1,456	1,321	1,178	21.2	22.5	20.5	18.7
제3차산업	3,699	3,964	4,141	4,234	59.2	61.4	64.2	67.0
전기, 가스, 수도업	30	42	34	32	0.5	0.7	0.5	0.5
운수, 통신업	375	402	414	-	6.0	6.2	6.4	-
정보통신업	-	-	-	164	-	-	-	2.6
운수업	-	-	-	332	-	-	-	5.2
도소매업, 음식업	1,415	1,449	1,474	-	22.6	22.4	22.9	-
도소매업	-	-	-	1,133	-	-	-	17.9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259	262	248	232	4.1	4.1	3.8	3.7
서비스업	1,620	1,809	1,971	1,131	25.9	24.3	30.6	17.9

자료: 總務省統計局 「勞働力調査報告」.

사. 직종별 취업자 구성

1990년 전문적·기술적 직업 종사자는 전체취업자의 11.0%인 690만 명, 관리적 직업 종사자는 3.8%인 239만 명, 사무종사자는 18.5%인 1,157만 명, 판매종사자는 15.0%인 940만 명, 보안·서비스직업 종사자는 8.6%인 535만 명, 농림어업종사자는 7.2%인 448만 명, 운수·통신종사자는 3.7%인 233만 명, 채굴작업자(채광·채석작업자)는 0.5%인 3만 명, 제조·제작·기계운전 및 건설작업자는 27.2%인 1,702만 명, 노무작업자(단순작업자)는 4.4%인 274만 명에서, 2003년 전문적·기술적 직업 종사자는 전체취업자의 14.3%인 606만 명, 관리적 직업 종사자는 2.9%인 185만 명, 사무종사자는 19.5%인 1,230만 명, 판매종사자는 14.5%인 917만

명, 보안·서비스직업 종사자는 11.5%인 729만 명, 농림어업종사자는 4.6%인 289만 명, 운수·통신종사자는 3.3%인 210만 명, 채굴작업자(채광·채석작업자)는 0.6%인 4만 명, 제조·제작·기계운전 및 건설작업자는 22.8%인 1,437만 명, 노무작업자(단순작업자)는 5.6%인 353만 명으로 변화했다(<표 IV-12>). 즉, 직종별 취업자의 인적 구성은 전문기술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및 보안·서비스직 종사자는 증가하였고, 관리적 직업종사자와 농림어업관련 직업종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IV-12> 직종별 취업자

(단위: 만 명)

	전문적 기술적 직업종 사자	관리 직직 업종 사자	사무 종사 자	판매 종사 자	보안서 비스직 업종사 자	농림어 업작업 자	운수 통신 종사 자	채굴 작업 자	제조제작 기계운전 및 건설작업 자	노무 작업자
1965	238	131	636	615	354	1,094	177	19	1,236	229
1970	295	134	755	662	387	880	232	11	1,511	218
1975	364	206	820	738	457	654	237	9	1,580	148
1980	438	220	924	797	501	570	248	5	1,653	168
1985	538	211	1,021	861	501	502	227	4	1,689	230
1990	690	239	1,157	940	535	448	233	3	1,702	274
1995	790	236	1,252	945	610	363	237	3	1,687	310
1996	804	240	1,263	933	618	352	240	2	1,686	318
1997	824	226	1,273	940	637	346	241	3	1,706	328
1998	844	222	1,290	928	654	340	232	3	1,634	333
1999	846	215	1,273	921	668	332	228	3	1,604	334
2000	856	206	1,285	911	677	321	221	3	1,580	347
2001	873	202	1,249	968	693	309	214	3	1,506	353
2002	890	187	1,228	934	717	291	211	4	1,468	349
2003	906	185	1,230	917	729	289	210	4	1,437	353

자료: 總務省統計局 「勞働力調査報告」.

자. 엔겔계수

일본의 근로자세대의 가계수지 중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계수는 1970년의 32.2%에서 1990년의 24.1%, 2003년에는 22.0%로 감소하여, 국민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엔겔계수는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표 IV-13>).

<표 IV-13> 근로자세대의 가계수지현황

(단위: 엔, %)

	수입총액	실수입	가처분소득	평균소비성향	평균저축률	엔겔계수
1965	96,096	65,141	59,557	82.8	11.2	36.2
1970	172,694	112,949	103,634	79.7	13.0	32.2
1975	364,774	236,152	215,509	77.0	14.8	42.9
1980	563,465	349,686	305,549	77.9	13.0	27.8
1985	753,309	444,846	373,693	77.5	12.9	25.7
1990	926,965	521,757	440,539	75.3	16.9	24.1
1996	1,068,999	579,461	488,537	72.0	18.2	22.2
1997	1,078,257	595,214	497,036	72.0	19.7	22.3
1998	1,081,992	588,916	495,887	71.3	19.9	22.7
1999	1,060,740	574,676	483,910	71.5	19.4	22.5
2000	1,044,312	560,954	472,823	72.1	18.6	22.0
2001	1,040,564	551,160	464,723	72.1	18.5	21.8
2002	1,011,609	538,277	452,501	73.1	17.7	22.2
2003	994,333	524,542	440,461	74.0	16.7	22.0

자료: 總務省統計局 「家計調査」.

차. 문맹률, 문자해득률

일본은 명치유신과 더불어 교육제도를 정비하여 일찍이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문맹률이 제로로 일본인 전체의 인적자원의 질과 민도(民度)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카. 학교 및 학생 수의 변화

일본의 학교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6-3-3-4년제를 취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의 9년이다. 1990년의 학교시설을 보면, 유치원이 15,076개교의 201만 명, 초등학교가 24,827개교의 937만 명, 중학교가 11,275개교의 537만 명, 고등학교가 5,506개교의 562만 명, 고등전문학교가 62개교, 단기대학(2년제 대학)이 593개교의 48만 명, 4년제 대학이 507개교의 213만 명, 전수학교(專修學校)가 3,330개교의 79만 명, 각종학교가 3,436개교의 43만 명, 통신제 학교가 105개교(고등학교가 84개교, 단기대학이 9개교, 대학이 12개교)의 33만 명에서, 2003년에는 유치원이 14,174개교, 초등학교가 23,633개교, 중학교가 11,134개교, 고등학교가 5,450개교, 고등전문학교가 63개교, 단기대학(2년제 대학)이 525개교의 25만 명, 4년제 대학이 702개교의 280만 명, 전수학교(專修學校)가 3,439개교의 79만 명, 각종학교가 1,955개교의 19만 명, 통신학교가 178개교(고등학교가 138개교, 단기대학이 10개교, 대학이 30개교)의 46만 명으로 변화했다(<표 II-50>). 즉, 대부분의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단기대학, 전수학교)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대학의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진학률의 증가로 200여 개교가 증가한 반면, 각종학교는 약 1,500여 개교가 감소했다. 또한 재학생수를 보면, 4년제 대학과 전수학교 및 통신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재학생이 출산률의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연소자층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기대학의 재학생이 대폭적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학학부의 분야별 학생 수는 1990년과 2003년을 비교해 보면, 인문과학이 전체의 15.2%에서 16.3%로 사회과학이 39.6%에서 39.0%의 비중을 차지하여 인문사회과학의 비중이 전체의 54.8%에서 약간 증가한 55.3%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표 IV-14> 학교 수의 추이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고등전문학교	단기대학	대학	전수학교	각종학교
1989	65,613	15,080	24,851	11,264	5,511	62	584	499	3,254	3,570
1990	65,529	15,076	24,827	11,275	5,506	62	593	507	3,300	3,436
1991	65,440	15,041	24,798	11,290	5,503	63	592	514	3,370	3,309
1992	65,287	15,006	24,730	11,300	5,501	62	591	523	3,409	3,202
1993	65,068	14,958	24,676	11,292	5,501	62	595	534	3,431	3,055
1994	64,868	14,901	24,635	11,289	5,497	62	593	552	3,437	2,934
1995	64,666	14,856	24,548	11,274	5,501	62	596	565	3,476	2,821
1996	64,474	14,790	24,482	11,269	5,496	62	598	576	3,512	2,714
1997	64,187	14,690	24,376	11,257	5,496	62	595	586	3,546	2,601
1998	62,936	14,603	24,295	11,236	5,493	62	588	604	3,573	2,482
1999	62,611	14,527	24,188	11,220	5,481	62	585	622	3,565	2,361
2003										

자료: 文部科學省(2004), データから日本の教育2004.

타. 진학률

1990년 중학교졸업자의 진학률은 95.1%, 고등학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53.7%에서 2003년에는 중학교졸업자의 97.3%가 고등학교에, 고등학교졸업자의 72.9%가 대학에 진학하여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파. 일본 1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

일본의 15세 이상 인구의 학력을 보면,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인 1970년 의무교육졸업자가 51.8%, 후기중등교육졸업자가 30.0%, 고등교육졸업자가 8.4%, 재학생이 9.1%, 미취학자가 0.8%였으나, 1990년은 의무교육졸업자가 28.4%, 후기중등교육졸업자가 40.7%, 고등교육졸업자가 19.0%,

재학생이 10.2%, 미취학자가 0.2%, 2000년에는 의무교육졸업자가 22.0%, 후기중등교육졸업자가 41.6%, 고등교육졸업자가 24.6%, 재학생이 8.2%, 미취학자가 0.1%를 점하고 있다. 즉, 일본 전체의 인적자원은 1970년대의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고등교육졸업자의 비중이 매우 커져 인적자원의 급속한 고학력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1950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약45명 정도로 동일했으나, 2003년도에는 초등학교가 26.5명, 중학교가 31.3명으로 감소하여 인적자원개발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참고로 2000년에 OECD가 3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습도성취도조사(PISA)에서 15세 학생의 학습도달정도를 보면, 일본은 한국·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리아·영국·아일랜드와 함께 2위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학능력 과 과학능력에서는 한국과 함께 1위 그룹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IEA(국제교육도달도평가학회)의 ‘국제 수학·이과조사’에서도 한국과 더불어 국제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최상위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프리타(Free arbeiter를 줄여서 Freeter)라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가 1999년 79만 명에서 2002년에는 209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표 II-51>)하여 인적자원의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력재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커져 가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IV-15> 일본의 프리타 추이

(단위: 만 명)

연도	1982	1987	1992	1997	2002
프리타수	50	79	101	151	209

하. 자기주도적인 인적자원개발

일본인의 자기주도적인 능력개발 즉, 일을 보다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거나 전직·이직을 위해서나 자신의 지식수준을 제고를 목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이나 연구 활동인 인적자원개발에 일본인의 30.6%(2001년)가 참여²⁰하고 있다. 자기주도적인 인적자원개발에 가장 왕성하게 참여하는 연령층은 20-24세로 41.2%가 참여하고 있으며, 25-29세는 38.4%, 30-34세는 38.3%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적인 인적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15-19세도 38.6%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나 신분이 대부분 학생으로 학교 이외의 학습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을 보면 사업실무·비즈니스관련이 가장 많은 36.2%이고, 외국어가 19.3%, 문화·예술이 10.7%, 가장·가사 관련이 9.1%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교육비

일본은 GDP(국내총생산)에서 교육비(교육비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로 과학기술진흥비는 제외됨)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의 1.03%에서 2001년 1.1%로 약간 증가했고, 국가의 일반세출(일반회계에서 국채비,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을 제외한 것)로 보면, 1990년의 일반 세출의 13.1%인 46,374억 엔에서 2004년 일반 세출액의 10.2%인 48,489억으로 변화했다. 이를 재학생 1인당 공재정지출비용을 보면, 1990년 유치원은 537,787엔, 초등학교 666,924엔, 중학교는 721,835엔, 고등학교는 737,398엔에서, 2001년 유치원은 747,877엔, 초등학교 918,740엔, 중학교는 1,000,131엔, 고등학교는 1,115,167엔으로 증가했다. 총 공부담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 전체 11.4%에서 2000년에는 10.5%로 감소하였으며, GDP대비 공 부담 교육비 비율은 3.6%로 변화가 없다(<표 IV-16>).

또한 가계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수업료, 교재비, 학습참고서비 등의 교육비와 교육에 필요한 간접비인 학교급식비, 교복비, 문구비 및 교통비 등을 포함한 비용)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0년 총소비지출 311,174

²⁰ 總務廳, 『社會活動基本調査報告』(2001).

엔 중 교육관련 지출은 7.5%인 23,440엔에서, 2002년에는 총소비지출 306,129엔 중 교육관련 지출은 7.0%인 21,573엔(總務省, 家計調査年報)으로 감소하여 일본의 장기불회황의 여파가 교육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9년에 학생1인당 교육기관 교육비는 유아교육 \$3,376, 초등교육 \$5,507, 중등교육 \$6,266, 고등교육 \$10,914로 나타나며, 전체 \$6,744로 지출되고 있다(<표 IV-17>).

<표 IV-16> 총 공부 당 교육비(1995, 2000)

교육단계별, 연도별 GDP 및 총 정부지출 대비 교육기관, 가계(생활비 지원 위한 공공보조금 포함) 및 기타 민간에 대한 공부 당 교육비 비율

OECD 회원 국가	총 정부지출 대비 공부담 교육비 비율				GDP 대비 공부담 교육비 비율1			
	2000			1995	2000			1995
	초등, 중등, 중등후 비고등교육	고등 교육	전체 교육 단계	전체 교육 단계	초등, 중등, 중등후 비고등교육	고등 교육	전체 교육 단계	전체 교육 단계
캐나다2	7.9	4.7	13.1	13.1	3.3	2.0	5.5	6.5
덴마크3	8.8	4.6	15.3	12.2	4.8	2.5	8.4	7.4
독일	6.6	2.4	9.9	8.2	3.0	1.1	4.5	4.6
일본3	7.9	1.6	10.5	11.4	2.7	0.5	3.6	3.6
미국2	10.9	3.5	15.5	m	3.5	1.1	5.0	m
국가평균	8.9	2.9	13.0	12.1	3.5	1.2	5.2	5.4

1. 이 표에 제시된 공부담 교육비는 생활비를 위하여 가계에 지원된 공공보조금을 포함함.
2. 중등 후 비고등교육이 초등, 중등, 중등 후 비고등교육이 아닌 고등교육에 포함.
3. 중등 후 비고등교육은 후기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모두 포함.
4. 1999년도 자료임. 출처: OECD. 부록3 참조 (www.oecd.org/edu/eag2003).

<표 IV-17> 학생 1인당 교육기관 교육비(2000)

전일제 학생 기준, 교육단계별 교육기관에 대한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미국 달러의 PPP 환산액)

OECD 회원 국가	유아 교육 (3세 이상)	초등 교육	전기 중등 교육	후기 중등 교육	전체 중등 교육	중등 후 고등 교육	고등 교육			전체 초·중 고등 교육
							전체 고등 교육	B유형 고등 교육	A유형 고등 교육 및 전문 연구 프로그램	
캐나다	6120	x(5)	x(5)	x(5)	5947	x(8)	14983	12801	16690	7764
아일랜드	2863	3385	4625	4655	4638	4234	11083	x(7)	x(7)	5016
이탈리아	5771	5973	7089	7308	7218	m	8065	4114	8136	6928
일본	3376	5507	5904	6615	6266	x(4,7)	10914	8507	11302	6744
한국	1949	3155	3655	4440	4069	a	6118	4106	7502	4294

주: “x” 뒤의 괄호 안 숫자는 참조열을 나타냄. 참조열은 유아교육 (1) 시작하여 전체 초·중 고등교육(10)

예: x(2)는 자료가 2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냄.

1. 국·공립학교만 포함됨.
2. 국·공립학교 및 독립 형 사립학교만 포함됨.
3. 1999년도 자료임. 출처: OECD.

2) 인적자원개발

일본의 HDI(인간개발지수)의 순위는 전반적으로 항상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5단계나 아래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거품 경제이후 일본 경제가 새로운 경제로 전환하는 동안에 일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대수명과 성인 문해율, 총취학률은 80세, 99.0%, 83%로 일정하며, 1인당 GDP는 \$24,070에서 \$26,940로 약 \$3,000의 상승이 있었다(<표 IV-18>).

<표 IV-18> 일본의 HDI 변화 추이
(Human Development Index: HDI)

년 도	순위	기대수명(세)	성인 문해율(%)	총취학률(%)	1인당GDP (PPP,US \$)	HDI
1999	4	80.0	99.0	85	24,070	0.924
2000	9	80.0	99.0	85	23,257	0.924
2001	9	80.8	99.0	82	24,898	0.928
2002	9	81.5	99.0	84	26,940	0.938

자료: Human Development Report, 각 년도, UNDP (hdr.undp.org/reports/default.cfm).

3. 최근 일본의 인적자원개발 동향

일본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글로벌화·정보화·서비스경제화 등에 따라 경제·산업구조가 크게 바뀌었으며,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고용정세에 대한 능력개발대책을 추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며, 21세기에 필요한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취업능력(employ-ability)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사업주가 실시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며, 직업능력의 적절한 평가 추진 등에 의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업능력을 높이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최근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능력개발을 추진하면서 21세기에 필요한 인재육성 시스템을 산·관·학 연계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의 충실, 민간교육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인적자원개발, 기능준중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시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용정세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의 추진

고용정세에 부응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노동시장 불균형을 위한 긴급 고용대책과 일본 신생을 위한 신발전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전자는 2000년도 당초 고용실업정세는 완전실업률이 4.8%(4월)로 당분간 고실업이 지속되리라는 예상 속에서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정보통신기술과 간병(介護) 관련 분야 등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 취업촉진 대책을 착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노동시장불균형해소를 중점으로 하는 긴급고용대책'을 2000년 5월 16일에 책정하였다. 이 긴급고용대책의 인적자원개발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능력 확대에 따른 모든 근로자의 IT화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여 취직을 촉진하는 것이고, 둘째, 사업주와 민간교육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에게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며, 셋째, 학교 졸업 미취업자의 채용 후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후자는 일본 신생을 위한 신발전정책이다. 2000년 후반 일본경제는 1998년의 긴급경제대책, 1999년의 경제신생대책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 효과와 아시아 경제 회복의 영향 등으로 인해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고용정세는 아직도 심각하고 소비동향도 불안한 상황에 있어, 경제 전반을 볼 때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 경제를 확실한 자율적 회복궤도에 도달하도록 하고, 반석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IT혁명의 비약적 추진, 순환형 사회구축 등 환경문제에의 대응, 활력이 가득 찬 미래사회를 목표로 하는 고령화 대책, 편리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반정비가 2000년 10월 19일에 책정되었다. 이 정책에서의 주요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첫째, IT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종합능력개발대책의 추진, 둘째, 근로자의 개별적인 커리어 형성을 위한 지원시스템의 정비 및 직업능력평가 시스템의 확립, 셋째,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

치 해소를 위한 촉진대책의 실시이다. 즉, 구인 미충족 분야에 위탁훈련을 활용하여 중고령 실업자 등에게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숙련수준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21세기 인재입국(人材立國) 계획의 추진

지역의 산업특성과 학술기관의 특색에 맞는 21세기에 적합한 인재육성을 위해 공공직업능력 개발시설과 사업주 단체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 젊은 사회인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든가 고령자의 창업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더욱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육성에 대한 지원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 추진

고용·능력개발기구 도도부현센터의 '능력개발지원 코너'에서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에 관계되는 상세한 상담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요구에 맞추어 '자기개발 등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으로서, 교육훈련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용, 장기 리프레시 휴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와 기능평가를 위한 기술검정제도, 기능심사인정제도 및 사내검정인정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인적자원개발의 지원

사업주의 원활한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생능력개발지원금, 인정 훈련지원 사업비보조금, 광역단체인정훈련지원금제도의 활용 지원이나 지역직업훈련센터의 활용에 대한 지역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인재고도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 공공직업훈련 기능의 충실화

전국의 고용·능력개발기구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를 지역별로 직업능력개발대학교로 전환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대학교 및 직업능력개발단기대학교의 재직자에 대해 단기과정의 고도직업훈련 실시, 평생능력개발촉진센터(어빌리티 가든)의 화이트칼라 이·전직자에 대한 고도의 직업훈련 실시 등 직업훈련의 충실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 하에 일반 직업능력개발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교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바. 기능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의 실시

젊은이들의 제조업 기피현상이라든가 숙련기능자의 고령화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산업의 근간이 되었던 우수한 숙련기능의 활용과 계승을 위해 고도의 숙련기능자 선정 및 고도 숙련기능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문부과학성과 공동으로 숙련기능자 등을 학교교육의 활용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물건 만들기(제품생산)’의 고귀함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사. 커리어형성 촉진 지원제도의 실시

커리어형성 촉진 지원제도는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커리어형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즉, 직업능력개발촉진자에 의한 사업 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직업훈련의 실시, 직업능력개발휴가의 부여,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의 도입, 직업능력평가의 실시 또는 커리어·컨설팅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10에

창설된 제도이다.

커리어형성 촉진 지원제도의 목적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직업능력개발추진자를 선임하고, 동시에 동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업 내 직업능력개발계획 또는 해당계획에 의거한 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한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휴가,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의 도입, 직업능력의 평가, 근로자에 대한 커리어 컨설팅의 기회 확보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생활설계는 전 기간을 통해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내 근로자의 커리어형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커리어형성 촉진 지원제도는 훈련지원금,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도입장려금, 직업능력평가추진지원금 및 커리어컨설팅추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훈련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의 특례로 중소기업고용창출능력개발지원금과 지역인재고도화능력개발지원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표 IV-19> 커리어형성 촉진 지원제도의 유형

지원 종류	개요
훈련지원금	-피고용자에 대한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할 경우, 그 경비와 직업훈련기간중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직업능력개발 휴가지원금	-피고용자의 신청으로 교육훈련, 직업능력평가, 커리어·컨설팅을 받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휴가를 받을 경우 그 경비, 직업능력개발휴가 기간중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 도입장려금	-노동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신규로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를 도입하고 해당휴가제도에 의해 장기교육훈련휴가의 취득자가 발생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
직업능력평가 추진지원금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과 관련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직업능력평가를 받을 경우 직업능력평가 수험에 필요한 경비, 직업능력평가 기간중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커리어·컨설팅 추진지원금	-피고용자에 대해 전문기간 등에 위탁하여 커리어·컨설팅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4.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제도의 특성과 과제

가. 일본 인적자원개발제도의 특성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직업능력개발의 목표를 각각 평생학습사회의 건설과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에 두고 있어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문부과학성은 학생, 청소년, 일반성인을 주요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후생노동성은 주로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의 내용을 보면, 문부과학성은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에 후생노동성은 전문 직업 능력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 이후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최근의 인적자원개발은 문부과학성의 경우 학교 외에서 수행한 학습 성과를 학교교육과정과 연계·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최근 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의 주체가 산업체에서 개인으로 중점이 이동하기 시작하여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평생직업교육훈련의 실시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같으나, 그 방법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대상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기능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노동력 수급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무직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Off-JT에 의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비즈니스커리어제도를 실시하여 평생학습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및 종신고용의 붕괴경향에 따라 장기화하는 직업생활 속에서 숙련의 변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화이트칼라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도 Off-JT에 의한 전문적인 숙련형성을 위해 일본의 비즈니스커리어제도와 같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또한 기업은 사업 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세워 각각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및 개인레벨의 능력개발계획을 세워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커리어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이어야 하고, 사업 내 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유급교육훈련휴가나 커리어 컨설팅 등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능력개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능력개발에 대한 상호협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의 특성에서 볼 때,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은 기본적으로 OJT이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Off-JT에 의한 능력개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기능 및 기술습득의 중요성과 더불어 Off-JT를 다양화하여 OJT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목표관리제도의 활성화

일본의 기업은 인사제도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교육훈련 체계를 통한 숙련형성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직능자격제도와 목표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이 목표관리 제도를 경영목표의 전개, 실적평가, OJT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

해 TPM 활동을 통해 설비능력의 향상, 정보공개에 의한 문제의식의 공유 및 통신교육 등에 의한 근로자 개인의 인적자원개발을 활성화 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관리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목표와 개별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 자기주도적인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

일본의 인적자원개발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주도의 직급별, 계층별 인적자원개발체제에서 근로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도 기업 내에 직업능력개발추진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하도록 하고, 2001년 10월부터 평생학습 차원에서 근로자의 커리어형성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커리어형성 촉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커리어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창의성을 갖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립하는 근로자를 목표로 자기 주도적인 인적자원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라. 인적자원개발의 외부의존도의 강화

글로벌화에 따라 기업특수적인 인적자원개발보다 보다 보편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일본의 기업 내의 OJT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은 외부기관에 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일본경제인연합회는 전망하고 있다. 기업 내의 OJT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교육훈련은 신입사원은 에티켓교육이나 직장인의 예의이고, 일반사원은 의식개혁이며, 과장급의 중견사원은 관리능력 제고와 고과능력의 양성이며, 임원과 부장급은 경영전략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기업 내의 기업특수적인 인적자원개발 중심에서 사업공통 또는 일반적 기능에 대한 외부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V

한·중·일의 인적자원 관련 내용 비교 분석

1.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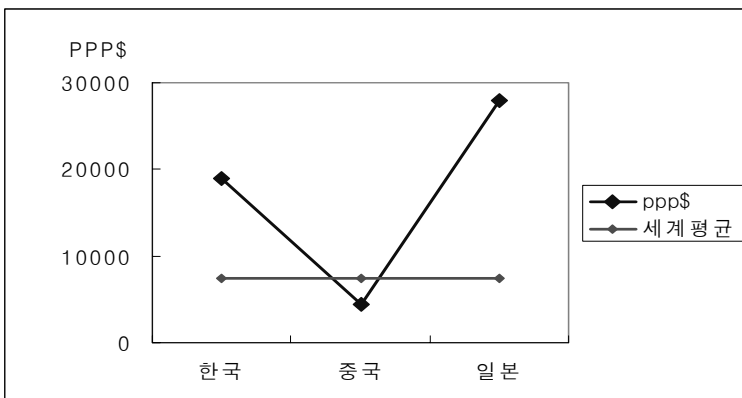
우선 경제부문을 비교해 보면, 한·중·일 3국의 GDP 규모는 아래와 같이 일본이 \$26,755로 가장 높고, 다음은 한국이 \$17,380, 중국이 \$3,976이다. 한편 세계 평균은 \$7,446을 기록하여 중국의 경우 세계 평균의 53%에 불과하다.

<표 V-1> 한·중·일 경제발전 수준 비교 (단위: %)

국별	전 세계 중 GDP 점유액 1999	일인당 GDP/PPP\$ 2000	일인당 GDP 년 증가율	국가재정지출 점유 GDP비율 1998
한국	1.32	17380	4.7	17.4
중국	3.20	3976	9.2	9.3
일본	14.08	26755	1.1	-

자료: 국제통계연감(2001). pp. 76-76. UNDP(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0-193. 세계발전지표 2001, 중국재정 경제출판사 2002년 판, pp. 234-236.

<그림 V-1> 2000년 한·중·일 1인당 GDP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pp. 190-193.

한편 한·중·일 3국의 국내 생산의 구성을 보면, 3차 산업의 경우 일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3차 산업보다 2차 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3국 중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이 동북아 국가에서 생산의 중심지임을 알 수 있다.

<표 V-2> 한·중·일 국내 총생산 구성비 (단위: %)

국별	년도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한국	1999	5.0	43.5	51.5
중국	1999	17.6	49.4	33.0
중국	2001	15.2	51.1	33.6
일본	1998	1.7	36.0	62.3

자료: 국제통계연감(2001), pp. 100-103. 중국통계연감(2002), p.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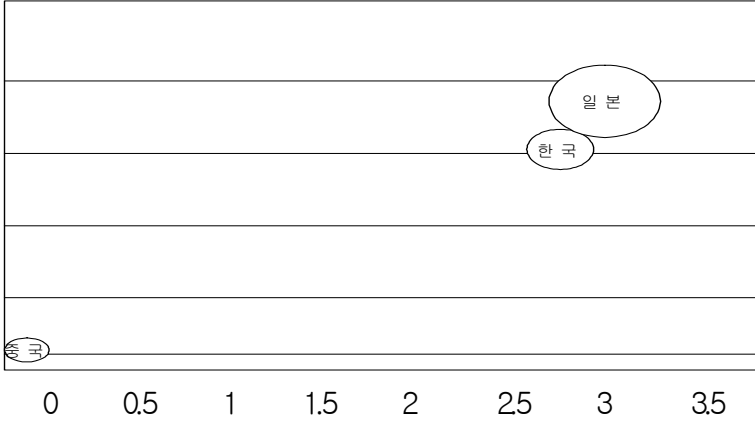
또한 3국의 과학연구와 관련한 자료를 보면, 역시 일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 중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3> 한·중·일 과학연구 현황

국별	GNP중 R&D 점유 비율(%) 1990-2000	백 만명 당 과학 및 기술자 수 1990-2000	백 만명 당 특허 획득 수 1998
한국	2.7	2139	779
중국	0.1	459	1
일본	2.8	4960	994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187-189.

<그림 V-2> 한·중·일 과학연구 현황



2. 인구와 노동력 분야

한·중·일의 인구 구성 특징을 보면, 총인구는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중국의 인구는 한·일을 합한 것보다도 월등히 많은 절대적인 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인구의 비중은 일본이 가장 높고, 중국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인구와 노동 참여율은 중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 시절의 고용 형태와 총인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5-64세의 인구비를 보면, 일본이 가장 고령화된 국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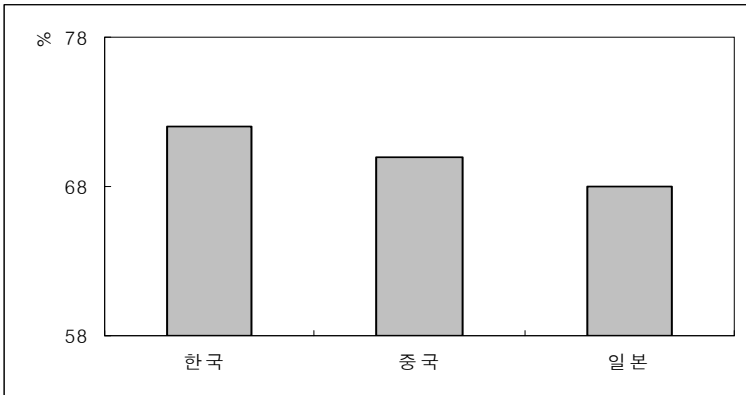
<표 V-4> 한·중·일 인구 구성 특징

(단위: %)

국별	총인구(백만) 2000	취업 인구비 1997	25-54세 노동참여율 1997
한국	46.7	60.6	76.6
중국	1265.8	75.6(95)	92.9
중국(2001)	1276.3	-	-
일본	127.1	61.5	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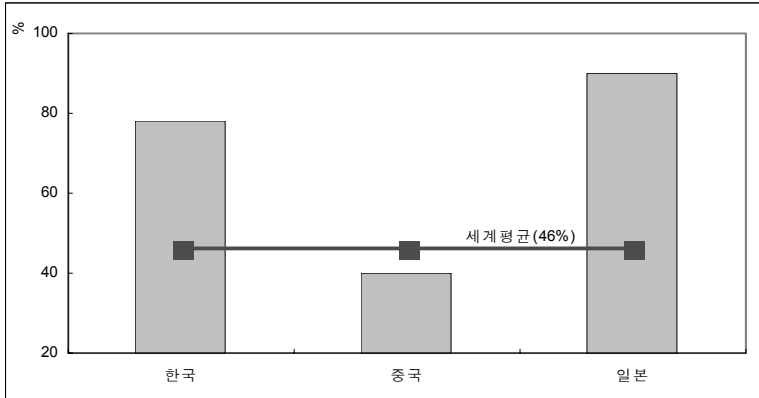
자료: 총인구는 UNDP(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2-165. 도시 인구비율은 세계은행(2002), 세계발전지표(2001), 중국재정경제출판사, pp. 162-164. 1999년 노동력시장주요지표체계, 국제노동국, pp. 27-49(중국의 경우 홍콩 및 마카오 불포함) 중국통계연감(2002).

<그림 V-3> 15-64세 인구비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pp. 162-165. 중국 제5차 인구조사 자료.

<그림 V-4> 한·중·일 도시인구 비중



자료: 세계발전지표 2001, pp. 162-164. 중국통계연감(2002)

한·중·일 근로자 부포 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의 경우 중국이 가장 높고, 2·3차 산업의 경우 일본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5> 한·중·일 근로자 분포 구조

(단위: %)

국별	년도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한국	1997	11.0	31.3	57.7
중국	2000	50.0	22.5	27.5
중국	2001	50.0	22.3	27.7
일본	1997	5.3	33.1	61.1

자료: 국제노동국(1999), 노동력시장 주요 지표 체계, pp. 107-127. 중국통계연감(2002).

한편 총 노동력 중에서 2·3차 산업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조업의 경우 일본 한국 순이며, 상업·숙박업과 금융·보험·부동산 및 산업 서비스 분야의 경우 한국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개인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6> 한·중·일 총 노동력 중 제2·3차 산업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국별	연도	제2차 산업 합계	제조업	제3차 산업 합계	상업, 숙박업	금융·보험·부 동산 및 산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
중국	1999	17.67	11.49	23.41	6.73①	0.76	6.02②
일본	1999	31.66	20.81	63.15	22.95	9.27	24.02

주: ①은 국영부문과 10명 및 10명 이상의 비농업 개인 단위 사업체, ②는 수리, 전기, 가스부문 기업.

자료: 중국통계연감(2001), 노동통계연감(1999), 중국노동사회보장출판사.

노동 참여율의 경우 중국 통계는 없지만, 한·일간의 학력별 25-64세 노동 참여율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7> 1999년 OECD 국가 중 한·일 양국의 학력별 25-64세 노동참여율

(단위: %)

국별	고교 이하		고등학교		직업기술형 대학		일반대학		합계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한국	86	61	90	50	95	55	91	54	89	55
중국										
일본	88	56	96	62	97	64	98	65	95	61

주: 중국은 OECD 회원국이 아님.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Head of Publications Service 2002, p. 273.

한편 한·중·일의 노동 생산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과학기술 및 교육 수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V-8> 한·중·일 노동생산율

(단위: ppp\$)

국가	종합생산율 1999	농업생산율 1999	공업생산율 1999	서비스업생산율 1998
한국	31219	16010	49353	26058
중국	5449	1969	11361	6734
일본	45469	17488	54505	43303

주: 1. 종합생산율: 각 취업자 평균GDP(구매력평가). 2. 노동생산율: 각 노동력 혹은 고용인력 창조 상응 GDP(구매력 평가합계는 US \$)

자료: IMD 2000년, 세계경쟁력연감 중에서 중국 인민대학출판사, 2001년 판, pp. 300-339.

이상의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한·중·일 인구는 12억 7,600만 명인 중국이 4,700만 명인 한국과 1억 2,700만 명인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15~64세 인구비율은 한국이 중국 일본을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많은 인구에도 60.6%의 한국과 61.5%의 일본 보다 많은 75.6%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1차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1차 산업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2차 산업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표 V-6>). 일본의 경우는 2차 산업 33.1%, 3차 산업 61.1%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나 최소한의 2차 산업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3차 산업 비중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2차 산업 31.3%, 3차 산업 57.7%로 2, 3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은 과정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육 분야

한·중·일의 교육보급 정도를 보면, 중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만 명 당 대학생 수는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 입학률도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V-9> 한·중·일 1996년 교육보급 정도

국별	총입학율			순입학율		10만명당 대학생 수
	초등	중등	고등	초등	중등	
한국	94	102	67.7	92	97	6106
중국	123	70	5.6	100	-	473
중국 (2001)		초중 89 고중 43	13.3	99		594
일본	101	103	40.5	100	-	3131

자료: UNESCO: *World Education Report 2000*, pp. 140-160. 중국교육사업통계연감(2001)

의무교육의 발달상황 및 교육의 보급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취학률을 살펴보면, 일본 의무 교육 종료 연령이 15세로 취학률이 90% 이상인 기간이 14년이고 연령층은 4-17세로 대부분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의무교육종료 연령이 14세로 취학률이 90% 이상인 기간은 12년이고 연령층은 6-17세로 높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다(<표 V-10>).

<표 V-10> 취학률(2001) 연령별 공·사립 교육기관의 전
일제 및 시간제 재학생의 취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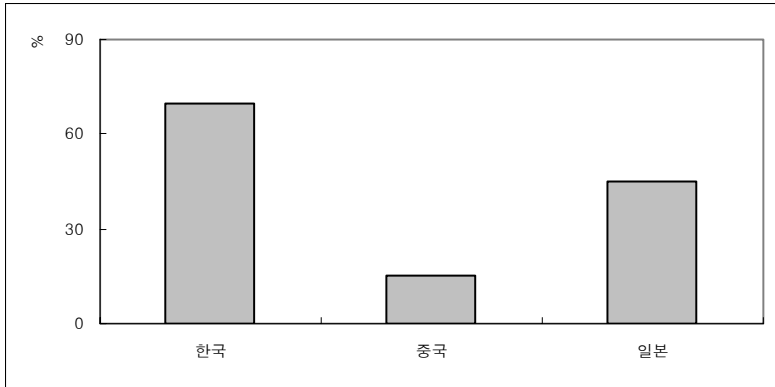
	의무교육종료연령	취학률이 90% 이상인 기간 (년수)	취학률이 90% 이상인 연령 계층	학생 연령					
				3-4세 인구 대비 4세 이하 재학생의 취학률	5-14세 인구 대비 5-14세 재학생의 취학률	15-19세 인구 대비 15-19세 재학생의 취학률	20-29세 인구 대비 20-29세 재학생의 취학률	30-39세 인구 대비 30-39세 재학생의 취학률	40세 이상 인구 대비 40세 이상 재학생의 취학률
일본	15	14	4 - 17	76.8	101.0	m	m	m	m
한국	14	12	6 - 7	18.2	92.6	79.3	25.0	1.6	0.3

주: 의무교육종료연령은 의무교육이 끝나는 연령임. 예를 들면, 종료연령 18세는 18세 이하의 모든 학생들은 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말함.

1. 2000년도 자료임.

자료: OECD. 2003

<그림 V-5> 고등교육입학율(1996)



자료: UNESCO: World Education Report 2000, pp. 140-160. 중국교육사업통계 연감(2001)

한·중·일의 총 학생 수에서 사립학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고등학교의 사립학교 학생 수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크게 차지하고 있다.

<표 V-11> 한·중·일 총 학생 수에서 사립학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국별	초등학교1996	중·고등학교1996
한국	2	38
중국	1.5	3.0
일본	1	16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Head of Publications Service 2002, p.157. UNESCO: World Education Report 2000, UNESCO Publishing 2001, pp. 164-167. 跨世紀中國教育(2002), 고등교육출판사(북경), pp. 65-77.

전체적으로 한·중·일의 학생 수 당 교사 비율은 한국의 교사 일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중국보다도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학생 수 당 교사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한국 32.2%, 중국 21.0%, 일본 21.2%로 한국이 학생 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는 한국 21.9%, 중국 19.2%, 일본 17.1%로 여전히 한국이 학생 수가 많게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 21.0%, 19.2%, 16.7%로 학생 수당 교사 비율이 21.2%, 17.1%, 14.1%인 일본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V-12> 한·중·일 학생 수당 교사 비율

국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한국	32.2	21.9	22.5	m
중국(2001)	21.0	19.2	16.7	18.2
일본	21.2	17.1	14.1	11.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Head of Publications Service 2002, p. 243. 중국교육통계연감(2001)

교육비 투입 수준을 살펴보면, GDP중 교육비 총 투입비율이 한국 7.03%, 일본 4.72%, 중국 4.83%로 나타나며, 그 중 GDP 중 공공성 교육비 투입 비율은 한국 4.07%, 일본 3.55%, 중국 3.19%로 나타난다. 하지만 GDP 중 비정부 교육비 투입 비율은 한국 2.96%, 중국 1.64%, 일본 1.17%로 한국이 총 교육비 투입비율이 비정부 교육비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표 V-13>).

교육, 부가 서비스 및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초등, 중등, 중등 후 비고 등 교육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지출과 교육 핵심서비스, 부가 서비스는 일본 \$5,913, 한국 \$3,608로 나타나며, 고등교육에서 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일본 \$10,914, 한국 \$6,118로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V-14>).

<표 V-13> 1998년 한·중·일 교육비 투입 수준 (단위: %)

국별	GDP 중 교육비 총 투입 비율	GDP중 공공성교육비 투입 비율	GDP 중 비정부 교육비 투입 비율
한국	7.03	4.07	2.96
중국(2001)	4.83	3.19	1.64
일본	4.72	3.55	1.17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Head of Publications Service 2002, p.80. 교육경비통계(2001), 中國教育部財務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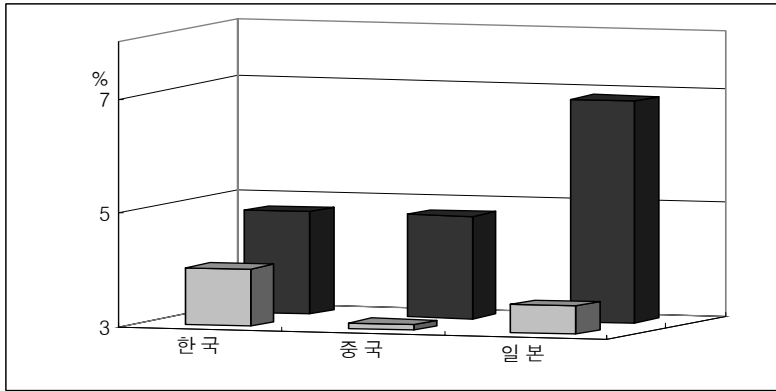
<표 V-14> 학생 1인당 교육, 부가 서비스 및 연구·개발비(2000)

서비스 유형별, 교육단계별 공공 및 민간재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학생 1인당 교육비 구성 (US\$, PPP)

	초등, 중등, 중등후 비고등교육	고등교육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지출 교육 핵심서비스 부가 서비스(통학, 급식, 기숙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지출 교육 핵심 서비스 부가 서비스(통학, 급식, 기숙사) 연구개발
일본	5,913	10,914
한국	3,608	6,118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3

<그림 V-6> 한·중·일 교육경비 투자 수준



□ 공공교육 투입의 GDP 점유비율 ■ 교육 총 투입의 GDP 점유 비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p. 80. 교육경비통계(2002), 中國教育部財務司.

교육비 부문에서 일본은 초·중·고 부문에서 OECD국가의 평균교육비 \$3,915(초등), \$5,625(중등), \$5,075(초등), \$5,515(중등), \$6,257(고등)보다 상회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경제 부문의 성장에 의해 교육부문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어진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교육비는 일본에 비해서 2배 정도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GDP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음성적인 사교육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표 V-15>).

<표 V-15> 1998년 한·중·일 각급 학생 평균 교육비 (단위: PPP\$)

국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한국	2838	3374	3692	6356
일본	5075	5515	6257	6356
중국				
OECD국가 평균	3915	5625		11720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Head of Publications Service 2002, p. 67.

25-64세 인구의 교육연한의 경우 일본(12.55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국은 8년으로 전체 인구의 교육연한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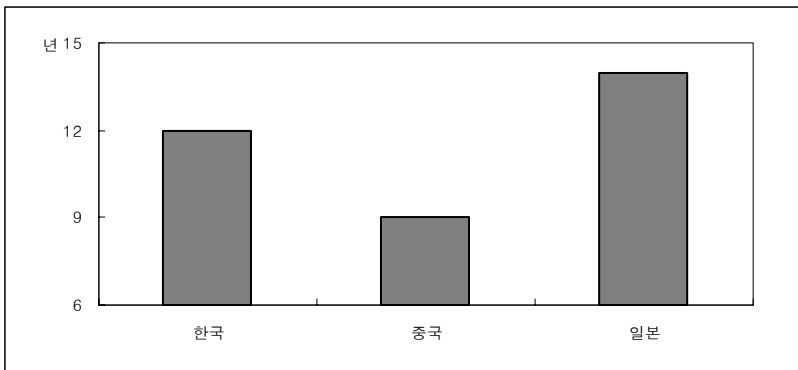
<표 V-16> 1999년 한·중·일 25-64세 인구의 교육연한
(단위: 년)

국별	전체 인구	노동력
한국	11.48	11.50
중국	8	
일본	12.55	12.78

주: OECD의 자료에 근거함. 교육 연한=(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이하×6+중학교×9+고등학교×12+고졸 이후의 비고등교육×13+고등교육×16)/100.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Head of Publications Service 2002, pp. 43-44..

<그림 V-7> 한·중·일 25-64세 인구 교육연한(1999)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p. 44. 중국은 제5차 인구조사 자료임

25-64세 인구의 교육 정도는 일본의 교육 정도 구성에서 고등교육이 높고, 반면에 중국은 중학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3국의 교육 정도를 잘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다.

<표 V-17> 1999년 한·중·일 25-64세 인구의 교육정도 구성비
(단위: %)

국별	합계	초등·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교	고졸후의 비고등교육	고등교육
한국	100	18	16	44	a	23
중국	100	42	40	13		5
일본	100	x(3)	19	49	x(1)	31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Head of Publications Service 2002, p.43. 중국수치는 중국 제 5차 인구 조사 자료임.

노동인구의 교육수준 비율을 보면, 한국은 중학교 16%, 고등학교 42%, 일본은 18%, 49%로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고학력에서는 25%인 한국에 비해 일본은 33%로 차이가 난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초등교육이 78%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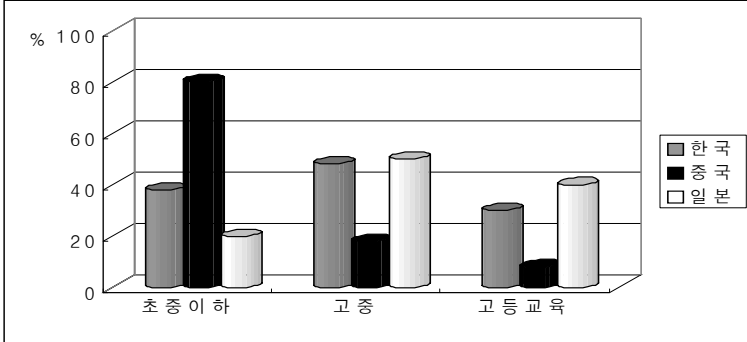
<표 V-18> 1999년 한·중·일 25-64세 노동자 교육정도 구성비
(단위: %)

국별	합계	초등·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교	고졸 후의 비고등교육	고등교육
한국	100	17	16	42	a	25
중국	m	m	m	m	m	m
일본	100	x(3)	18	49	x(1)	33

주: x표시는 a표시는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Head of Publications Service 2002, p.44.

<그림 V-8> 한·중·일 25-64세 노동력 인구 교육수준 구성 비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1, p. 44. 중국은 제 5차 인구조사 자료임

4. 생활수준 분야

<표 V-19> 한·중·일 국민 소득 수준 정도

(단위: %)

국별	년분	소득의 불평등 정도			빈곤층 인구		매일 최저 1\$ 이하 빈곤층 인구 비중
		10%최부층과 최빈층 비율	20%최부층과 최빈층 비율	지니계수	도시	농촌	
한국	1993	8.4	5.3	0.32	-	-	-
중국	1998	12.7	8.0	0.40	<2	4.6	18.5
일본	1993	4.5	3.4	0.25	-	-	-

자료: UNDP(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4-197.

<표 V-20> 한·중·일 문화생활 수준 정도

국별	가정소비지출 중 식음료 지출 백분율1996	가정소비지출 중 교육, 오락, 휴가비 지출 백분율1996	천명 당 인터넷 보유량 2000	천명 당 개인 컴퓨터 보유량1999	천명 당 신문 구독량1996
한국	28.5	15.2	8.5	181.8	1033
중국	-	-	0.1	12.2	334
일본	16.3	12.8	36.5	286.9	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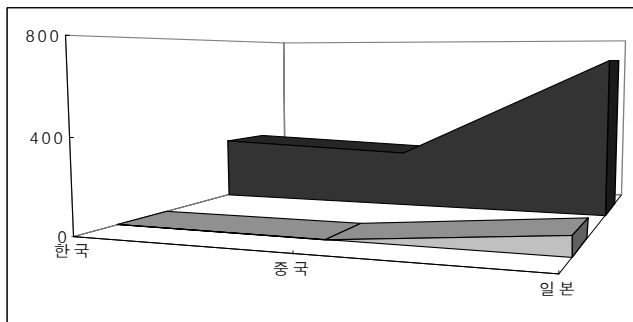
자료: 국제통계연감(2001). pp.572. UNDP(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pp. 186-189. 세계발전지표(2001), 중국재정경제출판사 2002년 판, pp. 306-308.

<표 V-21> 한·중·일 의료 및 보건 수준

국별	1인당 위생보건 지출/PPP\$ 1998	10만명당 의사 수/인1990-1999	기대 수명/년 1999	영아 사망율/%1999
한국	720	100	72.9	8.4
중국	-	162	70.1	30.2
일본	1844	193	80.6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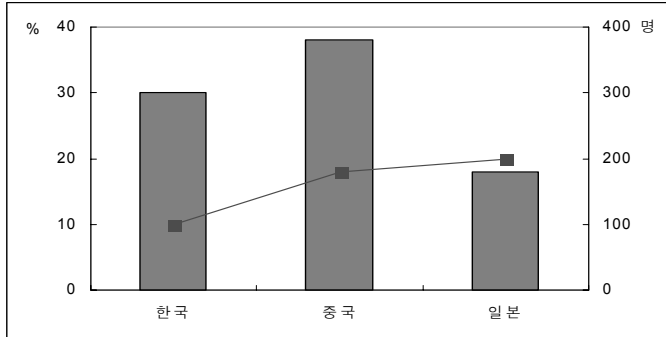
자료: 인류발전보고(2001), 중국재정경제출판사 2001년판, pp. 156-159. 국제통계연감(2001), p. 61, p. 64. UNDP(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pp.166-169.

<그림 V-9> 한·중·일 정보화 수준



□ 2000년 매 천명 당 인터넷 주기 보유량. ■ 2000년 매 천명 당 전화 간선 보유량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pp. 186-189

<그림 V-10> 중국가정의 생활환경



□ 가계소비지출에서 식음료가 차지하는 비율(1996)

■ 10만명당 보유 의사 수(1990-1999)

자료: 국제통계연감(2001), p. 572.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pp. 166-169.

중국통계연감(2002).

생활수준은 경제수준과 정의 관계이다. 그리고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지니 계수가 0.32로 1998년의 0.43보다는 많이 차이를 보이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0.40으로 보통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은 0.25로 적정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비해 식음료 지출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표 V-20>).

의료 및 보건 수준에서 1만 명당 의사 수에서 한국이 100명, 중국이 162명, 일본이 193명으로 중국의 의사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아 사망률에서는 한국이 8.4%, 중국이 30.2%, 일본이 3.6%로 앞에 내용과 대조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해 영아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V-21>).

5. 시사점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의 인적자본에 대한 기본사항과 각국의 인적 자원 실태, 정책 목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동북아는 지금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는 값싼 노동력으로 실질적인 세계의 공장으로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자원의 양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3국 중에서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일부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중국의 정책상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이 더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거품경제이후에 새로운 분야 개척과 국내 경제의 안정을 기반으로 세계 부품·소재 및 미디어 산업과 IT산업에서 세계정상에 있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예상되며, 불경기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로 장기적인 인력 수급과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1970~80년대의 고속 성장을 끝내고 제조업위주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IT산업과 반도체 및 일부 소재산업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반면에 양적인 인적자원의 증가는 있었지만, 질적인 증가의 부재와 전문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공조 미비로 인해 청년실업이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는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산업발전과 인적 자원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투입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과 중국 경제는 그간 자본투입의 확대를 통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자본투입 주도형(investment-driven)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투입 및 노동투입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 즉 생산요소 투입의 양적 확대에 의한 성장전략은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성장을 지속

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전략의 기저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인력공급 중심, 거시적·정량적 접근방식으로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주도, 특히 산업계의 역할 강화와 인력수요 중심, 중위적·정성적 접근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동북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국은 앞으로의 상황 즉, EU나 NAFTA 같은 경제 블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하고 밀접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은 미래의 정치·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로의 우수한 부분과 미비한 부분을 공유함으로써 한 단계 더 앞선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즉, 비교우위의 상황과 같이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일본과 한국의 집약기술을 더함과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상황에 맞서 공동의 인적자원 개발과 교류에 정책적·정서적 그리고 기업 간 국가 간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EU사례 분석

1. 유럽의 통합²¹

유럽연합은 경제통화 통합 및 정치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전통적 의미의 주권국가와 국제기구의 중간 형태를 띠고 초국가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통합을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으로 나누어 볼 때 무역장벽의 해소 및 화폐통합이 중심인 경제통합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통합의 진전과는 달리 사회통합은 상당한 진전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의 모태는 유럽경제공동체(EEC)·유럽철강공동체(ECS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3개 기구로, 이들 기구는 원래 개별적으로 체결한 조약에 따라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운영되다가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1994년 유럽연합(EU)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니스조약이 체결되면서 2004년 5월 1일 10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25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가 되었다. 기존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15개국이며, 올해 추가 가입한 10개국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등이다. 유럽연합(EU)은 25개 회원국, 인구 4억 6,000만 명으로 거대시장을 이루며, 확대된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과 비슷한 9조 5,000억 유로로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1 수준에 이르고, 교역규모는 미국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2조4천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²¹ 이호재(1999), “유럽통합과 교육협력”; 이지연(2003), “유럽연합의 직업교육 및 훈련”을 주로 참고하였고, 이밖에 다양한 인터넷 자료와 기타 문헌을 보조자료로 활용하였음.

유럽통합은 경제적 동기보다 정치적 동기가 출발점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이 경제적으로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10개국을 흡수하기로 결정한 것도 1950년대의 출범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계산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동서의 이데올로기적 대결구도는 1989년 소련이 붕괴하고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일단 해소되었지만 유럽의 평화와 안정은 이들의 경제성장과 민주적 체제의 구축에 기반을 둔다는 판단 때문에 기존 회원국들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확대에 동의했다. 올해의 확대로 유럽연합은 유럽 전역을 거의 모두 포함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가장 높은 단계의 경제적 통합을 성취했다. 물론 이번에 새로 가입한 회원국들은 기존 회원국과는 현격한 경제수준의 차이가 있어 노동의 자유이동 등 공동체의 기본적 권리가 잠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과도기가 지나면 그들도 저임금과 저개발의 이점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격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EU의 교육체제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언어교육과 이웃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계속교육의 필요성과 유럽의 가장 큰 자원은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인들의 창의력과 지적 능력 및 숙련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들에게 점차 확산되었다. 또한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교육 참가자들의 유럽 내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 간 강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귀결되었다.

유럽연합이 합의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인들이 자신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각 학교에서 전통적인 학교의 정규과목은 물론 과외활

동들은 과거에 지향해 왔던 생산성이나 직업경험뿐만 아니라 유럽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인식, 자유와 평화 그리고 환경보호문제 등 학제간의 주제와 실제 등을 다루는 것으로 영역을 넓혔다. 유럽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인 '통일성 속의 다양성'은 통일성과 다양성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유럽의 통일성이 단순하게 공통적 유산의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의 필요성이 장래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촉진제, 즉 통합과정의 참여자들에게 통일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문화를 내포하는 유럽의 통합 지향적 행위를 추진하기 위한 역동적인 자극제라고 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교육정책은 유럽발전과의 상호 연관성을 배제하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의 교육목표를 설정, 상호비교, 경험의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소크라테스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EU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표는 교육시스템의 조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교육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경쟁력을 키우자는 데에 있다. 또한 유럽 전체 차원에서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모든 유럽인들에게 양성, 계속교육의 이동성을 보장하며, 교육을 통해 습득된 능력을 상호인정하고자 하는 목표를 아울러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1996년에 회원 국가 간의 '자격증 상호 인정 제안서(ECTS)'를 작성하여 유럽 내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합의했다. 또한 개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외국에서 참가한 교육의 종류와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직업교육 유럽패스를 만들어 유럽 내 어디에서든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서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의 국민들은 유럽국가 어디에서든 직업교육에 참가할 수 있고, 또 참가한 교육과정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유럽연합의 시장통합은 상품의 자유이동에서 시작하여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을 통한 시장통합으로 발전되었다. 유럽연합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확대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시장성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직업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²²

유럽연합에서의 교육은 크게 국가별 교육, 유럽차원의 교육, 국가 간 교육과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가별 교육은 모국어, 국가의 문화와 역사 등이 필수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교육의 책임은 국가의 교육부가 지고 있다.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일부 교과목의 내용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육 자료의 사용을 유도하는 교육 내용의 통일과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유럽의 협력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역사와 지리 같은 과목에서는 교육내용의 조정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다.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리나 역사 그리고 문학과 같은 과목들은 민족적 편견이 개재되어 있는지를 검토 받고 있다. 또한 학계의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간 위원회들은 유럽의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오고 있다.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자국의 언어나 외국어를 막론하고 컴퓨터의 사용과 같은 효과적인 교습방법의 개발이 촉진되어 왔다. 또한 유럽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고양됨으로써 다른 회원국들이 발행하는 교과서에 대한 연구도 촉진될 것이다. 유럽 회원국들은 국가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국의 민족적 가치를 함양하거나 국가의 자존심을 키우고자 한다.

유럽차원의 교육은 재학생의 경우 유럽연합의 어느 지역에서든 거주할 수 있고, 졸업생의 경우 유럽연합의 어느 지역에서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유럽에 관한 정보 및 외국어 능력 등과 같은 지식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회교육 또는 개인교육에 있어서 유럽적인 측면들이 구체화된 유럽시민의식 교육도 포함된다. 1990년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산하 시민의식 전담그룹이 정의한 내용에 의하면 유럽차원이란 “젊은이들이 유럽에서 편안하면서도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시민의식이라는 개념에는 대중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

²² BIBB, 2000; 홍선이, 『통일 이후 구동독과 구서독 지역의 직업계속교육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에서 재인용.

임을 인식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 역시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며, 따라서 이 개념은 정치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환경교육과 환경보호 등이 빠른 속도로 유럽차원 교육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그리고 1985년 유럽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안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유럽차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도 더욱 자세하게 조정되어 가고 있으며 상호방문과 교류 그리고 교육과정개발 협력 등을 통해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학교교육 과정과 교사연수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학교들 간의 자매결연이나 협력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적어도 3개 이상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참여하여 상호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보편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다양한 유럽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회원국들 스스로에 의해 그리고 회원국들 스스로를 위한 공동체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직업교육은 유럽공동체가 기초하고 있는 경제적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직업교육은 고용 및 기술개발협력을 위한 교육 이외에도 숙련기술 및 실무현장에서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구성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국적인 경험은 해외에서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다. 유럽공동체 조약의 제 128조는 해외에서의 업무 경험을 포함한 실제적인 노동의 경험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공동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산업이 과학적,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연구와 개발 분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제 15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필요에 의해 선정된 해당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회원국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유럽위원회(1997)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통합을 위해 교육제도가 세 가지 시급한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경제적, 기술적으로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특히 노동시장에서 실업의 장기화 및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단순히 공리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의 가치를 넘어선 실질적인 기본가치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의 기본목표는 개인의 자율성 개발, 근로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회의 확대, 그리고 근로자들의 직업 능력 향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교육제도가 추구해야 할 이 기본목표에 기초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 회원국 모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되 각 국가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가. 교육을 통한 유럽 시민정신의 확립

문화적, 경제적, 자연적 환경이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 교육제도는 전형적인 기존 사고의 틀을 깨고 다음의 시민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민주적인 다수결 원칙의 존중,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면서도 책임감이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정신으로서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 사회적 연대성, 사회적 통합 및 공동체 정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인류평등주의에 기초한 시민정신으로 인종이나 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별이나 편견의 배제, 평등의 가치에 대한 이해, 교육 기회의 균등성 보장 등이다. 넷째,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성 및 개방성의 가치에 기초한 문화 간의 공존이 인정되는 시민정신의 강조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관의 정립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시민정신 확립을 위해 유럽위원회는 현재의 유럽 국

가들의 교육프로그램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교육은 외국어 능력의 배양과 유럽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역사나 지리 그리고 철학과 사회과학 등의 교육내용을 현대화하여 한 국가의 경우만을 강조하기보다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시에 과거의 인종 편견적이고 차별적이며 정치적 목표를 위해 무력적인 수단을 정당시하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셋째, 교육제도의 민주적 운영절차가 확립되고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도자 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들 및 교육을 담당하는 각급 학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의 실현을 위해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교육제도와 지역 사회 일상인들의 생활 교육 상호연관성의 증대, 그리고 단일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의 참여 증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교육을 통한 유럽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유지

유럽 국가들은 최근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여러 기준에서 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실업률로 볼 때 1990년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러 산업이나 기업수준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및 아시아의 여러 신흥공업국들이 유럽 국가들을 빠르게 추격하거나 앞지르는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교육제도의 한계가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제도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고용유지를 위해 직업교육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쟁력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젊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숙련이나 자질 및 근무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 국

가들은 지속적으로 배움이 강조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은 각 개인 근로자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러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기관은 높은 수준의 질과 혁신을 존중하는 조직으로 변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개혁이 요구된다.

첫째 일반교육과 직업교육과의 관계나 이 제도들의 운영과 관련된 주체들(교육이나 훈련기관, 민간 기업부문, 정부, 지역 및 지방기관들 및 사회적 파트너들)간의 유기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의 정립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개혁을 의미한다.

- 일반교육의 의무교육과정에서 기초적인 능력들이 교육되어야 한다
- 교육 분야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교수방식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 그룹으로 함께 협동해서 일하는 방법이 교육되어야 하고 이러한 작업방식에 대해 새로운 자격증이 부여되어야 한다.
- 유사한 인접학문을 포괄하는 교육이 중고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 간단한 기술적 능력 및 자격의 습득은 중등교육 이상의 전 교육과정에서 가능해야 한다.
- 교육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기업들이 직업교육의 과정의 결정이나 그 과정의 실질적인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사 수준에서 교육이 강조되는 기업문화가 장려되어야 한다.
- 학교에서는 양질의 일반교육의 제공에 집중하고 기업들은 이 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 교육기관과 기업들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다양한 유기적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 실질적인 직업의 경험이나 회사 내에서의 업무수행의 기회는 가능하면 낮은 교육단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유럽국가 근로자들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기관의 질을 향

상시시키기 위한 교육제도의 두번째 개혁방향은 유럽 내에서 인적자원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해야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스스로 결정해서 학습하는 평생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능력에 대한 자세한 분류가 정의되어야 한다.
- 숙련에 대한 자격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여러 나라나 지역에서 유효해야 한다.
- 어떤 분야의 숙련과정과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관련된 사용자 단체나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시험과정을 통해서 직업교육의 자격조건이 공인되어야 하고 유사한 과정의 유사한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는 경우를 늘려나가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개혁방안은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직업분야를 정의하고, 이에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교육기관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몇십 년 사이에 주요한 직업분야에서 미래직업이 발굴되어야 하고, 이를 현재의 직업과 연관시켜 새로운 직업에 대한정의를 확립함과 동시에 미래직업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 교육을 통한 유럽연합차원의 사회적 통합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난 수십 년 간 교육의 민주화를 통해서 교육 참여율 등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부나 사회계급의 차이와 무관한 교육 기회의 평등한 제공은 아직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유럽의 각 국가들의 교육제도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족 및 사회적 배경에 지배를 받던 교육 기회의 불평등한 배분이 시정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의 개혁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정규교육 이전에 이루어지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

어야 한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학령 전 교육의 질에 따라 이후의 교육의 성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흔하게 관찰되고 있다.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못 가지는 아동들을 위해 자율적인 지역조직이나 지방정부, 지역사회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교육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지도에는 특히 중요한 두 번의 시기가 있다. 그 한 시기는 이들이 초등교육 이후 직업학교와 다음 단계의 일반 교육기관 중 선택을 해야 할 때이고, 다른 시기는 대학입학시기이다. 직업의 종류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취업 기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양한 직업과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유의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와 상담의 제공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유럽 국가들은 지난 10여 년 간 경제적인 구조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실업률, 특히 청소년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현재의 열등한 지위가 지속되어 유럽연합의 사회적 통합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주택, 건강, 사회복지 및 고용 등 다양한 정부정책의 실행과 함께 교육의 개혁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열등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 중도 포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의 지역조직으로부터의 지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대학생과 관계를 형성해 준다거나 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제 교육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첫째는 사용자나 정부가 유급 교육휴가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둘째는 원격대학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며,

세 번째로 산업이나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이에 따른 평생교육을 제도화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라. 정보사회에서 교육의 필요성 증대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은 장소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공될 수 있어 평생교육을 용이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변화들을 보면 다음의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관적 지식보다는 창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지식의 비중이 늘고 있다.
- 산업사회로부터 평생 동안 배우는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 교육의 사명이 강의를 통한 일방적인 교수 형태로부터 개인들의 배움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맞는 학습방법의 제공으로 전환중이다.
- 대화의 과정이나 지식습득에서 기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이 미래에는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 학교나 대학과 같은 정형화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유동적인 형태의 교육 구조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학습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고하여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교육의 확대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의 정책들이 유럽위원회(1997)에 의해 제시되었다.

- 교육에 필요한 하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기관과 교육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등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학교와 교육기관의 교사들에 대한 정보기술의 활용이 장려되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식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교육과정이나 자격인정제도의 혁신을 유도한다.

마. 학생 및 근로자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 충족

유럽 국가들의 교육제도가 이상 언급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의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제도가 그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수요라 함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를 가지고 새롭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숙련을 습득하며 사회적 통합을 위한 개인적 인적자원의 축적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의 개념을 도입, 교육제도를 분권화시켜 도시나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럽 국가들의 교육제도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민간 기업이나 국영기업 등의 조직과는 달리 교육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측정은 어렵고 상당한 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나 교육생들이 실제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이러한 배움이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등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교육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한 이후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향상된 생산성이나 효율성으로 인한 이득을 각 기관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교육기관과 운영자, 교사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만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될 수 있다.

셋째, 교사와 기관의 운영자를 위한 업무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이들이 교육제도의 개혁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학교교사들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보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행동,

경제, 기술적 단면을 반영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교사들에게 사전교육은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과 자기개발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연령이 높은 교사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대부분 유럽국가의 현실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에 따른 과정 개발, 참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교육담당자의 역량, 그리고 교육 이후의 평가를 통한 개선노력 등이 요구된다. 또한 기관장과 운영자는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 변화와 가치관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초기교육 및 계속교육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교육기관의 성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결과는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관의 선택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정하면서도 모든 기관을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이 사회의 다른 주체들과의 협력에 대해 개방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사업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기관에서는 산업체와의 협조관계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산업체 측에서는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상 살펴본 유럽국가의 교육제도 개혁방향은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유럽연합에서는 국가별 다양한 교육 제도를 인정하고 각각의 특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기존 유럽 각국의 교육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과 방법을 시도하며 유럽연합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EU의 교육프로그램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경제 통합에 역점을 두고 성장해 온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는 경제 영역에서만 아니라, 외교안보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크라테스(SOCRATES)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통합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을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고,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가 1996년을 ‘유럽 평생교육의 해’로 선언한 이후 유럽연합은 교육 분야의 상호협력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²³ 유럽공동체는 교육 분야에서 유럽 국가들의 통합적인 노력과 교류를 강조하면서, 기존 교육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확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SOCRATES, LEONARDO Da VINCI, Youth Programmes²⁴, Tempus²⁵ 등이 있고, 이들 프로그램은 청소년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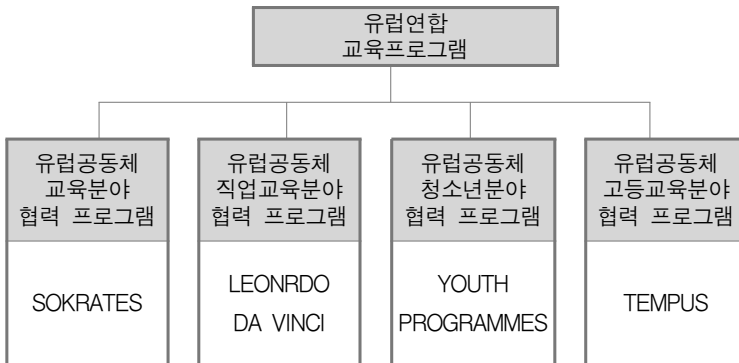
²³ 정중화, 『유럽연합 국가들의 교육제도』 (서울: 법문사, 1997).

²⁴ Youth Programme은 청소년 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유럽을 이해하게 하고, 시민의 행동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5~25세의 EU 회원국이나 Iceland, Liechtenstein, Norway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동체 활동으로 청소년 교류와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출신수법, 독창력, 일치단결력을 기른다. 둘째, 청소년과 노동자를 위한 지원으로서, 청소년과 노동자를 훈련시켜 유럽 협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회원국 기구간의 협력에서, 협력관계 네트워크를 통하여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회원국의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을 긴밀히 한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구소련, 지중해 연안,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비회원국과 교환을 추진한다. 다섯째, 청소년을 위한 연구 정보로서 청소년 정보매체의 출판 및 보급, 네트워크의 창출과 같은 경험의 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고취시킨다.

²⁵ Tempus는 1990년에 설립된 고등교육분야의 유럽간 협력 프로그램으로써 중·동부 유럽, 구소련과 몽고의 시장경제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설치한 고등교육 시스템의 개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원국으로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첸,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가 가입되어 있다. 1996~1997년 구소련이 프로그램에 부분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몽고,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이 참가하고 있다. 또한, Tempus 프로그램은 G-24의

양하게 구성되어 일반교육 이외에도 직업교육, 언어교육, 교육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의 통합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통합교육 프로그램들은 회원국 간의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고, 따라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과학과 기술 분야의 지역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공동체는 각 국가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상하여 통합교육 프로그램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VI-1> 유럽연합의 교육프로그램



자료: 이지연(2003). 유럽연합의 직업교육 및 훈련.
(European Commission, 1997d).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다(Iceland, Norway, Switzerland, USA,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Turkey 등). 유럽공동체와 통합교육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중·동부 유럽국가의 2,200개 기관으로부터 51,000명 이상의 교사와 2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Tempus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 소크라테스 I (Socrates I 1995~1999)²⁶

1) 배경

소크라테스는 1995년 3월 14일 유럽의회와 이사회(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에서 결정되어 최초로 유럽공동체 수준에서 교육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실천 프로그램이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과 링구아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포함하였고, 모든 수준의 교육에 관련된 활동 및 행위 체제를 통합하는 것을 기초로 두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EU 조약) 제 126조 및 127조²⁷를 법적 근거로 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고, 이를 위한 예산은 약 9억 9,300만 ECU²⁸이다. 참여국가로는 1995년에서 1999년까지는 EU 회원국(15개국) 및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를 비롯한 EEA 3개국으로 총 18개 국가들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키프로스,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등의 6개국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1999년에는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발틱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5개 국에도 적용되었다.

Socrates 프로그램은 유럽공동체의 교육개발, 상호 언어의 습득, 그리고 상호간의 문화 교류 촉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 회원 국가들의 다양한 교육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주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타 국가에 대한 친밀성, 언어 및 생활양식의 습득은 좋은 교육적 자산이므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 및 학생교환 등과 같은 초국가적 교육의 교류, 자국 및 외국에서의 원격학습 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의 범위는 유치원에서 대학원 과정까지의 모든 형태, 모든 수준의 교육에 적용되며 학생, 교사, 행정가 등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의 1996년도

²⁶ <http://bmbf2002.bringe.net>.

²⁷ 1995년 5월 1일(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이후 제 149조 및 150조항으로 조정됨

²⁸ 당초 예산은 8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적용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되었다.

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25세 이하 유럽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1억 1,900만 명의 젊은이들, 32만개의 학교에 등록된 6,900만 명의 학생들, 5,000개 이상의 대학과 기타 고등 교육 기관에 다니는 1,100만 명의 학생들 및 수백만 명의 성인 학습자들이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최초로 모든 연령의 교육을 포괄하는 전 유럽 차원에서 추진되는 과제이며, 평생 학습의 개념을 향한 광범위한 접근의 일부분이다.

둘째, 다른 유럽국가의 다양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셋째, 특정한 환경에서 적절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수단으로서 국가를 초월한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진다.

넷째, 전 유럽적 차원에서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섯째, 공동 교과과정개발, 학교 프로젝트, 교사와 대학 교직원의 교환 방문, 전자적 원격 학습 방법의 이용, 교육 행정기들을 연결하는 전 유럽 망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섯째, 빈민 지역이나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일곱째, 장애인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적 수요와 균등한 기회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다.

아홉째, 상호 교류와 교환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목적

유럽공동체의 교육개발, 상호 언어의 습득, 상호간의 문화 교류 촉진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 회원 국가들의 다양한 교육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주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타 국가에 대한 친밀성, 언어 및 교수 및 학생교환 등과 초국가적 교육의 교류, 자국 및 외국에서의 원격학습 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의 9가지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각 회원 국가의 문화유산을 이용하여 유럽 시민 정신을 고취하도록 전 유럽 적 차원에서 각 수준의 교육개발에 노력한다.
- 유럽 연합의 언어에 대한 지식의 질적·양적 개선 촉진과 문화 간 차원의 교육을 촉진한다.
-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각 회원국의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기관들의 지식과 교육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 교사의 교류를 장려하여 전 유럽적 차원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교사 자신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한다.
- 학생들의 교류를 독려하여 연구의 일부분을 다른 회원국에서 완성하도록 지원한다.
-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의 접촉을 장려한다.
- 교육 분야에서 전 유럽적 협력을 위한 열린 공간 개발을 위해 졸업 증서, 연구기간, 그 외의 자격 등에 대한 승인들을 지원한다.
- 전 유럽적인 배경에서 개방 학습 및 원격 학습을 장려한다.
- 교육 시스템에 관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회원국이 교육 정책 입안자들 사이의 상호 경험 교환을 장려한다.

3) 영역

(1) 에라스무스(Erasmus): 고등교육 프로그램

에라스무스는 Socrates의 1987년에 수립된 고등교육 활동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유럽의 발전에 중요한 미래 시민 세대에 대한 교육을 위해 고등교육 부문에서 새로운 교육 기법들과 평생교육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고등교육 기관들의 범유럽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 학생 및 행정가들의 교환과 교류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거의 모든 유럽 대학들이 에라스무스에 참여하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고등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

며, 대학 간 초국가적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 분야에서 유럽의 이동성을 높여주며, 공동체 전체를 통한 연구 및 자격의 학술적인 인정 및 투명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참여대상 범위는 모든 형태의 고등교육기관들로 대학 교육 및 박사 학위에까지 이르는 모든 수준의 고등교육에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참가 대학들은 승인된 모든 에라스무스 활동들을 포함한 ‘기관 계약(institutional contracts)’을 위원회와 체결하고, 계약은 공식적으로 3년 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²⁹ 에라스무스는 크게 두 가지의 활동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유럽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도록 대학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적 협정에 의한 대학의 예산지원은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럽협력개발기금으로 대학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역은 매년 기초 연구 주제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위원회 예산이 지출된다. 예산지원 활동은 다시 6가지의 활동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 학생교류 활동으로서 지원 보조금은 학생선발, 외국어 학습, 정보 활용, 적응, 배치, 학비 등에 사용된다.
- 교수교류 활동으로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수는 다른 참가국에서 단기(1-8주) 또는 중기(2-10개월) 프로그램을 맡아서 지도해야 한다.
- 여름코스를 포함하는 단기 집중 교수-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이는 소수 인원이 참가하는 국가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지원된다.
- 국가 간의 예비방문으로서 교수, 행정 관계자, 학생까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최대 3주 정도의 사전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유럽학점상호인정제도(ECTS)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이 ECTS는 대학학점 취득코스를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목적은 협력 관계 사이의 학술연구 과정에 대한 인식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 대학교육과정의 협력발전을 위한 지원으로서 이는 유럽적 기준(표준)과 통합된 언어코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각 분야의 교류의 촉진이나

²⁹ 정지선, 『전문대학과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학위과정 공동 운영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중재의 역할을 한다.

둘째는 다른 회원국에서 연수활동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다. 에라스무스 보조금은 다른 회원국 내에서의 연수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지켜야 한다. 기간은 최소 3개월이나 1학기 내로 하며,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대학이나 학생은 참여 학생의 모교가 이러한 유학연수활동을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예산지원에 의한 보조금의 구성은 학생교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여행경비, 외국어 학습비, 생활비)을 포함하고 있다.

(2) 코메니우스(Comenius): 학교교육 프로그램

코메니우스는 학교교육 분야의 모든 단계(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학교 간 협력 프로그램, 유럽공동체간 문화 교육을 위한 현장 활동, 교사 및 교직원에 대한 현직연수 교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개방된 교육 분야에서 공동체 수준의 실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코메니우스 프로그램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에서 전 유럽적 차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코메니우스는 학교에서 배우거나 가르치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다양한 전통, 문화, 지역적 독자성 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럽 발전에 관한 공통의 역사에 뿌리를 같이 하며, 넓고 외부 지향적인 유럽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키도록 돕고 참여 국가들의 교육시스템을 풍부하게 하거나 이를 보충하고자 하고 있다. 에라스무스의 주요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간 협력활동이다. 유럽공동체는 유럽 교육 프로젝트(EEP)를 통해 학교 간 협력을 지원한다. 학교 간 협력은 세 나라의 세 학교 이상이 참가하는 다국적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유럽 교육 프로젝트는 학교 생활 속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한 가지 이상 연구한다. 각 학교는 코메니

우스에서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직업, 기술, 통합교육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얻고, 이러한 자격은 참가국들에 의해 결정된다.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은 협력준비를 위한 방문, 교사, 교육 당국자의 교류 또는 현직 배치, 주임교사의 연구방문 등과 같은 사업에 사용된다.

둘째, 유럽공동체간 문화 교육으로서 노동자, 외무 공무원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이다. 본 활동은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수준에서의 문화적 이해증진 프로젝트와 교사 교육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셋째, 교육관계자를 위한 현직연수이다. 코메니우스에서는 연수기간 동안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3) 링구아(Lingua): 언어 교육 프로그램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럽공동체 내의 다른 국가들의 언어를 학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1996년에 착수된 Lingua 프로젝트는 교수방법 및 자료개발, 외국어 교수 방법의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기금은 교수매체와 새로운 교수방법, 외국어와 다문화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Lingua의 목적은 Leonardo da Vinci에서의 외국어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외국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외국어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며, 참가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Lingua는 다른 Socrates 활동의 외국어 학습을 보완하는 특별활동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모든 수준과 영역에 걸친 관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모든 공용어는 Lingua에서 활용되는 언어들이다. 그러나 나머지 4개국의 언어(아일랜드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어와 노르웨이)는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다. Lingua 프로그램의 참여를 신청한 학생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1997d).

Lingua는 크게 다섯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교원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유럽협력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사들의 외국어 연수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교육과정, 교육매체, 교사와 지도자의 교수 기술의 향상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을 교육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적어도 2개국 이상의 참여로 협력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외국어 학습 분야에서의 현직연수: 외국어 교사의 자질 및 외국어 교수 방법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미래의 외국어 교사를 위한 지원: 미래의 외국어 교사들을 위한 활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외국어 기술을 증진시키며 외국어 학습과 관심을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외국어 학습, 학습기자재(도구) 개발 및 외국어 기술의 습득 지원: 외국어 학습도구 개발과 외국어 기술 습득을 위한 초국가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외국어 학습 교육협력 프로젝트: 외국에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외국어를 습득한다. 활동 주제는 협력을 증진하고 외국어 학습에 자극을 유발시킬 수 있는 주제 중에서 선정한다.

(4) 개방원격학습(ODL: Open and Distance Learning)

개방원격학습은 공간, 시간, 교육내용의 선택 또는 교육자원의 융통성을 향상시키고, 원격으로 교육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 또는 비기술적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교육협력의 열린 장에 학습자가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해주고 있다. 개방원격학습의 활동내용은 개방원격학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조직적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이러한 형태의 학습을 위한 교육 매체와 자원의 이용도 및 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으며, 개선 방법으로는 개방원격 학습 분야에서의 유럽 협력을 위한 지원과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의 다른 영역 내의 활동(Actions)에 개방원격 학습 적용을 위한 지원 두 가지가 있다.

(5) 성인교육(Adult Education)

- 성인교육의 목적은 유럽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유럽 협력을 통한 성인교육 준비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레오나드로 다빈치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레오나드로 다빈치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경제적, 직업적 목적을 위한 성인교육 활동과는 달리,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는 전 유럽 차원에서 성인교육의 모든 분야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행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이 2가지 프로그램에서 제안된 실행들은 참여 국가들에서 뿐만 아니라, 전 유럽수준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활발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교육에서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이해를 증진하여 유럽 각국의 문화, 언어, 관습을 이해함으로써 유럽의 중요 관심사를 성인교육에 반영한다. 둘째,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혁신적인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킨다.

(6) 정보와 경험의 교류(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유럽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각 회원국에서의 교육 정책, 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교환하고 있다. 이 영역에 포함된 활동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활동은 교육정책 개발 및 교육동향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어떤 활동은 정보와 경험의 초국가적인 공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 주요 대상이 되는 집단의 상호 교환 및 방문에 더 많이 관련된 것이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활동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공통 관심사의 문제로서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특별 연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정보 및 경험의 교류, 활동의 수행(협의회, 세미나, 전문가 교환, 연구방문, 전문 프로젝트) 등이다.

둘째, 유럽 교육 정보망이다. 이는 회원국의 국가적 조직을 기초로 유럽공동체의 브뤼셀에 유럽의 정보망을 설치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교육 부문에서의 의사 결정자들의 방문연구이다.

넷째, 범국가적 학술정보센터(NARIC)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나. 소크라테스 II (Socrates II: 2000~2006)

1) 배경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I을 승계·발전한 프로그램으로 2000년 1월 24일 유럽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으며, 시행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예산은 모두 7년간 약 18억 5,000만 ECU 이상이며 참가국은 모두 31개국으로 EU 회원국 15개국, EFTA 3개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그리고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터키(예정) 등이다.

소크라테스 II의 목적은 첫째, 모든 수준에서 유럽 차원의 교육의 신장, 둘째 유럽국가의 언어들에 대한 지식의 향상, 셋째 모든 부분의 교육에 있어서 협력과 이동 촉진, 넷째, 교육에서의 혁신을 조장, 다섯째, 교육의 모든 부문에서 기회균등을 조성하고자 한다.

2) 교육의 종류

(1) 코메니우스: 학교교육 프로그램

유럽의 340,000개 학교 중 10,000학교가 코메니우스 1단계(1995~1999)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단계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학교가 참여를 했다. 코메니우스 활동은 교육의 초기 단계(유치원 및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술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까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메니우스는 교육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교사, 교직원, 학생 등)과 관계되며, 학교 밖의 조직이나 기관들(협력기관, NGOs, 지방 정부 등)과도 관련이 있다. 코메니우스의 목적은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유럽적 차원에서 신장시키며, 언어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간 체제 학습, 유럽 시민의식의 기초, 소외집단에 대한 지원, 학교에서 학업표준 미달에 대한 대응, 소외(따돌림)에 대한 반대 등과 같은 주요한 이슈를 강조한다. 코메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주요한 3가지 실천적인 활동으로 구성된다.

- Action 1: 학교 협력(School Partnership)

학교 협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프로젝트가 있다.

- ① 학교 프로젝트(School projects): 학교 프로젝트는 참여 학교들이 공동 관심주제에 대하여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학생들의 참여 촉진이 우선적 업무로 한다. 차후 일부 학생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합동으로 유럽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갈 기회의 가능성을 부여 받는다.
- ② 언어 프로젝트(Language projects): 언어 프로젝트는 2개의 유럽국가, 2개의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으며, 외국어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널리 사용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는 언어의 경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상호 교환방문을 수반한다(교환방문 학생의 제한 연령: 14세).
- ③ 학교 개발 프로젝트(School development projects): 공공기관으로서의 학교와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로서 교수 방법, 조직, 관리 또는 학교 폭력 근절 등과 같은 공동 관심주제를 다룬다.

- Action 2: 양성 및 현직 교사 훈련(Initial and in-service teacher training)

유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의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① 다국 간 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 양성 또는 현직 교사 교육기관 사이의 협력 활동으로서, 그 목적은 교직원의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과정, 전략, 교육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프로

젝트는 유럽에서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타 유럽 국가에서 이 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② 개별 보조금(Individual grants): 미래의 교사, 현직교사, 공식 또는 비 공식 교육 분야(주임교사, 장학사, 조정자 등)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이고, 이러한 이동성 보조금은 학교에서 실제 교육과정의 개발 또는 타 국가의 협력 기관과 공동으로 유럽 차원의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할 경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Action 3: 코메니우스 네트워크 구축(The establishment of Comenius networks)

코메니우스 네트워크는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하여 공공 협력기관들은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명확한 주제(유럽 시민의식,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또는 문화 간 교육 등)로서 구조화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보다 널리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활동의 목적은 아이디어와 결과의 보급 및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긍정적인 성취와 혁신적인 사례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2) 에라스무스: 고등교육 프로그램(Higher Education)

1987년부터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계속 발전되어 700,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날 거의 모든 유럽대학들이 에라스무스와 관련되어 있다. 에라스무스는 유럽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강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대학 간 초국가적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 분야에서 유럽의 이동성을 높여주며, 공동체 전체를 통한 연구 및 자격의 학술적인 인정 및 투명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가 대학들은 승인된 위원회와 모든 에라스무스 활동들을 포함한 기관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은 공식적으로 3년 기간 동안이

며 연장할 수 있다. 에라스무스는 다음과 같이 주요한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Action 1: 유럽 대학 상호간 협력

공동체는 다른 회원국에 있는 협력 기관들과 합동으로 수행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개발을 포함해 대학 상호간의 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 Action 2: 학생과 대학 교수의 이동

공동체는 학생과 대학교수의 초국적 이동 활동을 지원한다.

- Action 3: 주제 네트워크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 연구센터 또는 교수 협력체 등은 분석 및 토론을 위한 근거로서 주제 영역 또는 명백한 주제에 대한 유럽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주제 네트워크를 위해 보조금을 제공한다.

(3) 그룬트비히: 성인교육 및 다른 교육경로((Adult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al Pathways)

교육은 단지 학교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인생을 통해 계속되는 과정이다 그룬트비히는 일반적으로 교육은 인생과 연결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덴마크 교육학자의 이름에서 명명된 것이다. 이 활동은 성인교육 및 다른 교육의 경로를 목표로 삼는다. 단일한 교육 네트워크에 제 3의 연계를 형성함으로써 코메니우스(학교교육) 및 에라스무스(고등교육)를 보완해 주게 된다. 성인교육은 국가마다 차별성이 있고 매우 광범위하며, 성인들이 다시 학습을 시작하려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개인 및 사회 개발을 위한 투자로서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밖에 민주주의 과정의 일부로서 활동적인 시민이 되어야만 하는 단계를 갖추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성인은 새로운 자격을 얻고 직업을 찾기 위해서 학교나 대학에서 교육을 원한다. 그룬트비히를 통해 유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활동들을 지원한다.

- 협력 프로젝트(Cooperation projects)
이 프로젝트는 유럽 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프로젝트 또는 공동 연구를 희망하는 성인교육 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비공식적 교육제도를 통해 획득된 인정 기술을 위한 제도의 개발, 새로운 훈련 모듈 및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 교육 협력(Education partnerships)
이 활동은 보다 작은 조직을 위하여 의도된 것이고 보다 작은 협력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력 기관들 사이의 사전계약이 필요하고, 경험, 사례, 방법 등을 교환하기 위해 컨퍼런스, 박람회 또는 방문 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동성(mobility)은 이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훈련을 위한 이동(Mobility for training)
1~4주 동안 다른 국가에서 코스의 책임을 맡기로 예정되어 있는 교사를 위한 지원이며 성인 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교육관계자(교사, 교육행정가 등)가 포함되어 있다.
- 그룬트비히 네트워크(Grundtvig networks)
성인 교육에 관련된 참가자들에게 토의를 위한 지속적인 근거를 제공해주며, 혁신적인 사례와 아이디어를 널리 보급해준다.

(4) 언어교육(링구아): 언어교육 프로그램

유럽인의 절반 정도는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설령,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주요 3개 언어인 영어, 불어 또는 독어 중의 하나이다. 다른 언어를 배움으로써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을 용이하게 해주며, 자기개발 및 만족의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2종류의 프로젝트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 언어학습의 촉진(The promotion of language learning)

다른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을 고취시키기 위해 언어학습에 관심을 갖도록 학습 채널 및 장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며, 다양한 기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 첫째 인식에 대한 고취, 둘째 학습동기 유발, 셋째 정보의 습득, 넷째 언어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의 단계를 가진 초국가적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도구의 개발(The development of tools)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언어학습 도구의 확산이다. 언어학습 도구가 상품시장에 의해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원회는 기술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에 대한 예를 들면 핀란드어 학습을 위한 새로운 방법,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페인어 능력 테스트 또는 독일어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비디오 제작 등을 들 수 있다. 링구아 요소들 중의 하나로 제출된 프로젝트는 많은 상황들을 충족해야만 하며, 프로젝트는 적어도 3개국으로부터의 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5) 미네르바: 교육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

미네르바(Minerva)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의 여신인 아테나(Athena)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활동은 ICT의 활용과 학습 환경의 구축에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네르바에 의해 지원되는 활동은 다른 프로그램의 활동보다 광범위하며 대규모적이다. 유럽위원회는 미네르바를 통해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수평적인 또는 횡단적인 차원에서 4가지 유형의 활동들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한다.

- 이해(Understanding)

보다 이해하기 쉽게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여기에는 교수·학습의 조직과 학습과정에 대한 ICT 및 ODL 모델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상연구, 비교분석 등의 연구 활동들이 있다.

- 설계(Design)

혁신적인 학습 환경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교수 방법 및 도구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로서 다른 활동 영역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인터넷의 교육적인 활용 등이 있다.

- 접근(Accessing)

우수한 사례를 일반화하고,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활동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ICT 및 ODL을 활용한 서비스와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활동 등이 있다.

- 네트워크(Network)

아이디어의 교환과 교육에서 ODL 관련 경험 및 ICT의 활용을 촉진하고, 네트워크화 하려는 프로젝트로서 이런 협력 활동은 설계자, 사용자와 교육훈련 분야에서 책임자들 간의 연결을 촉진하여 유럽 수준에서의 연결을 확립시킨다.

(6) 교육 제도 및 정책의 관찰과 혁신(Observation and Innovation of Education Systems and Policies)

유럽은 방대하고 다양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각국의 교육제도 또한 다양하다. 다른 나라의 교육 환경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은 그것을 기계적으로만 보지 말고, 독특한 접근방법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 있어서 유럽의 다양성은 혁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된다. 관찰과 혁신의 목적은 이러한 다양성을 좋은 근거로 하여 잘 활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를 소개하는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 다양한 국가에 대한 교육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비교 분석
- 교육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교
-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의 현장 방문
- 자격의 학술적 인정을 위한 국가 중앙 Naric network

- 교육의 질 향상 또는 유럽 시민의식 차원과 관련된 시험 계획
- 특별히 혁신적인 주제(교육과 고용, 교수와 질에 관한 척도, 또는 미래의 교육과 관련한 진보적인 토론)

(7) 다른 유럽국가 프로그램과의 협력활동(Joint Actions with Other European Programmes)

교육은 다른 영역과 창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그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영역이다. 또한 직업훈련 정책, 청소년 정책 및 연구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고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은 다른 공동체 프로그램 및 활동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게 작용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은 타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프로젝트의 제안 요구와 한 프로그램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타 프로그램에서 교차하여 정의된 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 등이다.

(8) 보완수단(Supplementary Measures)

일관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활동과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의해 구조화되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의식고취 활동(회의나 세미나 등), 프로젝트 결과의 보급, 프로젝트 관리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실행 향상, 프로그램과 다른 활동들 간의 시너지 효과 장려, 기회균등 및 문화 간 교육 촉진과 같은 수평적 차원의 우선과제 선정 등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 소크라테스 I, II 단계 프로그램의 비교

소크라테스 I, II 단계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적은 모든 수준에 교육에 있어서 전 유럽 차원의 강화, 협력의 촉진, 협력에 대한 장애물 제거를 통해 새로운 제도(혁신)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II단계 프로그램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룬트비히다. 코메니우스(학교 교육)는 II단계에서 I 단계 프로그램 보다 더욱 더 포괄적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링구아 영역의 대부분과 합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교사들을 위한 계속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에라스무스(고등 교육)는 I, II단계 모두 지속적으로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협력과 교수 및 학생에 대한 이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ODL(Open and Distance Learning)은 II단계 프로그램부터 미네르바(Minerva : 교육에서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한편, II단계 프로그램의 예산은 더욱 증액되어 I 단계보다 약 9억 2,000만 ECU가 늘어난 18억 5,000만 ECU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I(1995~1999)

유럽공동체의 직업훈련분야 협력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1994년 12월 6일 유럽 연합의 각료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이 결정이 내려지게 한 주요 배경은 1994년 『성장, 경쟁력과 고용에 대한 백서』의 진단으로 유럽연합이 21세기에 당면할 성장, 경쟁력, 고용과 관련된 도전들을 언급하면서 유럽연합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한 국가차원이나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결정자들의 대안이 나와야 하고 특히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책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인 1995년에 승인된 『학습사회를 향하여-교수와 학습에 대한 백서³⁰』에서 정보사회, 무역의

³⁰ 백서 『교수와 학습: 학습사회를 향하여』의 5가지 목적

국제화 및 교육과 훈련이 그러한 대책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는 마스트리히트 조약(EU 조약) 제 127조이며 시행기간은 1995~1999년이고, 27개국이 참가하여 5년 간 총 6억 2천만 ECU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Comett, Petra, Force, Lingua, Eurotecnet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발된 이니셔티브의 촉진을 용이하게 하며, 여기에 새로운 차원을 덧붙였다.
- 직업훈련 체제의 질과 기술적이고 산업적 변화를 완성하는 주요 요인인 혁신의 수용능력, 또한 작업 조직에 대한 영향력과 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21세기를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 직업훈련은 내일의 직업을 준비하고, 변화를 대비하며, 미래를 예상하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다.
- 우리 사회의 진보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기술의 필요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유럽위원회에서 1995년 11월 29일에 승인된 『미래의 지식사회에 대비한 교육에 대한 백서』의 주요 논의점인 유럽에서의 고용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취급하였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다른 주요과제인 교육과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훈련과 연구와 개발 간에 경제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편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을 수립한 이사회 결정에서는 다양한 직업훈련 영역의 특별한 목적을 포함한, ‘목적의 공통 프레임워크’ 즉,

-
- ① 일반기술 및 직업기술의 유럽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획득 장려
 - ② 도제제도를 통해 학교와 사업체간 긴밀한 협조 유도
 - ③ 제 2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외 문제 대처
 - ④ 3개의 유럽공동체 언어의 유창한 구사력을 확보
 - ⑤ 자본투자와 교육투자를 동등하게 취급

‘직업훈련의 효과성과 질’, ‘직업훈련의 내용과 방법 개발’, ‘특정 대상 집단에 대한 요구 충족’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직업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업훈련을 촉진시킨다.
- 훈련제공자들이 현실 민간 기업들의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직업훈련 과정에 있어서 사용자, 훈련기관 및 피훈련자의 역할분담과 협력관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 차원에서 진행 중인 직업훈련정책과 이에 대해 주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해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서 공동체와 참가국은 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국가적인 우선과제와 공동체적 우선과제 사이에는 차이를 두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은 4개의 실행노선과 22개의 주요 평가수단을 갖고 있고, 각 평가수단은 공동체의 공동 재정 부담을 포함하는 3개 영역의 활동과 3개 유형의 프로젝트를 담고 있으며 2개의 절차를 통해 수행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은 다음의 4가지 실행노선으로 구성된다.

① 실행노선 I

회원국의 직업훈련 체제와 설비의 개선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학습형태의 개발, 직업기술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의 다양성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이 실행노선은 직업훈련 체제에 대해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재기되는 것이다.

② 실행노선 II

대학교/기업 간 협력을 포함하며 기억과 근로자에 관련된 직업훈련 수단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술이나 작업조직 방법과

관련된 기능의 습득, 지역 혹은 유럽의 네트워크의 구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실행노선은 직업훈련 영역에서 활동하는 협력자에게 제기된다.

③ 실행노선 III

언어 기술, 지식의 개발,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혁신적 전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의 언어능력 검사, 상업 공동체 부문의 특별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언어지원의 개발, 훈련의 설비에 대해 국가적 수준에서 개발된 방법론·결과 혹은 훈련 성과의 전파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실행노선 IV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회원국과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간 협력관계의 형성을 돕고, 프로젝트와 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수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평가는 강사의 훈련, 공통 훈련 과정의 개발, 지역적 혹은 선행적 네트워크와 컨소시엄의 생성, 청년 훈련생, 대학 졸업생, 청년 근로자, 훈련감독, 훈련 프로그램 운영자와 공공 의사 결정자를 위한 단기 과정과 국가 간 이동 프로그램의 구성, 직업훈련 요구에 대한 조사, 정보의 수집과 교환 등의 영역을 포괄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양성 직업훈련, 계속 직업훈련, 평생학습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되며, 시험 프로젝트, 국가 간 직업 배치 및 교환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II(2000~2006)

레오나르도 다빈치 I 단계 프로그램을 승계한 것으로 1999년 4월 26일 유럽연합의 각료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II단계 프로그램은 회원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즉,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장려하며, 유럽 차원의 직업훈련 체제와 방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직업교육에 관한 유럽의 활동을 합리화하려는 또 한 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시행기간은 2000년~2006년으로 7년 간 총 11억 5,000만 ECU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참가국은 총 31개국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II 단계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사회적, 직업적 융합의 개선 및 강화, 높은 지속교육과 평생 기술에의 접근기회의 조성 및 확대, 노동시장 통합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향상과 직업훈련 시스템 지원의 3가지 주요 목적을 가진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II 단계 프로그램의 3가지 목적은 다음 5가지 수단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 이동성(Mobility)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 특히 청년층과 훈련 책임자들의 초국가적 이동을 말한다.
- 시험계획(pilot projects)
직업훈련 혁신과 질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초국가적 동업관계에 기초한 시험 프로젝트를 말한다.
- 언어능력
직업훈련의 내용 범주 내에서 상이한 문화의 이해와 언어능력의 함양을 말한다.
- 초국가적 네트워크
좋은 경험과 우수한 실행의 교환을 촉진하는 초국가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말한다.
- 참고자료의 개발
조사와 분석지원을 통한 참고자료의 개발과 갱신, 비교 가능한 데이터의 수립과 갱신, 좋은 실행 경험의 전파 및 정보의 교환을 말한다.

바. 레오나르도 다 빈치 I, II 단계 프로그램의 비교

레오나르도 다 빈치 I 단계 프로그램의 적용범위는 언어개발(language development) 및 혁신적인 재화와 서비스, 방법(methodology)들을 포함한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 I 단계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의 개발, 젊은 층에 대한 지원, 사회적 불평등과의 전쟁, 기회균등의 촉진을 통해 고용 적합성(employability)을 개선하는 핵심 정책 영역 내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다. I 단계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의 혁신과정에 공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적 고용 유동성'에 관한 프로젝트와 보다 넓은 학습기회 및 원격학습을 촉진하는 교육수단으로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지원하며 다른 중요한 영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레오나르도 프로그램 II단계 프로그램에서도 참가자들에 대한 이동성(mobility) 및 시험 프로젝트(pilot projects)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으며, 언어기술을 지원하고 직업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유럽수준에서의 비교 분석 및 연구를 촉진해주는 수단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네트워크(transnational networks)라는 새로운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II단계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들 내에서 함께 결합될 수 있는 3가지 목적과 5가지 수단을 갖고 있어, 그 선행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단순해졌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참여 국가들에 의한 개별적 해석이 가능하고, 개별국가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프로그램의 효과가 평가되고, 응집, 확산될 수 있도록 일관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II단계 프로그램은 광의의 직업훈련 정책 기본구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II단계 프로그램이 다양한 활동(actions)을 포함하면서 일반적인 정책의 목적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성이 있는 결정안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광범위한 정책의 기본구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 II 프로그램이 정책을 실현하는 장치라기보다는 실제로 정책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II단계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다른 공동체 프로그램, 특히 소크라테스 II단계 프로그램이나 Youth 프로그램 등과 공동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식 유령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제시했고, 이와 관련하여 경제 관련 관계·재계 및 학계에서 그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여타 부문에서도 동북아 안보공동체, 동북아 환경공동체, 동북아 문화공동체 등 여러 구상이 제시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의 주관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3차례의 세미나, 2차례의 연찬회, 종합세미나를 거쳐 2003년 12월 31일 『정책연구제안서』가 발간되었다.

이 제안서에서 전영평·박경하 교수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공통분모로 하여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 체제”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동북아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상당 정도의 정신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현대에 나타나는 서로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모색하면서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 체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공동체 개념을 제도화된 통합이 아닌 느슨한 ‘연대 체제’로 보았다.³¹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과 관련하여 “공동체는 단순히 획일성과 단일성 및 동질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향, 이념, 가치, 제도, 관행들을 가진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그러한 이질성이 전체로서의 하나를 파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³¹ 인문사회연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제 1차 연찬회 자료집 (2003), p. 37.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각 집단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얽혀서 세계가 하나의 동질적인 공동체인 듯이 여기도록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들(경제와 정치적 협력, 역사적 연대감, 여성·가난·소수민족·인권 등등 소수자와 소외된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연대, 아름다움을 공유하기 위한 예술 활동과 문화재의 공동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환경과 보건 위생의 문제 해결 등등을 위한 철학과 이념과 제도적 장치 등등)이 고안·실천된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한 문화적 장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이념이 실천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공동체란 문화의 단일성·획일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이 하나의 체계 속에 통합(integration: 각각의 특징과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상태)되는 것으로서 이는 각각의 특징이 없어지고 하나의 것으로 동화되는 것(assimilation)과 구별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동북아 공동체 제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여했다.³²

그러나 그들은 “정치와 경제 공동체는 힘의 관계와 경쟁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단정하였고, “경쟁이 가져오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공동체를 형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그들은 최종적으로 오늘날의 유럽연합이 600년의 시간이 걸린 점에 교훈을 얻어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였고, “한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계획은 시간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형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로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³⁴

여기서는 공동체의 개념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³² 위의 책, p. 39.

³³ 위의 책.

³⁴ 위의 책, p. 53.

VII

공동체 형성의 경험적 장애요인과 가능성 논의

1. 동북아공동체의 개념과 성격

가. 공동체(community)의 종류

공동체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데니스 포플린(Dennis E. Poplin)은 ‘공동체’라는 말을 대하게 되면, “이 용어를 사용하는 저자가 혹시 부주의하고 부정확한 방식으로 모호하게 개념을 구사하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따져 보아야한다”고 충고했다(포플린, 1985 : 21). 전문적 논의에서조차 통일적인 규정이 힘든³⁵ 공동체의 개념을 여기서 다시 논의하거나 이 개념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공동체 개념이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으로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지적하고자 한다.³⁶

- 포플린은 심성적(moral) 또는 정신적 측면에서—또는 심리적 측면에서—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³⁷
- 공동체의 성원들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
- 공동체의 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느끼며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과 하나임을 느낀다.
- 공동체의 성원들은 여러 하위 집단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 공동체의 성원들은 서로를 본래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전인격이라고

³⁵ 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동체에 관한 94개의 정의를 분석한 힐러리(Hillery)는 “모든 정의들은 사람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적 기반을 넘어서는 어떠한 의견의 일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Hillery, 1955 : 117, 최협, 1986 : 17에서 재인용).

³⁶ 공동체 관련 일반 논의는 김영욱 외, 『지역공동체와 저널리즘: 지역신문 내용분석』 (서울: 한국언론재단, 2000), pp. 15-28 참조.

³⁷ 포플린, 데니스, “공동체의 개념,”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문화과학지성사, 1985), p. 22.

생각한다.

공동체의 이러한 정신적 혹은 심리적 요소들은 ‘공동체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³⁸ 김경준 등은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동질성, 상호의존성, 책임감 공유, 대면적 관계, 공통 목표 등의 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³⁹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아시아적 가치, 유교자본주의 및 동북아 문화공동체 등은 모두 동질성을 전제 또는 조건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다.

공동체는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혈연 또는 공간 범위에 따라 가족, 친족, 마을, 아파트, 학교, 학급, 교회, 지역, 국가, 민족, 국제지역, 지구촌, 인류공동체 등이 있을 수 있고, 수단에 따라 정보, 가상(사이버), 전자, 언어공동체 등이 있을 수 있고, 기능에 따라 운명, 신앙, 자활, 탐구, 교육, 복지, 환경, 도덕, 세차, 문화, 사회공동체 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우리가 다루는 EU나 ASEAN 등 국제지역공동체는 크게 ‘정치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 및 ‘문화적 공동체’로 그 기능을 다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정치적 공동체

지역공동체나 국제지역공동체는 무엇보다 정치공동체이다. 정치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둘러싼 갈등의 조정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공동체 차원 또는 국제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갈등의 조정 과정으로 이해된다. 인간 사회의 모든 규모와 영역에서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정치는 모든 공동체의 핵심 영역이다. ‘경제적 공동체’ 및 ‘문화적 공동체’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정치의 영역이지만, 분배의 원칙에 대한 의사결정 과

³⁸ 김경준·김성수,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1998)

³⁹ 위의 책, p. 214.

정을 분리해서 ‘정치’로, 분배될 자원의 종류에 따라 이를 ‘경제’ 및 ‘문화’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정된 자원의 분배를 위해서는 인간 욕구가 상대적으로 무한에 가깝다는 점에서 강제적 힘을 필요로 한다. 소속감, 일치감, 참여성, 인격성 등 공동체의 특징은 힘의 사용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강제적 힘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6월 18일 EU 25개국이 EU헌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정치공동체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적 공동체

‘경제적 공동체’는 공동체의 물질적 자원의 확보 및 확대, 분배와 관련된 기능적 측면을 의미한다. 물질적 자원의 확보 및 확대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돈과 다른 욕구 충족에 필요한 자원 사이에 호환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현대 정치의 핵심도 사실은 경제적 자원의 확보와 분배에 있다.

EU가 2002년 1월 유로화 통용을 시작한 이후를 경제공동체의 모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적 공동체

‘문화’의 개념도 매우 다양하다. 윌리엄스(R. Williams)가 말한 ‘삶의 전 양식’(Williams, 1961) 외에도 ‘고급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미술, 음악 등 예술과 문학이나 ‘대중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연예, 스포츠 및 오락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전통, 일상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설명, 인간관계의 유형과 실천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양식이라는 의미의 문화는 다른 말로 ‘사회적 규범과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고 삶의 목표를 설정한다.

문예·오락적 활동은 공동체 구성원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는 아시아에서의 한류의 확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강대 원용진 교수(신문방송학)는 한류(韓流)가 “아시아적 문화블록 형성을 위한 좋은 계기”이며, “아시아적 문화사건이고 지역공동체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라고 외친 바 있다. 아울러 “아시아권 문화블록의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상호 이해를 도모하며 공동 운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⁴⁰ 하지만 아직까지 인류 역사상 문화공동체를 인위적으로 형성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나. 다양한 (동)아시아 통합 모델

지금까지 아시아나 동(북)아시아 통합 관련 구상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동북아 안보공동체 및 동북아 문화공동체 외에 학자 차원에서 아시아공동체, 아시아공동시장, 상생적 공동체, 동북아 공동체, 동북아 평화공동체 등이 제시되었다. 우선 이들을 일별하고 공동체의 의미, 유형 및 형성의 동학 등의 문제를 보기로 한다.

(1) 아시아공동체

부산대 박광주 교수(정치학)는 아시아가 19세기 유럽에 의해 ‘발견’되었다가 20세기 말에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따라 아시아가 유럽에 의해 ‘재발견’되고 세계화를 강요하면서 아시아가 스스로 ‘아시아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었지만 유럽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띠었을 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형성이 마련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아시아의 정체성이 아직도 유동적이고 무정형적인 상황이지만

⁴⁰ 원용진, 『한류 뒤집어보기』 (한겨레신문, 2001).

동북아국가들 간, 동남아국가들 간, 동북아와 동남아국가들 간, 그리고 동아시아국가들과 태평양연안국가들 및 유럽국가들 간의 교류와 갈등을 거치면서 아시아의 공동이익에 대한 인식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박광주 교수는 아시아 각국들 간의 교류, 즉 상호작용은 아시아적 가치관 내지는 인식에 대한 자의식을 촉발시켜 공통의 정체성을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공동체의 형성으로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아시아공동체라는 제도의 구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아시아국가들 간의 ‘합의된 규범, 규칙 및 절차의 합의체’로서의 ‘레짐’(regime)을⁴¹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상호작용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류의 반복적 증대는 아시아적 동질성에 대한 인식을 점차 분명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적 협력관계를 제도화 - 금세기말 지역주의(regionalism)를 세계적 경향으로 확산시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한 유럽연합(EU)의 경우에서 보듯이 -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박광주, 3-4).

2) 동아시아공동시장

부산대 정대화 교수(정치학)는 John Galtung 교수가 “동아시아는 유럽연합보다 동질성이 더 많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한반도(남북한) + 중국

⁴¹ 박광주는 국제정치에서 레짐 현상에 주목하는 논자들은 용어 사용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이해관계와 상호의존성에 근거하여 국제관계의 행위패턴이 일정한 경향성을 띠게 되며, 그러한 경향성이 일종의 행위규범으로 자리잡게 되는 현상에 대한 의미 부여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무정형적이고 산만한 행위들이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일정한 패턴을 취하게 된다는 것은 공식적 제도(institution)의 형식성이나 기존 체계(system)의 와해로 인해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국제정치 속에서도 다양한 문제영역들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레짐 개념의 다양성에 관해서는, Oran R. Young, “International Regimes: Problems of Concept Formation,” *World Politics*, Vol. 32 (April 1980); Stephan Haggard and Beth A. Simmon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1 (Summer 1987); 그리고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대만, 홍콩 포함),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동아시아공동시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21세기에 과거의 중국문화권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경제권(NEAEC)이 하나의 기러기식 경제모델(geese model)이나 기관차식 경제모델(locomotive model)에 따라 동아시아공동 시장 형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는 동아시아국가들이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al proximity), 공동의 문화유산 또는 동질성(유교문화, 한자문화, 쌀문화), 대승불교권으로서의 종교적 연대감, 19세기 서구와 20세기 일본에 대한 역사적 공통 경험과 인식, 공동이익에 대한 기대 및 기타의 통합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공동체 모델을 거쳐 아시아연방공화국(confederal states of asia)이나 아시아합중국(united states of asia)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⁴²

3) 동아시아공동체

외교안보연구원 박홍규 교수는 한·중·일과 대만, 북한으로 구성되는 동북아공동체를 제안하고, 이를 향후 ASEAN을 중심으로 형성될 동남아 공동체와 통합하여 동아시아공동체의 창설가능성을 제안하였다.⁴³

4) 상생적 공동체

한양대 행정대학원 공성진 교수는 해양 중심의 일본의 대동아공영론, 중국 대륙 중심의 화이론 등의 통합 노력은 데카르트적 근대주의의 연장이며, 앞으로 대륙, 반도 및 해양의 유기체적 삼체론에 입각하여, 정치이념에 동서 구분과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남북 긴장을 초월하고 인종적 유

⁴² 정대화, “동아세아공동시장의 가능성 연구” (네이버지식검색논문, 1997).

⁴³ 또한 그는 이를 위하여 우선 과거 서유럽의 ECSC나 유럽 도로망과 같은 식으로 “동북아 해양공동체” 또는 “동북아 고속도로망”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홍규, 『동아시아 공동체 및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주 요 국제문제분석 2000-04 (외교안보연구원, 2000), p. 63.

사성과 지정학적 근린성을 축으로 한 한·중·일 동아시아권역의 출현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였다. 그는 종교적 관용성, 배농사가 남긴 가치관의 공통성(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가문에 대한 애착, 반개인주의, 애니미즘적 사고 등)에 기반하여 공통의 문화가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보았다.⁴⁴

5) 동북아공동체

한국행정연구원 윤종설과 정창화 연구위원은 한·중·일 동북아 3국은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제협력과 정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이 불가피하며, 그 형성의 공유가치로 유교문화와 한자문화 전통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동질성을 들었다.

위 2인은 유럽공동체 추진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여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긴급성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동북아공동체를 ‘국가통합공동체’로 규정하여 ‘연방국가’보다는 낮은 ‘연합국가’ 수준의 통합수준을 제안했다.

<표 VII-1> 동북아공동체와 유럽공동체 형성 긴급성에 대한 비교

유럽공동체	동북아공동체
공유가치-기독교문화권	공유가치-유교문화권
국가 간 전쟁경험으로 인한 전쟁방지 및 평화유지	국가 간 전쟁경험으로 인한 전쟁방지 및 평화유지
경제협력의 필요성 제기 ECSC/EEC	경제협력의 필요성 제기
문화적 교류의 필요성	문화적 교류의 필요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필요성 - 정치공동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필요성 - 정치공동체

자료: 윤종설, 정창화, p. 2.

⁴⁴ 공성진, “동아시아 상생(相生)구조의 가능성,” 『상상』, 5.2 (1997년 여름), pp. 65-66.

<표 VII-2> 유럽연합모델과 동북아공동체 형성모델의 비교분석

공동체모델 분석기준	유럽연합(공동체) 모델	동북아 공동체모델
공동체형성의 최종목표	유럽연방 (유럽합중국)	-
통합과정	조약에 기초한 통합과정	조약에 기초한 통합과정
공동체체제 및 기구	- 유럽정상회의 - EU각료회의 - 유럽의회(EP) - 집행위원회 - 유럽법원(ECJ)	- 동북아공동체 정상회의 - 동북아공동체 각료회의 - 동북아공동체 의회 - 동북아공동체 집행위원회 - 동북아공동체 사법재판소
통합체(공동체)의 실현방법	조약에 기초한 준비된 통합: 공 동체설립조약 → 단일유럽협정 (SEA) → Maastricht조약 → Amsterdam 조약 → Nice조약	조약에 기초한 준비된 통합추진: 동북아공동체 설립조약 → 경제 공동체 조약 → 정치공동체
통합체의 형태	다민족 1국가 회원국정부불인 정 (연방국가)	① 다민족 1국가 회원국정부 불 인정 (연방국가) ② 다민족 1국가 회원국정부 인 정 (연합국가) ③ 다민족 1국가 회원국정부 부 분인정(준연방국가)

자료: 윤종설, 정창화, p. 16.

윤종설 · 정창화 2인은 제시한 목표를 위해서는 시간적으로나 단계적으로 자유무역시대(FTA) 형성, 관세동맹(customs unions),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한다.

2인의 주장은 여러 통합안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이론적이지만 소요 시간과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이상적인 제안으로 그칠 수도 있다.

Wada Haruki는 러시아, 중국, 남북한,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구성되며, 대만, 오키나와, 하와이, 쿠릴열도와 같은 커다란 섬에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동북아공동체(The common house of northeast asia)를 주

장하였다.⁴⁵

한편, 최근 들어 한창 주장되고 있는 ‘신문명론’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혼합되어진 새로운 문명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태평양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⁶

물론, 이치상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동북아의 미래의 비전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이렇게 다양한 제안들은 역시 동북아의 미래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전을 갖고 있는 동북아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합의에 이르기에는 편차가 너무 크다.

다. 공동체의 형성⁴⁷

공동체의 형성에는 그 원인과 목적, 과정, 기대효과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형성 과정을 둘러싼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⁴⁵ Wada Haruki, “The Common House of Northeast Asia and the Problem of Democracy,” 『아세아연구』, 통권 100호 기념특집호 (1998년 12월), pp. 23-41.

⁴⁶ 이 새로운 혼합문명은 어느 일방이 강제적으로 다른 문명을 주도하거나 압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Funabashi는 중국, 인도차이나 문명이 일본, 미국 문명과 결합하는 아시아-태평양 문명을, Yamazaki는 동아시아, 북미, 멕시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문명을 상정하고 있으며, Mahbubani는 아시아 공동체도 아니고 미국의 공동체도 아닌 “태평양공동체”를 주장한다. Yoichi Funabashi, *supra note* 61. Masakazu Yamazaki, “Asia, a Civilization in the Making,” *Foreign Affairs* Vol. 75. No. 4 (1996), pp. 106-118. Kishore Mahbubani, “The Pacific Way,” *Foreign Affairs* Vol. 74. No. 1 (1995), pp. 100-111. Kishore Mahbubani, “An Asia-Pacific Consensus,” *Foreign Affairs* Vol. 76. No. 5 (1997), pp. 149-158. 이들은 큰 그림만을 제시해주고 있다. 참가국, 지리적 범위, 미국의 주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들은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상정하는 것 같으나, 이것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타평양공동체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다.

⁴⁷ 공동체 형성의 동학에 관해서는 주로 Jenkins(1996)와 정호영(2001c, 3-9쪽)의 글을 바탕으로 했다.

(1) 공동체의 과정상 구분과 집합적 정체성

공동체를 이해함에 중요한 개념이 집합체(collectivity), 범주(category) 및 집단(group)이다. 집합체는 성원들이 자신들이 한 집합체의 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집합체에 소속되어 있는 범주, 그리고 성원들이 자신들이 한 집합체의 성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어떤 집합체에 소속되어 있는 집단으로 나뉜다.

범주의 성원들 간에는 아무런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성원들 각자가 갖는 어떤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한 묶음으로 분류된 인구 집단일 뿐이다.⁴⁸ 따라서, 어떤 개인들을 범주로 규정하는 외부자가 사라지면, 범주도 사라진다. 반면, 집단은 공유된 인식과 소속감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집합체로서의 존재 가능성을 외부자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집단에서는 성원들이 서로 아무런 사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도 갖지 않더라도 서로를 동일 집단의 성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범주와 집단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성원들 간의 상호적 인식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인 집합적 정체성의 존재 여부인데, 이 때 집단이 바로 공동체에 해당하므로 공동체 규정의 핵심도 바로 집합적 정체성이 된다. 이 때 공동체 규정의 핵심인 집합적 정체성은 '같은 집합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의 집합체로서 살아간다는, 성원들 간의 공유된 인식과 성원들의 자신의 집합체에 대한 공유된 소속감'으로 정의될 수 있다.⁴⁹

범주가 집단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공동체 형성의 과정이자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인데, 이 범주와 집단의 관계를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전체 과정 측면에서 보자면, 범주는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출발점이자 조건이다. 따라서 범주는 집합적 정체성 구성 과정의 한 국면으로 포함되어

⁴⁸ 사람들이 하나의 범주로 묶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공유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상당한 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무엇인가를 공유해야 한다(Jenkins, 1996: 88-89).

⁴⁹ 정호영,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p. 68.

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체성 구성 과정은 동일시와 정체성 교섭으로 이루어지지만, 집합적 정체성 구성 과정에는 이들 국면 이외에도 범주규정이라는 국면 하나가 추가되어야 한다.⁵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동)아시아담론, 아시아적 가치 등의 논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이나 추진에는 공동체 형성의 동학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예외 없이 개입될 것이다.

(2) 공동체 형성

공동체의 형성, 곧 집합적 정체성의 구성 과정은 범주규정(categorization), 집합적 동일시(collective identification), 집합적 정체성 교섭(collective identity negotiation)의 세 가지 상호 연관된 국면들로 구성된다.⁵¹ 그리고 정체성 구성은 모두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을 띠지만 그중 집합적 정체성은 정치적 성격이 더욱 강하다. 범주규정, 집합적 동일시, 집합적 정체성 교섭의 국면들 각각의 규정은 평등한 행위자들 사이의 자연발생적, 진화론적 과정이 아니라 권력 관계 속에 위치하는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되며, 한 국면에서 다음 국면으로의 이행도 정치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집합적 정체성 구성의 전 과정은 동원과 저항, 부과(imposition)와 동조, 갈등과 합의, 거래와 협상 같은 정치적 과정들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집합적 정체성 구성은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다.⁵²

⁵⁰ 개인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정체성 구성 과정은 동일시와 정체성 교섭이라는 두 가지 국면들로 이루어진다(정호영, 2001: 34-41). 개인적 정체성과 집합적 정체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호영(2001: 42-46)을 참조할 수 있다.

⁵¹ 범주규정집합적 동일시집합적 정체성 교섭이라는 세 국면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일방 통행적 단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국면들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서로간에 상호적 영향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정호영(2001: 65-66)을 참조할 수 있다.

⁵² 정체성, 특히 집합적 정체성은 권력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획득되고, 주장되고, 배분된다. 정체성은 투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정체성과 더불어 투쟁 전략이 개발된다. 정체성은 정치의 수단이자 목적이다. Gay Pride in London이나

(가) 범주규정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범주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집합체는 범주든 집단이든 그것이 집합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공유되는 것이 객관적 특징이면 범주가 되고 성원들 간의 호혜적 인식과 집합체에 대한 소속감이면 집단이 된다. 따라서 범주규정이란 성원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비성원들은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원들만이 공유하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객관적인 공통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개체군이 형성되는 과정을 뜻한다.

범주는 외부자의 눈에만 유의미한 사회적 사실로 드러나고, 외부자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은 성별이나 나이 같은 생물학적 특징들과 교육 정도나 경제적 지위 같은 사회적 특징들을 가지며, 이와 같은 다양한 각각의 특징들은 모두 범주규정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수많은 잠재적 범주규정 기준들을 갖는 수많은 개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들을 하나의 무리로 묶을 것인가는 애초부터 범주를 규정하는 외부자, 즉 범주규정자(categorizer)의 정치적 의도와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범주규정에는 권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범주규정에 있어서 권력의 중요성은 대외적 측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하나의 범주가 형성되는 과정은 그 범주와 다른 집합체들 간의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떤 한 범주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집합체들과의 경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의 획득과 이용에 있어서의 제약과 가능성이 범주규정에서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자원의 유한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자원

Sydney Mardi Gras 같은 대규모공공 행사는 그 행사에 참가하는 개인들에게는 각자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행사가 되겠지만, 그것은 또한 집합적인 동일시 의식(collective ritual of identification)이자 집합적인 정치적 동원화 의식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정체성은 일종의 전략적 개념이기도 하다(Jenkins, 1996: 3, 25-26).

을 확보하기 위한 집합체들 간의 경쟁은 범주의 경계 결정 및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⁵³ 이것은 한 범주의 대외 정치적 과정을 구성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동북아 각국이 ‘형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해도 실현 과정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그 가운데 국력의 크기에 따라 그 발언권의 크기가 정해질 것이다.

범주가 형성되면 그 규모가 아주 작지 않은 한 현실적으로 범주의 유지는 제도화된 행정 체계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범주규정자가 아무런 내적 상호 관계나 상호적 인식을 갖지 않는 독립적 개인들을 하나의 범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제도화된 행정 체계는 외적으로는 다른 집합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범주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자 내적으로는 성원들에 대한 범주규정자의 의지를 실현시켜 주는 정치적 수단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범주는 성원들의 수치로만 존재하는 통계적 추상물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규모, 제도화, 조직화를 갖춘, 자원이 투입되고 배분되는 실체적 조직체이다. 자원의 투입과 배분은 주로 다른 범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범주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뿐, 범주 성원들의 필요는 자원의 투입과 배분에 관한 결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지 못하는데,⁵⁴ 자원 처분에 관한 결정권은 범주의 정치적 주체이자 행정적 주체인 범주규정자가 갖는다. 따라서 범주의 규정과 유지에는 권력 자체뿐 아니라 권력을 실현할 수 있는 행정 체계라는 제도화된 권력 수단도 필요하다.

제도화된 권력수단으로서의 행정체계로는 국가연합, 연방, 통일국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범주의 규정과 유지는 범주규정자의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범주규정자가 갖는 권력과 제도적 권력 수단 없이는 범주의 존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주가 집합체로서 장기적 존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베

⁵³ Jenkins, Richard, *Social Identity*, (Routledge, 1996). pp. 94-95.

⁵⁴ Jenkins, *Ibid*, p. 156.

버적 의미에서 권력의 권위로의 전환, 즉 권력의 정당화가 필수적이다.

범주가 집합체로서 장기적, 안정적 존속성을 보장받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외부적 권력에 의해 규정된 집합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 즉 권력의 정당화이자 범주의 집단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집합적 동일시를 이루어 성원들이 서로를 그리고 범주 자체를 확대된 자아로 받아들여 이계 만드는 일 뿐이다.

(나) 집합적 동일시

동일시는 동일시 주체가 동일시 대상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이 행위와 태도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고 물질적 측면에서는 유익해야만 가능하다.⁵⁵ 집합적 동일시의 주체는 집합체의 개별 성원들이며, 그 대상은 집합체 내의 다른 성원들과 전체로서의 집합체이다. 개별 성원들은 다른 성원들과 전체로서의 집합체를 모두 동일시 대상으로 삼으며, 실제로 이들에 대한 동일시가 이루어지면 동료 성원들과 집합체가 자아의 연장으로 간주되고, 그러면 ‘성원들 간의 호혜적 인식’과 ‘집합체에 대한 소속감’의 합인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된다.

동일시 형성의 첫번째 요건인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원들이 전체로서의 집합체를 경험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범주규정에 관한 부분에서 보았듯이, 범주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범주의 제도적 체계가 성원들 삶에 체계적으로 개입해 들어오면서 성원들 간의 생애경험 공유라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비록 그것이 범주 국면에서는 부정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성원들이 집합체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범주규정자의 성격이 권력적 행위자에서 권위적 행위자로 바뀌면, 이 경험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뀐다.

범주가 집단으로 전환되면, 범주규정자는 ‘성격 전환된 범주규정자’가 된다. 이전과는 달리, 물론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범주규

⁵⁵ 이에 관해서는 정호영(2001: 36-39)을 참조할 수 있다.

정자는 성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을 경험하기에 유익하고 적절한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성격 전환된 범주규정자는 자기 집합체를 정당하게 대리하는 ‘집단 대표자’(group representative)가 된다. 집단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성원들 모두의 이해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집단 내 모든 개인들은 집단 대표자를 자신의 확대된 자아로 간주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성원들 각자가 집단 대표자를 경험하면, 그것은 성원들이 서로를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정서적 치환이 이루어진다. 집단 대표자는 전체로서의 집단의 대표자인 동시에 집단 내 모든 개별적 성원들의 대표자이기도 하므로,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적 경험은 이렇게 집단 대표자에 대한 경험을 통한 매개적 경험 형태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전체로서의 집단에 대한 경험과 성원들 간의 상호적 경험은 집단 대표자에 대한 경험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진다.

범주규정자로부터 집단 대표자로 성격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집단 대표자는 정당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원들과 자기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집합적 동일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집단 대표자가 구성원들에게 자기 자신이 행위와 태도의 준거로서 적절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얼마나 잘 설득시키는가,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물질적 유의함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집합적 동일시에는 상징적 과정과 물질적 과정이 개입된다.⁵⁶

(다) 집합적 정체성 교섭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한 집합체는 단일의 행위 단위, 즉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가 된다. 이 때,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그 행위자가 복수성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하나의 집합적 행위자는 다른 사회적

⁵⁶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호영(2001: 54-62)을 참조할 수 있다.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회적 행위자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상황 속에서는 스스로의 정체성 주장 못지않게 그렇게 주장되는 정체성에 대한 다른 행위자들의 반응 또한 중요하다. 한 행위자의 정체성에 대한 타자들의 인정 없이는 그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다. 한 집합적 행위자가 형성한 정체성의 사회적 수용 과정인 집합적 정체성 교섭은 범주규정집합적 동일시집합적 정체성 교섭으로 이어지는 집합적 정체성 구성의 과정을 완결한다.

더구나, 한 집합체의 정체성은 정체성 교섭 과정을 통해 더욱 공고화된다. 내적으로는 다양성을 허용하지만 외적으로는 유사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집합적 정체성이라는 가면은⁵⁷ 관객들 앞에서는 더 이상 가면이 아니다. 공연자가 가면 자체가 된다. 공연자는 관객 앞에서 오로지 그 가면에 의해서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는 그 가면에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다.

집합적 동일시를 형성한 한 집합체가 정체성 교섭 과정에 들어가면, 그 집합체는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집합적 행위자들에 의해 즉각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장 새로운 정체성 구성에 돌입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경향을 갖는다. 정체성 수정(identity revision)은 그 정체성이 명백히 부적절한 것으로 증명되거나, 지속적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만 일어난다는 지적은⁵⁸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특히 집합적 정체성에 관해서는 그 적실성이 더욱 커진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집합체는 상징적, 물질적 측면에서의 동일시라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는다. 개인이 한 번 구성된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구성하는 것이 그렇듯이, 집합체도 이미 구성된 집합적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일단 부정하고 새로운 존재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한 집합체가

⁵⁷ 정호영,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p. 33, pp. 60-62.

⁵⁸ Jenkins, Richard, *Social Identity*, p. 95.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생명을 한번 부정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부정하는 일이 어렵듯이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이나 집합체는 자신의 사회적 생명인 자아나 집합적 정체성을 부정하기 힘들다. 게다가, 집합적 동일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상징적, 물질적 분투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일은 집합체에 의해 언제나 회피하고 싶은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이 이미 형성한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른 집합체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투쟁하는 것이 저항 없이 수용될 만한 새로운 대안적 정체성 형성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쉬운 선택인 것이다.

다음으로, 집합적 정체성은 제도화의 경향을 아주 강하게 가지며, 이 제도화의 경향은 일단 형성된 정체성은 지키고자 하는 구조적 관성(structural inertia)을 만들어낸다. 집합적 정체성은 그 안에 이미 제도화의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정체성을 영속화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의지이다. 집합적 정체성 제도화의 출발점은 성원들 행위의 습관화(habitualization)와 일상화(routinization)이다. 동일시를 형성하면, 그 동일시를 공유하는 성원들은 동일한 습관화된 행위 유형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공유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행위에 대해 동일한 용어들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습관화와 일상화이다. 습관화되고 일상화된 행위 유형을 공유하는 일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그 행위 유형은 역사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행위 유형을 올바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당연시되는 사회적 속성의 하나로 제도화된다. 일단 집합적 정체성이 제도화되고 나면, 제도가 현실이 되어 사람들의 존재를 규정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제도와 조직을 동일시의 원천이자 동일시의 장으로 만든다.⁵⁹

⁵⁹ *Ibid.*, pp. 128-129, pp. 133-134.

2.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문화·언어적인 장애요인

가. 문화의 동서양 이분법과 문제점

동북아문화공동체 논의를 전후하여 제기된 아시아적 가치론이나 유교 자본주의론에서 거론되어온 동아시아문화의 핵심으로 가족주의, 연장자에 대한 존경, 공동체적 집단주의, 교육열 등 유교의 가치관이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이 서구의 개인주의에 입각한 공동체의식이나 인본주의(humanism)보다 어떠한 우월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증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유교적 가치는 동아시아 권위주의나 독재에 봉사한 혐의가 많다는 것이 공인된 사실이다. 그들은 아시안 가치나 유교 가치를 적극 옹호하기 위해 서구 민주주의사회의 기초인 개인주의를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왔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공동체의식은 상보적인 것이지 결코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적인 것이 아니다. 허구에 의해 강요된 반개인주의적 공동체의식은 실제로는 진정한 공동체의식을 파괴하는 원흉이며 비민주적 정치관행을 조장하는 원인이기도 한다.

유교주의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오래되고 흔한 주장이 동서양을 정신과 물질로 대비하는 논리이다. 19세기의 역사적 전환기에 한·중·일에서 주장되었던 동도서기, 중체서용, 화혼양재(和魂洋才) 등은 한결같이 ‘동양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을 결합시키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었다.⁶⁰

최근 아시아담론을 통해 어떤 동질성을 통해 아시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과정과 노력에서 유교주의나 한자문화 등과 같은 전통적 특성, 또는 가족주의나 집단주의 등으로 스스로를 서양과 차별화시키려는 것은 사이드의 지적처럼 동양이 ‘스스로를 동양화시키는 것에 참여하는’ 것일 뿐이

⁶⁰ 정문길 외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1995)에 실린 함동주, “전후 일본 지식인의 아시아주의론”과 스티븐 N. 헤이(Stephen N. Hay), “인도의 동아시아관”을 참조할 것.

다.⁶¹ 아시아문화에 대한 선부른 일반화는 오히려 아시아인들 자신을 아시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담론으로부터⁶²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미르달(Gunnar Myrdal)이 지적하듯이 동서양의 문헌이나 공식적 발언들 속에 편재해 있는 ‘아시아적 가치,’ 즉 아시아인들이 서구인들에 비해 더욱 정신적이고 비물질적이라든지, 내세적이며 이기심이 없고 부와 물질적 안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난을 잘 견디며 이를 오히려 미덕으로 여긴다든지, 배움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명상능력을 지니고 있다든지, 논리적이기보다는 직관적이라는 등등의 말은 ‘상투어’일 뿐이다.⁶³

나.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별성

아시아적 가치론이나 유교자본주의론은 흔히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명권으로 당연시한다. 백영서는 “동아

⁶¹ Edward W. Said,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1991), p. 519. ‘동양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제2장 「상상의 지리와 그 표상: 동양의 동양화」를 참조할 것. 『상상』1997년 여름호에 게재된 특집 「대점검, 동아시아 담론의 전개와 그 본질」은 일독할 가치가 있다.

⁶² 동양문화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작업은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다. 그 예로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주최, 1996년 3월 29-30일); 「동아시아 사회학의 미래」 (한국사회학회·국제사회학회 공동주최, 1996년 11월 22-23일);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역사인식과 평화」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주최, 1996년 11월 16일); 「동아시아 비교문화 국제학술회의」 (한국비교문화학회 주최, 1997년 6월 20일); 「21세기의 도전, 동양윤리의 응답」 (아산재단 20돌 기념 국제학술대회, 1997년 7월 1-2일); 「동아시아철학의 현대적 의의」 (국제중국철학회 주최, 1997년 7월 23-25일) 등이 있다. 그 외 한백연구재단의 『포럼21』, 제13호(1995년)와 14호(1995년) 및 『상상』, 제5권 2호(1997년 여름)의 권말에 실린 부록 「90년대 국내 월간 및 계간지 동아시아론 관련 목록」 참조.

⁶³ 미르달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의 신화는 서구식민통치시대의 유물이라고 한다. ‘아시아적 가치’가 피식민지 주민들에게는 식민통치시에 있어서 지배세력들에 대한 저항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으며, 해방이후에는 전식민지사회들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서구국가들이 아시아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쉽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Gunnar Myrdal,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Ltd., 1968), pp.95, 98-99.

시아문명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이 유교문명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근대적 변용을 함께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⁶⁴ 동아시아담론, 아시아적 가치, 유교자본주의 등의 주장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중·일 3국민은 유교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서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⁶⁵ 오늘날 유교문화 중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유교의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가를 정리한다는 것도 어렵다.

현존하는 차이를 무시하고 동질성을 강조하고 내세울 때 모종의 목적과 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 미작문화권, 젓가락문화권 등으로 동북아를 하나로 묶을 경우 대부분 중국적 근원성과 원형을 전제하고 강요하는 중화주의와 그것에 기생하는 사대주의가 숨어 있게 마련이다.

현대 서양문명의 위기나 현대사회의 위기의 대안으로 동양사상, 그것도 중국사상이나 유교사상을 내세우는 것은 2,000여 년 지속되어온 중국의 문화적 패권주의 우산으로 다시 종속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도의 통치술과 제왕술로 가득한 『노자』를 자연주의 또는 형이상학 내지는 환경주의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 내부의 오리엔탈리즘일 뿐이다.

한반도 내부만 보더라도 고려시대의 불교, 조선시대의 유교, 근현대의 기독교와 자본주의, 현대의 사회주의가 시계열적으로 후자가 전자를 배척하면서 공간을 확대하여 왔다. 대화와 공존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를 한국문화로 통합할 경우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과연 형성될 것이며, 그

⁶⁴ 백영서, “진정한 동아시아의 거처,”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문화과지성사, 1997).

⁶⁵ 한백재단에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自國에서 가장 동양적인 특성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 중국의 응답자들의 88%가 유교적 가치관과 규범이라고 답한 데 비해 한국응답자의 80%, 일본응답자의 32.5%가 각각 그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동양문명이 탈근대세계의 보편사상이 될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서는 한국응답자의 90%가 긍정적이라고 본 데 비해 일본응답자의 37.5%와 중국응답자의 16%만이 그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 『포럼21』, 제14호 (1995년 가을·겨울), pp. 94-95.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다른 길로 접어든 중국이나 일본의 문화와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에서 공통으로 지니고 있었던 사유의 전통은 통치이자 지배철학인 유가(儒家)적 전통과 통치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나 욕망의 해방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가(道家)적 전통이라는 이중적 코드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유가적 전통과 도가적 전통이 혼재하게 되었던 불가(佛家)적 전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코드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어져 왔다. 그러나 카라파니 코오진이 중국대륙-한반도-일본열도로 이어지는 지리적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선으로 보았던 동아시아 3국이 지녔던 근대 이전의 의식의 영토는 공자(孔子)와 맹자(孟子)를 토대로 하는 유가사상(儒家思想)의 동양이고, 그러한 의식의 영토로부터 탈영토화하여 ‘억압되지 않은 의식의 코소오(古層)’를 달성하고자 하는 도가나 불가의 지식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동양이다(카라파니 코오진, 1998, 271-292). 근대 이전의 중국과 조선은 확실한 유가적 통치철학에 근거를 둔 지배 통치체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일본은 16세기의 임진왜란을 통하여 조선의 성리학이 수입되어 그 이전에 일본열도로 들어간 도가나 불가의 전통적 지식들과 혼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근대화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명치유신 이전까지 유가·도가·불가의 세 가지 전통적 사유가 혼재하고 있는 군웅할거(群雄割據)의 시대가 근대 이전의 일본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확실할 것이다. 근대 이전의 중국과 조선에서 유가적 통치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음에 따라 도가적 전통의 노장사상이나 불가적 전통의 지식은 불온시 되어 금서(禁書)의 목록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서갱유(焚書坑儒)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⁶⁶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 조선은 유교의 국가철학이 전(前)근대의

⁶⁶ 장시기, “동아시아의 근대형성과 전지구적 탈근대: 루쉰과 나쓰메 소세키 문학의 노마돌로지,” 『영미문화』, 2. 1. 2002, p. 270.

확고한 통치나 지배의식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서 인간해방을 근간으로 하는 서양 근대의 충격은 유교의 국가철학으로부터 탈영토화 하는 자양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서양 근대의 충격이 유교와 결합한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 조선에서 서양 근대의 충격은 본말이 전도되어 들뢰즈-가타리가 이야기하는 노마돌로지(normadology)적 특성을 지닌 도가적인 노·장사상이나 불교의 경전에 대한 해석과 더 많이 결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 조선의 근대화는 서구의 국가들과 같은 강력한 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유교적 통치 국가로부터 탈영토화 하여 인간해방이라는 새로운 민중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세계 평등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길이었다(장시기, 2002: 272).

안병직은 근대화 또는 현대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은 정치와 문화의 발전과 상호연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면서 한·중·일 3국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런데, 경제, 정치 및 문화의 발전의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각국의 근대화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다. 영국에 있어서와 같이 근대화가 자생적(自生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종교개혁으로 문화적 발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으로 17세기 중엽의 시민혁명을 통하여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지며, 18세기 말에 들어와서야 급격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일본에 있어서와 같이 근대화가 캐치·업(catch-up)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제발전이 선행하고, 정치발전이 그 뒤를 따르며, 화혼양재(和魂洋才)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 이외에는 그 발전이 억압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의 발전은 가장 뒤쳐졌다고 한다. 일본보다도 100년이나 더 늦게 캐치·업 과정으로서 근대화를 이룩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발전의 선후관계가 더욱 뚜렷이 경제, 정치 및 문화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위와 같이 본다면, 경제발전이 돌출적으로 진행되는 후발국일수록 근대화과정에서 경제, 정치와 문화 간의 부정합현상(不整合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⁶⁷

문화적 동질성이나 유사성이 반드시 친밀도를 확대하기는 어렵다. 영토, 인구 및 국력의 차이가 현격한 경우 문화적 유사성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흡수나 합병의 형식을 지니기 쉽다. 유럽의 각국은 국력의 차이가 동아시아만큼 현격하지 않다. 동북아시아는 중국이라는 리바이어던이 너무 오랜 동안 지배해 왔고, 그 기간에 교화를 통해 주변 민족과 국가를 한화·중국화시키고 식민화하면서 점령하고 지배해 왔다. 중국으로의 경사는 곧 민족과 역사와 문화의 멸망을 초래할 뿐이다. 북위, 요, 금, 청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준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사람들 간의 거리가 단축될수록 이문화간의 대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문화권마다 다른 가치관, 사고·논리 유형, 믿음체계, 행동양식, 비언어적 행태 때문에 오해나 충격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거리가 점점 뚜렷이 표출”된다는 점도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⁶⁸

다. 동북아시아의 언어 이질화

한·중·일 동북아 3국만 하더라도 유교는 각국에서 달리 성장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공통의 가치관으로 이 지역 국민들의 생활방식이나 행태를 일반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문자로서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해왔지만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공통 언어로는 기능한 적이 없었다.⁶⁹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의 언어는 급격한 변화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00여 년 전부터 한문(古漢語)은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동북아 각국은 자국어로 문화 활동과 사유를

⁶⁷ 안병직, “한국의 근·현대화와 아시아적 가치” (네이버 지식검색논문).

⁶⁸ 박병석, “중국 현대의 문화모델선택과 현대화론,” 윤형섭 외, 『세계정치의 쟁점과 이해』 (서울: 박영사, 1993), p. 8.

⁶⁹ 고병익,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疎遠과 통합,”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1995), p. 27.

하기 시작했다. 한문의 국제어 지위 상실은 중국 중심의 국제체제의 해체이며, 동북아문명권의 구심력 축소 내지는 상실이다. 동북아 각국은 자국어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문이 차지했던 지위와 힘을 영어에 물려주게 되었다. 현재 동북아에서 한문을 폐기하는 대신 한자는 아직도 쓰이고 있지만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 대부분을 자국어로 표기하고 있다. 한문의 종주국이라는 중국도 20세기에는 구어체인 백화문으로 문화 활동을 해왔고, 아울러 자체를 간체자화 함으로써 같은 중화권인 대만 및 홍콩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유럽에서 라틴어가 국제어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유럽 각국이 자국어로 학문과 문화 활동을 전개시켰듯이 동북아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한문 대신에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심지어 한국과 일본에서 영어공용화론이 거세게 일었다. 중국도 한 때 완전한 로마자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고, 현재도 발음기호를 로마자화 함으로써 영어에 대한 친연성을 갖고 있다. 대만의 한자 발음기호인 주음부호는 한자 발음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반면, 중국의 한어병음은 한자의 원래 발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대만과 중국의 언어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중국문명이 로마자화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를 본다면 그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⁷⁰

아시아담론이나 아시아적 가치 및 유교자본주의 등 논의는 외부적 자극, 즉 서구의 ‘재아시아화’와 이에 대한 대응, 즉 아시아의 ‘아시아화과정’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박광주, 1998: 21). 이러한 담론과 논의 및 정책이 다른 문화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대외적 배타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운명에 대한 자각이라는 대내적 포괄성 -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역외국가들보다는 유사성이 강한 역내 국가들끼리 먼저 돕는다는 의미에서 - 을 위해 아시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공동운명공

⁷⁰ 김주성, “언어 현실과 동북아 문명의 미래,” (한글문화연대 첫번째 여름 토론회 발표자료, 2001).

동체를 형성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라. 공동체와 정체성의 문제

백원담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스튜어트 홀의 말처럼 문화적 정체성이란 동종 간의 유사성과 연속성이라는 한 축과 이종 간의 차이와 균열이라는 다른 한 축이 각축하고 융화하면서 이루어지는(becoming) 것이다. 거기서 문화적 정체성이란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교잡과정을 통한 변형을 통해 부단히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가 가지는 각기 두 축의 차이를 기저로 한 변증법적 전회과정은 각기 다르게 전개됨으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변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우리 문화의 원형이라 할까 하는 핵심에, 중화의 보편질서 속에서 획득된 것, 일본에 의해 중역(重譯)된 서구적 형질, 해방 이후 이식된 서구문화의 형질이 역사적으로 성층화되어 되면서, 분리될 수 있지만, 그러한 종이 다양화되면서 혼종화로 이른 새로운 정체성, 그것은 아마도 술한 변형과 차이를 통해 스스로를 늘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 언저리의 형상쯤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호미 바바의 말대로 영향력이 큰 것을 모방하고 흉내 내기의 형태로, 그러나 완전한 복제가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방, 그것이 때로는 창조적 변형의 계기가 되어 고정된 것 혹은 고정의 구조에 대응하는, 문화적 식민화의 양면성을 가지게 되지만, 그 양면성이 만들어내는 역동적 전회의 계기들이 때로는 추잡하고 저급한 문화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중역과정 속에서 나름의 생명력을 견지한 창조성의 현현들을 이루기도 하고, 그것이 총체로서 서로 긴장하며 잡종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담론은 동일한 문화적 역사적 지반, 특히 전근대시기의 동일한 문화권과 타율적 근대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동일시하면서 상호유대감 속에서 그러한 문화적 정서와 문제극복의 경험을 서둘러 동력화 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강하게 내포해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강박적 강구의 측면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 동아시아 각국이 가지는 ‘잡종적’ 정체성보다는 순수한 혈통과 폭력적 겁탈에 의한 그 피해양상만이 두드러지고, 따라서 순수성의 복원적 의미가 보다 강조되었고, 과거로부터 가져오기를 통한 그러한 순종적 형질로 이루는 공동체가 문화주의적으로 가상된 것이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그것은 중국의 문명교화의 문화주의가 이루어낸 화이관계(華夷關係)가 관철되던 전근대의 세계체제에 대한 강고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는데, 화이관계라면 적어도 자본주의 지배와 패권의 논리와는 달리 철저히 문화적이며, 그래서 결코 패권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명으로써 야만을 교화한다(文明教化)는 문화주의가 제국주의적인 군사적 강제나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의 배제를 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다른 문화나 가치,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관용과 공존을 존중하고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장구한 세월 속에 강고한 중화의 세계적 보편을 이루어왔던 이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에서의 화이관계의 역사적 전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이 안는 문제로부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동일시로서 무엇보다 이러한 동일시의 문제는 차이의 현상과 그 차이의 재생산구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인 관계 설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 동일시의 추상성으로 인해 동화(同化)를 강제하며, 그로써 언제든지 지배논리로 화할 수 있는 반동성을 내재한다는 데 있다. 역설적이게도 대안담론으로 제기된 동아시아론이 끊임없이 자본과 권력의 책략적 동아시아공조체제의 구상에 이데올로기로 제공되는 역정은 그 여실한 예증이다.

한편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분히 책략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유교와 프로테스탄티즘의 허구적 대립을 설정하는 헌팅턴식의 동서 문명 충돌론의 의도성을 얼른 떠올려 볼 수 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자본주의의 승리를 확인하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논리적 귀결 또한 명백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유교문화권, 혹은

한자문화권이라는 서구적 규정의 의도성이 바로 문화적 지배논리에 있는 만큼 중화문명, 혹은 이슬람문명의 강조와 대두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은 가상적 충돌을 상상하게 하면서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가 주도하는 세계사적인 모순을 은폐하고 문명 충돌의 소산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자 하는 중심부의 세계지배전략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 중화문화권으로 동일시하며 가상의 전선을 설치하려는 의도들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마. 문화적 통합의 공과

동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본질을 논한다거나 공동체를 형성시키지는 것 자체는 결국 동아시아를 하나의 통합된 문화나 지역으로 그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차별성이나 독자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배제된다. 문화가 통합(monolithic) 또는 통일되어 있다는 가설은 방대하고 다양한 문화 자료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해석하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유용하다. 이러한 가정은 특정 문화를 이념형(ideal type)으로 규정하고 이 문화하는 경향을 조장 또는 촉진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연구법이기도 하다.

인류학의 문화통합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다. 1930년대의 미국의 인류학자 사피어(Sapir)는 문화적 통합이야말로 행복한 생활의 요소라고 간주하였으며, 문화적 통합이 개인에게 도덕과 활기를 주며 또한 사회적 통합 등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이나 사회적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심한 경우에는 거의 문화통합 예찬론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통합이나 사회적 통합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회의론적 입장도 있다. 즉, 지나친 문화적 통합은 오히려 창의성, 새로움, 다원주의 등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인성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은 통합을 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의 하나로 파악하면서도 문화가 개인에 대하여 갖는 압제적인 측면에 대하여 우

려를 표시한 루드 베네딕트⁷¹ 등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지나친 문화적 통합은 다양성을 위협함으로써 오히려 한 문화나 사회 전체의 적응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명대나 조선이 지나치게 문화적 통합을 추구하여 타문화에 대한 저항능력이 극히 낮았던 사례에서도 지적된다. 또한 북위, 요, 금, 원, 청 등이 민족문화를 버리고 중국문화에 동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과 역사와 문화가 사라진 예를 보더라도 그 효과는 회의적이다.

인류학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문화가 몇 마디 간단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간주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문화들을 상호비교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문화만 해도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데 동(북)아시아라는 수백 년 간 상호교류가 없이 폐쇄적이었던 사회들 간의 공시적(共時的) 또는 통시적(通時的) 본질을 한두 마디의 표제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현대 인류학에서는 문화를 마치 한 덩어리의 바위와 같이 잘 ‘통합된 존재’(monolithic)로 파악하기보다는 서로 모순되고 경쟁적인 여러 경향과 주제들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자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장(contested terrain)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문화의 역사적 지속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⁷²

3.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비문화적 장애요인

여기서는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있어 비문화·언어적 장애요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에는 많은 요인이 있으리라 보나 동북아 국가 간의 관계,

⁷¹ Ruth Benedict, *Patterns of Culture* (Boston: Houghton Mifflin, 1934).

⁷² 한경구, “동아시아적인 것을 찾아서,” 『문화과 사회』, 9.4 (1996년 겨울), pp. 1736-1737.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정치 역학, 중국의 태도 및 공동체 형성의 순서상의 문제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동북아 국가 간의 합의된 동아시아 구상의 부재

동북아는 복잡한 지역 환경으로 인하여 아직 제대로 된 협의체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⁷³

(1)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환경

동북아는 합의된 어떠한 형식의 동아시아 구상을 도출해 내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북아 지역협력에 미진한 이유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⁷⁴ 그 중에서도 동북아 국가들이 동아시아 구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⁷³ 한상희, 「미국, EU, ASEAN의 동아시아 구상과 동북아의 딜레마」, (네이버 지식검색), pp. 8-11.

⁷⁴ 그 원인에 대하여 Zhang Xiaoming 교수는 불안정한 정치상황,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 지도력 부재, 김용호 교수는 강대국 지지 부재, 문화적 특성, 강대국에 대한 의심, 취약한 인식적 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이진영 박사는 족(族), 종교, 젠더 등의 정체성에 기원하는 민족주의의 과잉을 들고 있다. Zhang Xiaoming, “Does Multilateralism Matter in East Asia?” A Paper Deliver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on April 5-6, 2001, Beijing, organized by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of Peking University; 김용호, 「양자주의와 다자주의 : 동아시아의 현황과 전망」, 양기웅 편저, 『동아시아 협력의 역사, 이론, 전략』 (소화, 1999), pp. 84-88. 서구 스타일의 국가간 공식적 대화, 제도, 기구들이 아시아의 문화적 규범에 잘 맞지 않아 아시아인들은 비공식적 합의나 임기응변식의 문제해결방식을 더 선호한다는 문화요인을 강조하는 학자도 있다. Miles Kahler, “Institution-Building in the Pacific”, in Andrew Mack and John Ravenhill, eds., *Pacific Cooperation : Building Economic and Security Regimes in the Asia Pacific Region*(Allen & Urwin, 1994); Desmond Ball, “The Most Promising CSBMs for the Asia/Pacific Region,” A paper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the Asia-Pacific Region: Link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IGCC)(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May 1993). 김용호, *Ibid.*, 86 재인용.

강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이다.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자 하는 미국으로서 는 정치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미국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오히려 세계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담도 상당히 줄여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은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아시아공동체, 동북아문화공동체 등 어떤 형식의 지역화를 추진하더라도 역내국가들 간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걸림돌은 미국의 비우호적 태도이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한 아시아나 동북아시아의 독자적 협의체나 공동체가 추진되거나 기능하는 것은 어렵다. 아시아지역에 대해 미국이 지니고 있는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탓이다. 즉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맺고 있는 쌍무적인 안보협력체제나, 미국시장에의 경제적 의존은 미국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⁷⁵

중국은 미국의 세계적 패권과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영화에 집착하고 동아시아 맹주 자리의 탈환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제발전보다는 경제규모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⁷⁶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역시 동아시아에 대한 지역적 패권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노력이나 AMF의 창설 제안 등은 바로 그 증거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갈등은 동북아의 지역 협력에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 또한 대외전략의 개념을 수정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크게 표명하고 있다. 냉전 해체 후 4대 강국들은 서로 ‘동반자관계’(partnership)를 맺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4대 강국들의 참여한 이익쟁탈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

⁷⁵ 자세한 내용은 박광주, 25-29쪽 참조.

⁷⁶ 중국의 잠재성에 대한 인정과 부정에 대한 각각의 논문으로는 Nicholas D. Kristof,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72:5(1993), p. 59, 74; Gerald Segal,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78:5(1999), p. 24, 36.

가 없다.

이러한 4강의 치열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외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 중군위안부 문제나 최근의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과거 청산 미비나 과거에 대한 반성 태도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감과 불만족은 여전히 불씨가 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도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종례 사이의 국경문제는 최근에 마무리되었지만 한일 간의 독도 문제,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조어도) 문제, 일러 간의 북방영토 문제,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해양경계 획정문제와 어업문제 등도 역시 동북아 지역협력의 장애요인들로 쉽게 해결될 수 없다. 게다가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통일문제에도 강대국들 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일본과 북한의 수교문제, 그리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문제 역시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방해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2) 동북아 지역협의체의 부재

이와 같은 동북아의 복잡하고 미묘한 환경으로 인하여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동북아의 지역협력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갖지 못하고 있다. 우선, 외교안보 분야에서 동북아 전체를 포괄하는 정부 간 협의체로 한국 정부가 1994년 제안한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가 유일하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비정부간 협의체로서 동북아협력대화(NEACD)와 아태안보협력회의(CSCAP)가 있지만 전자는 동북아시아를, 후자는 아시아태평양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4자회담 등이 있으나 이는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들이다.

경제 분야에는 UNDP의 주관 하에 진행 중인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국가들 간의 입장이 달라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 동북아자유무역지대 등의 구상이 제안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은 없다.

그 외에 문화나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동북아문화공동체 등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모두 단편적이거나 민간차원의 것들이다. 한·중·일 3국이 1999년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ASEAN+한·중·일)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회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었지만 이 회동이 향후 어느 정도로 기존의 장애요소를 뛰어 넘어 동북아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3) 동북아의 미래에 대한 합의된 비전의 부재

냉전 해체 이후 세계화 현상과 지역화 현상의 전 세계적 흐름에 자극을 받아 동아시아의 학계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의 문명이나 정체성 등에 대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논의들은 식민지, 이데올로기, 그리고 무분별한 서양화 과정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지역사회에 커다란 정신적 변화가 일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이와 동시에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너무도 다양하여 쉽게 합의될 수 없음을 각성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열악한 국제상황은 동북아시아가 자신의 미래상에 대한 합의된 비전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현재 ASEAN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지지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신태평양공동체 구상에 합류하고 있으며, 한국·대만·북한은 현재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의 동아시아의 비전에 대한 이러한 분열된 모습은 학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나. 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 역학

문화에 대해 ‘회화적으로 순수한’ 이해나 설명에는 대개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찰머스 존슨은 아시아 경제발전과 창조적 유교와의 연계를 상징하는 사람들은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저널리즘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그러한 시도는 첫째, 기업의 경쟁력을 원초적인(primordial) 특성들로 설명함으로써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기업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둘째, 아시아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다른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와 자신들을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셋째, 민족주의의 새로운 슬로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넷째, 단지 매우 복잡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신문 독자들에게 통속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등의 이유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⁷⁷

이와 같은 지적은 동(북)아시아의 통합이나 공동체 형성에 내포된 대내적 정치의도이지만, 앞의 공동체 형성의 동학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도 그러한 의도가 전개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중국의 새로운 중화주의와 일본의 새로운 대동아공영권이다. 2004년 6월 초 한국이 이미 고래로 성장했으니 미군 철수는 당연하다는 미 행정부 고위층의 언급이나, 새우와 고래의 싸움에서 새우는 짱이고 고래는 밥이니까 새우가 이기게 된다는 농담을 즐기기에겐 어쩐지 석연찮다. 그런 면에서 ‘회화적으로 순수한 이해’ 차원에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성학의 『새우와 고래 싸움: 한민족과 국제정치』(박영사, 2004)는 일독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치 부추김을 받은 어린 아이가 천지도 모르고 날뛰는 꼴”⁷⁸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중국이나 일본이란 위험한(힘이 세지만 비이성적인) 고래가 작고 약한(힘이

⁷⁷ Chalmers Johnson, “Social Values and the Theory of Late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in Chalmers Johnson, *Japan: Who Governs?*(New York: W. W. Norton, 1995). 한경구, “동아시아적인 것을 찾아서,” 『문화과 사회』, 9.4 (1996 겨울), pp. 1737-1738 재인용.

⁷⁸ 성민엽, “같은 것과 다른 것: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상상』 (1997. 봄), p. 82.

약하지만 도덕적인) 새우의 발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다. 중국의 태도와 선택

한국의 많은 지식인은 중국(전통 중국과 현대 중국 포함)에 대해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또는 대항이데올로기로 중화주의를 선택하거나 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결국 과거 조선시대와 같이 중국에 매몰되는 소중화의식과 사대주의로 현실화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중국을 타자화하여 중국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실체를 바라보길 두려워한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좌파든 우파든 세계화와 지역화를 외치면서 자신의 개방성과 관용성을 보이려 하는 가운데 미국을 반대하고 혐오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신화화하고 신성시한다.

우리의 중국에 대한 기대와 집착은 동북아시아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화주의에 이용당하고 배반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중국을 앉힐 경우에는 새로운 패권주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며, 과거 조공체제에서 확인되었듯이 그것은 현재보다 더 심한 종속으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헤게모니 경쟁을 유발하고,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남아연합과의 관계를 확대하여 동아시아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야후중국의 웹페이지를 검색해 보면(2004. 5. 20) 동북아공동체 관련 웹페이지는 31개(중복 제외 5개), 동아공동체 관련은 464개로 대부분 일본의 구상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담고 있고, 동북아 문화공동체 관련 웹페이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중심국가 관련도 100여 개 보였지만 대부분이 한국정부 구상에 대한 단순 보도이고 평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인의 동(북)어(문화)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에 대항하고 동

(북)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중화주의 이데올로기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북아시아국가라는 정체성을 거부하는 중국에게 동북아시아(문화)공동체를 만들자고 요청하는 것은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그들을 동북아시아라는 작은 그릇에 담아두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영토 전체가 동북아시아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들어진 섬’의 나라 한국 지식인의 짝사랑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문화권역에서 중국 중심의 권역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있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인사회만을 중심으로 교류를 진행시키려는 노력도 있다. 어느 중국학자는 현재 ‘대국’(大國)을 중심으로 3개 지역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 하나가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 자유무역지대, 또 하나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공동체, 마지막 하나가 일본이 시동시킨 아태경제권이라고 하였다.⁷⁹ 그 외 여러 중소형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속할 경제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였다:⁸⁰

- ① 아태지역의 모든 국가로 조직된 아태경제권은 비록 매력적인 노래이지만 각국 경제발전의 차이가 크고, 정치제도가 같지 않고, 상황이 복잡하여 유럽공동체와 같이 조약에 근거한 일체화 집단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경제권에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 ② 중국·일본·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및 아세안 4국 등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동아시아경제권(또는 서태평양경제권)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연상시켜 많은 국가의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되살리고, 서로의 발전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영’은 다만 의존 또는 마찰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⁷⁹ 辛向陽·倪健中編, 『南北春秋: 中國會不會走向分裂』(北京: 中國社會出版社, 1995), p. 555.

⁸⁰ 위의 책, pp. 555-557.

- ③ 러시아의 원동과 시베리아, 중국의 화북·서북·동북지역, 몽골, 조선, 한국, 일본을 포괄하는 동북아경제권은 강대한 이익 응집력이 결여되어 있고, 경제협력이 반드시 각방에게 동등한 이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의 매력은 그리 크지 않다. 그 외 일본해경제권·환황해경제권이 있지만 모두 중국의 공명을 일으키지 못한다.
- ④ 중국과 아시아의 중국인 또는 화예(華裔)로 구성된 화인공동체(또는 중국인공동체)는 일정한 현실성이 있다. 대만·동남아·홍콩의 화교 및 화인기업이 중국과 융합하는 것은 경제·지리 인소와 민족 인소 등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화인경제권의 유일한 문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구체화한 결과가 화남경제권의 건립이다.
- ⑤ 화남경제권은 중국의 남부 지역(절강·상해·광둥·복건)을 대표로 홍콩·마카오·대만이 손을 잡아 통일을 결성한 경제권으로, 1989년 말의 GDP는 2,600억 달러로서 아세안의 3,256억 달러와 비슷하다. 이 경제권은 서로 같은 문화와 이익을 갖고 있어 장래가 밝다. 이 지역의 중국과 홍콩·마카오·대만은 서로 보완성이 있다.

이러한 중국학자의 주장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혐의 때문에 동야경제권·환일본해경제권 및 서태평양경제권에 대한 경제적 호감이 적고, 한국과의 발전 정도가 유사한 대만·홍콩·싱가포르로부터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대신 얻을 수 있다는 편리성으로 환황해경제권·동북아경제권에 대한 호감이 적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만만한 중국인 및 화인지역의 국가·지역이기 때문에 중심을 그곳에 두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중국학자의 주장은 화인경제권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다자간 협정이나 공동체를 회피하고 쌍무관계를 통하여 이익을 취할 뿐, 상호이익의 관계 또는 일시적인 상대국의 이익 취득은 허용할 수 없다는 중국인 및 중국정부 본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⁸¹

⁸¹ 박병석, 『중화제국의 재건과 해체』 (서울: 교문사, 1999), pp. 166-167.

동북아의 지역협력에 참여하자는 주장도 결국 중국만의 이익을 우선한다. 중국학자들은 협력 형식이 특혜관세구·자유무역구 또는 공동시장이다. 참여 범위가 동북아경제권이나 동아시아경제일체화⁸² 또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인데, 구성원의 하나일 뿐인 중국의 외교정책인 평화공존 5원칙과 패권주의 반대를 국제조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운다. 또한 국제조직에서의 ‘영도국가’·‘핵심국가’·‘핵심’을 반대하고 모든 정책 결정의 민주협상·결정을 강조한다.⁸³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자신들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감추지는 않는다:⁸⁴

첫째, 아세안을 포함한 동아시아경제일체화는 중국에게 16~20억 인구로 구성된 동아시아통일대시장을 제공하는데, 이는 중국 내의 통일대시장의 건립에 유리하게 된다. 동아시아통일대시장은 중국시장을 세계시장과 연결시키는 교량이 된다. 동아시아통일대시장은 점차 통일된 시장메커니즘을 실행하게 될 것인바, 이는 필연적으로 현재 중국 통일시장을 분열시키는 각종 인소를 제거하여 중국 시장메커니즘을 보다 통일되게, 보다 규범화되게, 보다 국제화되게 하여 중국의 전면적인 대외개방에 유리하게 된다.

둘째, 동아시아경제일체화합작은 중국으로 하여금 ‘관세무역협정(실은 WTO) 재가입’(復關) 이후의 복잡한 국면을 대처하는 데 용이토록 할 것이다. ① 중국은 동아시아경제일체화조직의 집단담판 역량을 빌어 북미와 서구의 진일보된 시장개방을 쟁취할 수 있다. ② 중국시장의 구미에 대한 개방정도를 동아시아국가와 상호 협조하는 기초 위에서 구미와 집단담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중국이 직면한 구미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③ 중국의 경제실력은 상당 기간 동안은 구

⁸² 중국사회과학원 世界經濟與政治研究所 부연구원 沈驥如是 동아시아경제일체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와 지구로 아세안 6개국, 인도차이나 3개국, 미얀마, 중국 3방(대륙 홍콩마카오 대만), 한국, 조선, 일본, 몽골 등 17개 단위로 한정하고, 러시아가 참여한다면 18개 단위가 된다고 한다. 沈驥如, 『中國與東亞經濟一體化合作的構想』, 華人經濟年鑑編輯委員會編, 『華人經濟年鑑, 1994年版』(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427-429.

⁸³ 沈驥如, 『中國與東亞經濟一體化合作的構想』, p. 430.

⁸⁴ 위의 책, pp. 427-429.

미 및 일본과 전면적인 경쟁을 전개할 수 없다. ‘……동아경제일체화합작’은 이 합작에 참여한 국가(지구)에 ‘관세무역협정’이 규정한 조건보다 우월한 최혜국대우를 제공하면, 이는 구미가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거대한 완충구(緩衝區)를 갖게 된다. 이리하여 중국 기업으로서는 16~20억 인구가 보장하는 시장을 갖게 되고, 중국의 주요 경쟁대상은 미국·유럽·일본에서 일본으로 감소된다.

셋째, 만일 동아시아 국가가 합작을 강화하여 동아경제일체화합작조직을 건립하면, 구미에 맞설 수 있다. 동아국가(지구) 대부분이 발전도상국이기 때문에 동아경제일체화 조직과 EU 및 NAFTA와의 무역담판은 북방 공업국가 일통천하(一統天下)의 국면을 타파하여 남방 발전도상국의 이익이 마땅한 중시를 받게 될 수 있다. 이는 발전도상국의 발전에 유리하고, 아울러 남북관계의 개선에 유리하고, 합리적인 국제경제 신질서의 건립에 유리하다.

넷째, 동아시아경제일체화합작은 중국의 대외개방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동아시아경제일체화합작은 중국의 평화통일을 촉진시켜,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중화민족으로 하여금 다극세계의 한 극이 되도록 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고속성장과 경제일체화의 곱셈 효과는 통일 이후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 수출무역의 7~8%를 점하여 일본이 점한 액수와 유사하게 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중요 국가가 되고 중화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갈수록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한 개인의 견해이지만 중국이 주변국가, 특히 동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협력과 발전을 통해 목표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견해이다. 결국 주변 아시아 국가인 ‘작은 용’(小龍)을 디딤돌로 이용하고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하고 미·유럽 및 일본과 자웅을 겨루는 제4의 극(極), ‘대봉’(大鵬)⁸⁵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⁸⁵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연구생원은 기러기떼이론을 빌어 중국은 기러기떼 바깥의 ‘대봉’으로서 기러기떼이론이 이 대봉을 아우를 수 없고, 기러기떼가 중국의 경

이는 WTO 체제가 추구하는 세계경제의 일체화는 고려하지 않은 견해로 보인다.⁸⁶

전통적인 화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화사상이 단순히 중국의 독립과 생존에 국한될 가능성은 적다. 중화사상의 핵심 개념의 하나인 ‘예(禮)’에는 ‘평화적 대등 관계라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⁸⁷ 문명의 우월성이라는 허상 아래 조공체제로 구성된 중화질서 속에서는 국가 간의 평등한 대등관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조공’은 현재 ‘영향력’의 개념으로 변용되어 반복될 가능성이 다분하다.⁸⁸ 명시적인 것이든 암시적인 것이든 중화사상이 전제되어 있을 때, 중국인에게 동아시아 담론은 중국 중심주의의 확대로 이해될 가능성이 엄존한다. 이러한 우려가 엄살이 아니라는 것은 현재의 중국인 스스로가 보여주는 바다. 이른바 ‘사회주의식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래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국제사회에서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면서 중화사상은 ‘대중화경제권’의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다.⁸⁹

‘대중화경제권’이나 ‘대중화문화권’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전통적인 중화사상이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의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동방 문명의 대표’이며 ‘한자 문화권의 고향’임을 자부하는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들을 중심에 두는 지역질서를 추구하려 할 것이기 때

제비약을 이끌 수 없다고 하였다. 李岩, 『重評東亞奇跡與雁行模式』, 『當代亞太』, 1998:2, 46. 다른 학자는 중국 총체경제실력의 증강으로 동아시아의 기관차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러기떼의 꼬무니에 서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일본이 V자형과 같이 맨 앞에서 기러기떼를 이끄는 것보다는 W자형과 같이 여러 국가가 기러기떼를 이끄는 형세로 발전할 것이라고 한다. 그 중 한 우두머리는 중국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傅驪元, 『東亞經濟與中國』(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107.

⁸⁶ 박병석, “중국 현대의 문화모델선택과 현대화론,” 윤희섭 외, 『세계정치의 쟁점과 이해』, pp. 167-169.

⁸⁷ 이성규, “중화 사상과 민족주의,” 정문길 외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문화과지성사, 1995), p. 129.

⁸⁸ 청·일 전쟁에서 패하기 전까지 대외적으로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청의 전략과, 현재 남북한 모두와 수교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외교 전략은 좋은 비교의 대상이다.

⁸⁹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병석, 『중화제국의 재건과 해체』(서울: 교문사, 1999), 제1-2장을 참조.

문이다. 짐작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담론은 정치·경제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상·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 같은 중국 중심주의와의 대결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담론은 부상하는 ‘대중화경제권’ 속에서 각 국가 간의 평화적 대등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과제마저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⁹⁰

중국에 있어서 ‘동아시아경제모델’은 내재적 요인으로서 유교적 전통문화를 점차적으로 중국체제의 가치체계로 인정하고 이러한 가치체계 하에서 강력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희소자원을 배분하면서 자본을 축적하고 확대 재생산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중국이 공산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이탈하여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을 통해 그 실패를 경험하고 1980년대에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문혁으로 파괴되었던 전통적 가치를 회복하고 중국의 현대화를 유교적 전통가치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발전모델을 수용하여 연구하였다. 아울러 신권위주의를 통하여 국가 주도경제발전모델과 독재를 정당화하였다.

더더욱 회의적인 것은 손문(孫文)이 1924년 일본에서 ‘대아시아주의’와 관련된 강연을 통해 서구열강에 대항하여 피압박민족을 구하기 위한 아시아연대를 제기한 이후 중국은 아시아 문제를 고민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세계의 문제를 동서(東西, 동양과 서양)의 문제가 아니라 중서(中西, 중국과 서양)의 문제로 고민할 뿐이다. 아시아 문제는 문화대국 변방에 위치한 주변국가의 문제이지, 중심을 자처하는 중앙대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오래 숙고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인지 1990년대 이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그 주의력을 미국에 집중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중국 정부의 시각을 대변하였지 ‘아시아적인 시각’을 가져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세계는 과거 중체서용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로 단순화되었다.

⁹⁰ 한기형, “동아시아 담론과 민족주의: 신채호를 중심으로” (네이버지식검색논문).

라. 공동체 형성의 순서상 문제

동북아시아의 근현대화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대외개방에 따른 ‘외부자극’과 개혁·변법·혁명 등 ‘내부반응’의 상호 결합의 과정이었으며, 기물(器物)-제도(制度)-사상·문화(思想文化)의 층차(dimension)로 전후 상응하여 심화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여기서의 문화개념은 좁게는 인류가 자연에 인공을 가하여 자아를 소조(塑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념·심리상태·사유방식·심미의식·도덕·종교신앙·민족습성·형이상학 등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넓게는 이 정신층면의 정의를 내핵으로 하고, 외표인 물질층면의 개조된 자연존재물, 중층으로 심(心)과 물(物)이 결합한 제도층면(각종 제도·체제·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정의된다. 문화의 정신층면은 국민의 공통성질 및 정신특질 외에 역사를 거쳐 이어져온 사상·도덕·풍속·예술·제도 등을 가리키는 ‘전통’(tradition)과도 동일시되기도 하고, ‘문화’(culture)와 동일시되기도 하였다.⁹¹

위의 3개 층차론은 비록 동서 문화의 접변을 통해 확인된 바이지만 동북아시아 통합 또는 공동체 형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형성의 난이도를 보았을 때 기물층차의 경제일체화, 경제권 또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가장 수월하며, 그 다음 제도층차의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야 문화층차의 문화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통합의 바람직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과 순서를 바꾸어 추진할 경우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전제하지 않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공동체의 추진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⁹¹ 박병석, 『중화제국의 재건과 해체』 (서울: 교문사, 1999), pp. 167-169.

4.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가. 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 극복 방향

이와 같이 인적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에는 많은 장애가 예상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공동체 형성의 당위성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러한 장애를 제거되지 않고는 공동체가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여러 장애요인들이 극복되어야 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 동북아는 강대국이 집중된 지역으로 대국간 관계의 발전은 아직 유동적이다. 각국 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결성하고 있음에도 한·중·일 삼국 간에 존재하는 역사와 영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고구려사 뺏기와 일본의 독도 뺏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외교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둘째, 동북아 각국은 대외관계의 전략 중점을 아시아로 돌려야 한다. 현재 동북아 각국은 아직은 대외관계전략의 중점을 동북아에 두고 있지 않다.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와 탈구입아(脫歐入亞) 사이를 줄타기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2대 강국으로 아시아를 벗어나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화북과 동북 지역을 통한 대외교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세계경제와의 접목은 화남연해 및 장강삼각주가 우세한 위치에 있다. 한국은 통일외교 차원에서 동북아협력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셋째, 동북아에는 냉전체제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지역 정세에 모순과 충돌이 잠재되어 있다. 남북한 문제는 주변 4강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고, 대만문제는 미·중 관계와 일·중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안보 면에서 중·조 상호원조조약, 미·일 안전보장조약, 한·미안전보장동맹이 남아 있고,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화 부인에 대한 중·한·조·대 등의 반감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통한 냉전의 유물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4강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지역은 발전 수준의 차이가 심하면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추세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경제중속 현상은 동북아 3국의 관계를 급속히 변형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결국 동북아 각국 간의 협력권이나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노력과 논의는 한 국가 또는 민족의 문화를 수단으로 할 경우 풀리지 않는 해묵은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모순은 확대 재생산되며,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배후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혐의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강대국의 이기적 목적이 존재하는 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권역 개념이 아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느슨한 교류·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 간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이나 환황해권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필요성 증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주요 3국은 인적자원 분야에서 그 량이나 질적인 수준 및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3국간의 차이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상호 보완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더욱 증대될 것이다.

첫째, 21세기에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시대로 변하고 있다. 향후 세계질서는 유럽연합(EU), 미주자유무역지대, 그리고 아직은 지역통합이 실현되지 않은 동아시아·동북아의 지역경제통합체로 3등분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동북아지역 또는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합의 가시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역통합은 장기적인 과제이지

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상호 인적자원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 혹은 공동체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3국간의 빈번한 노동력 유동은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공동 노력이나 공동체 형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지역경제통합체를 만들기에 앞서 동북아 3국의 분야별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자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앞에서 논의한 많은 장애요인은 결국 상호 불신과 역사적 배경이 큰 작용을 하였지만, 금세기 들어 3국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류 등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추세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이전에 인적자원 분야를 매개로 더욱 실질적인 지역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셋째, 21세기에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문화산업은 결국 사람이 주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상호 공동으로 관련 산업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문화와 경제가 결합한 문화산업은 문화로 경제를 살리는 산업으로 동북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각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살려 미래의 산업으로 키워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는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어 실업구제와 인적자원 활용에 있어서도 큰 몫을 할 것이다.

넷째, 다원화사회가 도래하고 세계화 추세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서 환경, 에너지, 폭력, 마약, 일기예보, 인구, 식량, 국제행사공동개최 등의 문제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상호 정보 및 자료의 교환을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정치적 권위가 저하되어 가는 추세 속에 시민사회의 등장, 세계적 보편주의와 개발 국가나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의 조화에서 새로운 정치모델 또는 사회모델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시대적 필요가 있다.

여섯째, 21세기에는 아시아적 가치가 선별적으로나마 세계적 보편윤리

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서구사회의 급속한 사회변화로 많은 사회 병리적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의 치료적 가치로서 아시아적 가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일곱째, 여가사회 및 노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문화 사업들은 국제적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관광산업이나 공연예술분야사업 및 문화네트워킹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는 향후 동북아 3국간의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력의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된다면 각종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의 상호 인증문제가 제기되고, 결국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다.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공동체 형성 촉진 요인

첫째,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다. EU나 NAFTA가 성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주요한 동력 중 하나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다. 즉 지리적으로 참여국가들 간에 연결되어 있고, 동일 문화권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지역은 완전히 육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통합이 용이했다. 한편 한·중·일 3국간의 지리적 인접성은 EU나 NAFTA 국가들과는 달리 육상교통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3국간에 바다(근해)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해양을 잘 활용한다면 훨씬 지리적인 소통이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후 경의선 철도를 복원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육상으로 부산에서 신의주를 거쳐 중국에 철도망이 연결되고 도로망이 확충될 것이다. 그러면 육상이나 해상으로 연결되게 되어 훨씬 수월한 교류 및 무역관계가 구축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들 3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적인 양식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도 잠재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중·일은 인종이 비슷하고, 역사적인 전통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불교문화의 영향이라는 중

교적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교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자문화권이라는 언어적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다.⁹²

둘째, 동북아 3국의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이다. APEC이 지리적 비인접성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느슨한 지역협의체를 성립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난 20년간 이 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 경제성장률을 앞서가고 있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지역 간의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⁹³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고 역동적인 지역이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4룡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ASEAN 국가들은 세계 경제성장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이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위상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채권국이고, 중국은 21세기에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한국은 IMF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신흥 발전국가의 성공의 표본이다. 따라서 APEC이나 ASEAN의 성립과 발전은 이러한 경제적 토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동북아 3국의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은 이러한 세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 의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인적 교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과거 냉전 시기는 동북아 세 나라의 인적 왕래가 드물었다. 특히 민간인의 교류는 한·일간을 제외하고 중국과는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중국이 개방하면서 인적교류는 관광·유학·무역·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산업 시설의 상호 투자 확대는 노동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⁹² 후쿠야마(Fukuyama 1995: 25-31) 교수는 일본과 화교 경제권의 경제적 성공을 유교 문화의 전통과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신뢰(trust)'에서 찾고 있다.

⁹³ 유현석 (1998), p. 214.

는 더욱 증대될 것이고, 결국 산업과 연계한 노동력 시장에서 상호 인적 자원개발 및 활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특히 최근 동북아에 불고 있는 문화 방면의 상호 이해 증대와 이에 따른 인적 교류 확대는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촉진시키고 있다.

라. EU 경험이 주는 시사점

앞에서 1990년대 유럽의 경제사회적 통합 진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유럽통합 이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회원 국가들의 노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유럽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은 문화적 교류를 위한 교육적 역할의 증진과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다양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하여 유럽공동체 의식을 확대시키고, 유럽문화에 대한 공통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회원 수가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크라테스 프로그램은 내일을 책임 질 유럽 청소년들에게 교육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에서의 혁신과 창의력 그리고 질적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으로써 미래에 있어서의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에라스무스는 유럽통합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전망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학생 교류가 유럽 고등교육의 정규형태로 발전되는 등 고등교육이 한층 성숙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는 유럽국가 등의 '정규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과 현지 참여기관을 통하여 학생들의 언어학습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주관국가의 편의시설과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집중시켰으며, 단기적인 교류학습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과정의 통합’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에라스무스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학생교류와 협력관계를 위한 자금지원, 고등교육협회의
구조와 성격, 학생의 유럽에 대한 이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기관간의 국제적 협력 사업과, 학생과 교수들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
특히 외국에서의 경험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신진 교
수들의 활약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신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했다. 무엇보다 언어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인터넷의 사용
이다. 인터넷은 학생들에게 지적 욕구를 자극하는 양질의 학습 자료에 대
한 손쉬운 접근과 영어, 불어, 독일어 및 다른 언어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많은 외국어와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획기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유럽공동체의 에라스무스 역시 적극적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으로 협력 프로그램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방법을 꾸준히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학습자료 접근의 용이성, 언
어 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 간의 협
약으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교육의 성
장을 도모한 점과 타 국가와의 학점상호인정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의 장
을 넓히고, 국제적 협력 사업과 학생과 교수들의 상호 교류 프로그램 등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 역시 유럽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폭넓은 인적자원개발에 의미 있는 기여
를 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상 유럽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노력에서 우리는 특히 국가 차원의 행
정적, 재정적 지원이 국제적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끄는 견인
차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는 한·중·일 3국의 협력체계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 및 경제발전정도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술력과 자본, 노동력에서 다양한 편차를 갖
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가 간 교류가 가능한 교육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능전달위주의 교육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학력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 대도시 거주자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더욱 폭넓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수한 교육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후 이를 국가 간 상호 인정하여 동북아 지역 내 인력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 데에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체제의 자격과 능력의 수준이 동일하기는 불가능하다. 우위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보면 상대방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데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과 소외감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완적 교육과 병행하여 인정해주는 방안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스스로의 능력을 계발하고 확장시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 노동문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진출과 탈 지역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각 사업체로 하여금 직원들의 계속교육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업체는 실질적 현장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터전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작업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심리적 거부감과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교사 선별, 교재 개발에 관한 동북아 지역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위에 있는 국가의 체제를 그대로 도입하지 말고 노출되는 문제점과 취약

점에 대한 상호 협의와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및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다국적 인적자원개발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다르고, 제도적 측면과 규모의 측면에서 커다란 격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지역적·경제적·사회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고, 서로의 장점을 무시하지 않으며, 몇십 년 간 지배해 온 상대방의 의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서서히 진행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쪽으로 움직이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실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협동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인적자원분야에서 주요국가의 현황과 개발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데 인적자원분야는 각 국의 경제특구 지정과 물류 중심지 건설 등 물적 분야와 함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식 기반산업 및 디지털경제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한 국가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량과 질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결국 인적자원개발 분야는 우리의 경우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 제고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고, 국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상생적·상보적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분야의 문화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인적자원 분야의 실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값싼 노동력으로 실질적인 세계의 공장으로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적자원의 양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인적자원의 수준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거품경제 이후에 새로운 분야 개척과 국내 경제의 안정을 기반으로 세계 부품·소재 및 미디어 산업과 IT산업에서 세계정상에 있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예상되며, 불경기로 인한 청년실업문제로 장기적인 인력수급과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노동력의 재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1970~80년대의 고속 성장을 끝내고 제조업위주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IT산업과 반도체 및 일부 소재산업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반면에 양적인 인적자원의 증가는 있었지만, 질적인 증가의 부재와 전문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공조 미비로 인해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는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산업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투입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과 중국 경제는 그간 자본투입의 확대를 통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자본투입 주도형(investment-driven)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투입 및 노동투입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 즉 생산요소 투입의 양적 확대에 의한 성장전략은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전략의 기저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인력공급 중심, 거시적·정량적 접근방식으로는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주도, 특히 산업계의 역할 강화와 인력수요 중심, 중위적·정성적 접근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는 동북아의 경제적 성장과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결국 동북아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국은 향후 EU나 NAFTA같은 경제 블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하고 밀접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은 미래의 정치·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로의 우수한 부분과 미비한 부분을 공유함으로써 한 단계 더 앞선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즉, 비교우위의 상황과 같이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일본과 한국의 집약기술을 더함과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상황에 맞서 공동의 인적자원 개발과 교류에 정책적·정서적 그리고 기업 간, 국가 간 긴밀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저해되는 많은 장애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즉 언어나 문화 및 역사적 경험 등에서 많은 오해와 반목이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장애 요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3국의 상호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 형성은 그 당위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앞에서 EU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내용으로 EU 국가 간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은 동북아 국가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결과 우선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장애 요인의 해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북아의 주요 국가 간에는 어떤 분야나 형태든 공동체 형성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이나 북미의 경우도 장애 요인이 있었지만, 충분한 시간과 노력으로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여 점진적으로 공동체 형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기존의 역사적·문화적·지리적·사상적·언어적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이 공동체 형성의 전제로 동북아 3국의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FTA협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은 기본적으로 상호 노동력의 충분한 교류나 수요가 증대될 경우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수요는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 보완성 확보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중·일의 인적자원은 앞에서 살펴본 현황과 같이 서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인적자원 수나 노동력의 수준 및 기타 인적자원관련 요인에서 상호 많은 보완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여 상호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공동체 형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은 점진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거나 협의하여 실천 가능한 영역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상호 필요로 하는 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적 파급효과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셋째, EU나 NAFTA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이후 공동체 내에서 인적자원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동북아 국가는 공동으로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타 공동체에 대처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타 분야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즉 기능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경제·무역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분야로 확대하는 방향의 전략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2. 제언

이상의 기본적인 전제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 추진의 과제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 할 수 있다.

첫째,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3국의 부처 책임자 및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어떤 형태든 동북아 공동체 구성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가 가능한 각 분야별로 선도적인 입장 표면과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3국의 인적자원

분야의 실태는 우리나라가 중간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중·일의 기술력이나 인적자원의 수 및 수준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한 지리적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동북아시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데 대내외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추진에서 우선 인적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류 수요가 많은 분야의 기술자격을 공동으로 개발·교육훈련·인증·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협의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 3국의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즉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관련한 충분하고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관련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가간 상호 이해 도모 방안과 갈등 해소 방안, 공동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비교 연구 등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Brzezinski, Z. 김명섭 옮김.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삼인, 2000.
- 가와카즈 헤이타(川勝平太). 『아시아 개념의 성립과 변용』. 신아세아, 1998년 겨울호.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간추린교육통계』. 2003.
- 강만길.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역사적 역할을 생각 한다』. 한국교육개발사상계, 2002.
- 강상중.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뿌리와 이파리, 2002.
- 강순희. 『지식정보사회의 철학과 비전에 관한 심포지움』. 경제사회연구회 · 한국정보사회학회, 2000.
- 강원택 · 조홍식. 『유럽의 부활』. 서울: 푸른길, 1999.
- 교육부.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추진현황과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2002.
- _____.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방안』. 2000.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편람』. 2001.
- 국민호. 『동아시아의 국가주도 산업화와 유교』.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9.
- 권대봉. 『인적자원개발의 개념변천과 이론에 대한 조합적적 고찰』. 2003.
- 김명섭. 『대서양문명사: 팽창, 침탈, 헤게모니』. 서울: 한길사, 2001.
- 김세연. 『말스의 비서구사회관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 김용민 · 박기성.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합한 인적자원 축적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7.
- 김일곤. 『유교문화권의 질서와 경제』.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85.
- 김진철. 『세계체제와 지역주의 정치경제학』. 세계정치경제, 1999.
- _____. 『세계정치경제론』. 서울: 세계정치경제연구소, 1994.
- 김태기. 『국가인적자원개발 비전과 추진전략』. 교육부, 2000.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 계획’ 수립추진방안』. 노동부, 2000.

- 대학교육기본통계자료. 『연도별 대학진학률 추이』. 2001.
- 대통령보고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01.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 정책자료, 2003.
- 리관유/자카리아. 『문화는 숙명이다』. 전통과현대, 1999.
-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1999.
- 뮐러, 하랄트. 『문명의 공존』. 이영희 옮김. 서울: 푸른숲, 1999.
- 박덕규. 『선진국의 교육제도』. 서울: 배영사, 1994.
- 박명석. 『케뮤니케이션과 세계 기업문화』. 서울: 태학사, 2003.
- _____. 『중국상인문화』, 서울: 교문사, 2001.
- _____. 『중화제국의 재건과 해체』. 서울: 교문사, 1999.
- 세계은행. 『세계발전지표』. 2001.
- 송병락. 『한국경제론』. 박영사, 1992.
- 신광영.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문학과지성사, 1999.
-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 심영섭·하병기. 『개방형 신통상국가론: 21세기 국가발전의 대안적 전략』, 산업연구원, 2000.
-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4.
- 원용진. 『한류 뒤집어보기』. 한겨레신문, 2001.
- 월러스틴, 이매뉴얼 외. 송철순·천지현 옮김. 『반체제운동』. 창작과비평사, 1996.
- 이대근. 『한국경제의 구조와 전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2.
-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서울: 당대, 1998.
-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종원. 『최신 EU론』. 도서출판 해남, 1998.
- 이지연. 『유럽연합의 직업교육 및 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이호재. 『유럽통합과 교육협력』. 서울: 법문사, 1999.
- 인문사회연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제1차 연찬회 자료집. 2003.

- _____.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제2차 연찬회 자료집. 2003.
- _____.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정책 연구제안서. 2003.
- 일본역사교육자협의회. 『세계사 밖의 세계사: 중동-아프리카』. 서울: 비안, 1994.
- 장흥.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고원, 1999.
- 정중화. 『유럽연합 국가들의 교육제도』. 서울: 법문사, 1997.
- 정지선. 『전문대학과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학위과정 공동 운영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 정문길 외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5.
- 정철영. 『직업기초능력 강화방안』. 교육부, 2002.
- 중국사회과학출판사. 『중국인구연감』. 1985.
- 중국재정경제출판사. 『국제통계연감』. 2001.
-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2001.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최영진. 『동양과 서양: 두 세계의 사상, 문화적 거리』. 지식산업사, 1998.
- 최원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토플러, 앨빈. 이규형 감역. 『자메리카』.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5.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3.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 _____. 『고령자 통계』. 2003.
- _____.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각 년도.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각 년도.
- _____. 『성·연령별 15세 이상인구』. 각 년도.
- _____. 『경제·비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 한국교육개발원. 『선진국 교육개혁의 최근 동향』. 한국교육개발원, 1998.
-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 2002.

한국동북아지식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전통과현대, 1998.
 한국정치연구회 편.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19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동북아시아에서의 시장경제와 전통』. 1998.
 헌팅턴, 새뮤얼.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1997.

Abu-Lughod, Janet.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 D. 1250-135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Amseden, Alice. *Asia's Next Giant: South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Archer, Clive. *Organizing Europe: The Institutions of Integration*. Aberdeen, UK., University of Aberdeen, 1994.

Arter, David. *The Politics of European Integr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Dartmouth. 1994.

Barro, Robert J. & Jong-Wha Lee. *International Data on Educational Attainment Updates and Implications*. 2000.

Bary, De William Theodore. *East Asian Civilizations: A Dialogue in Five Stag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Bellah, Robert N. *Tokukawa Religion: The Value of Pre-Industrial Japan*. Glendale: The Free Press, 1957.

BIBB. *Berufsbildungsbericht*. Bonn: BIBB, 2004.

Bloom, William. *Personal Identity,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Brock, Colin & Witold Tulasiewicz. *Education in a Single Europ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4.

Castells, Manuel.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owards a Europe of*

- Knowledge*.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4.
- European Commission. *Accomplishing Europ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Study Group on Education and Training*. 1994.
- _____. *Guide to programmes*.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1994.
- _____. *Key Data on Education in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1994.
- _____. *What the Programmes Have Achieved*. Commission working document. 1994.
- Evans, Peter B.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Frank, Andre G. and Barry K. Gills, *The World System*. New York: Routledge, 1996.
- Greinert, W. *The Dual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tructure and Function*. Deutsche Gesellschaft fue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GmbH, 1994.
- Hall, Rodney. *National Collective Identity: Social Constructs and International System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 Hay, Colin and David Marsh, eds. *Demystifying Globalization*. Polis. UK: University of Birmingham, 2000.
- Hofheinz, Roy, Jr. and Kent E. Calder. *The East Asian Edge*. New York: Harper and Row, 1982.
- Holton, Robert J. *Globalization and the Nation-State*. London: Macmillan, 1998.
-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 각 년도.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2001.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
- Jenkins, Richard. *Social Identity*. Routledge, 1996.

-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Japanese Industrial Policy,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 Kohn, Hans.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N.Y.: D. Nostrand Co., 1971.
- Latham, A. J. H and H. Kawakatsu, eds. *Japanese Industrialization and the Asian Economy*. London: Routledge, 1994.
- Leonard. Dick. *Guide to the European Community*. The Economist Books. 1994.
- Martin, W. G. ed. *Semiperipheral States in the World-Economy*. New York: Greenwood Press, 1990.
- Morishima, Mikio. *Why Japan Has Succeed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2002.
- _____. *Employment Outlook*. 2001.
- _____.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1*. OECD, 2001.
- Patten, Christopher. *East and West: China, Power, and the Future of Asia*. New York: Times Books, 2000.
- Scholte, Jan Aart. *Globaliz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 Tai, Hung-Chao. *Confucianism and Economic Development: An Oriental Alternative?* The Washington Institute Press, 1989.
- The Rt. Hon. Lord Thomson of Monifieth, KT. *Education Without Frontiers*. London: Overseas students trust. 1994.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2*.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2002.
- UNESCO. *World Education Report*. 2000.
- United Nations(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ECE), Present State of and Prospects for Adult and Out-of-school*

- Education Statistics in Italy*. Geneva: United Nations(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ECE), 1988
- Wallerstein, I. *Geopolitics and Geoculture: Essays on the Changing World-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_____. *Historical Capitalism*. London: Verso Editions, 1983.
- _____.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9.
- _____. *The Modern World- System: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White, Gordon, ed. *Developmental States in East Asia*. London: Macmillan, 1988.

厚生労働省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將來推計人口」. 2001.
 總務省統計局. 「勞働力調査報告」
 總務省統計局. 「家計調査」.
 文部科學省, データから日本の教育 2004. 2004.

2. 논 문

- 강정인.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봄/여름. 2000.
- _____. “세계화·정보화 시대 동아문명의 문화정체성: 동아시아 담론의 비판적 검토.”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_____. “정보화·세계화 시대 서구중심주의와 동아시아.” 『정보화·세계화와 동아문명 세미나 논문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및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공동 주최, 2002.
- 고병익.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疎遠과 통합.”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1995.
- 고영근. “아시아적 가치의 혼란과 동아시아 경제위기.”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고재광.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적 전개과정 및 서구 담론과의 조응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99.
- 공성진. “동아시아 상생(相生)구조의 가능성.” 『상상』. 5. 2. 1997년 여름.
- 김경일. “공동체론의 기본 문제.”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 _____. “동아시아와 세계체제이론.” 『정신문화연구』. 1998.
- 김경준·김성수.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1998.
- 김광억. “동아시아 담론의 문화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1998.
- _____. “동아시아 담론의 실제-그 분석과 해석.” 정재서 편저. 『동아시아연구: 글쓰기에서 담론까지』. 서울: 살림, 1999.
- 김기봉. “동아시아 담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국주의로부터 제국주의를 넘어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2001.
- 김대중. “문화는 숙명인가.” 이승환 외. 『아시아적 가치』. 전통과현대, 1999.
- 김명섭. “지정전략(geostrategy)으로서의 동아시아론: 비판적 검토.” 한신대 인문학연구소 제19회 월례발표회 자료, 2002. http://www.han-shin.ac.kr/%7Eehih/research/essc_19.html.
- 김명수. “아시아적 가치의 문화적 기원: 싱가포르 중화민족의 정체성 위기.” 『전통과 현대』. 2000년 봄.
- 김영명. “동아시아 정치체제의 이론적 모색.”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 김요기. “유가 윤리와 경제 발전-베버 학설의 새로운 탐색.” 정문길 외 엮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1995.
- 김용복.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론의 검토.” 『국제정치경제연구』. 1998.
- 김일곤. “유교적 자본주의의 인간존중과 공생주의.”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열화당, 1999.
- 김정숙. “동북아문화협력 거점국가 한국의 미래 제시하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요약. 2003. http://www.kpi.or.kr/database/bokji/151/ct_009.htm.

- 김주성. “언어 현실과 동북아 문명의 미래.” 한글문화연대 첫번째 여름 토론회 발표자료. 2001.
- 김진석. “동양 담론의 정체성: 유토피아, 아토피아, 디스토피아.” 네이버 지식검색논문.
- 김진섭. “동북아시아 지역 통상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네이버 지식검색논문.
- 김한규. “전통시대 중국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질서.” 『역사비평』. 2000년 봄.
- 김혜숙. “아시아적 가치와 여성주의: 책임의 도덕과 권리의 정치학.” 『철학연구』. 44. 1999 봄.
- _____.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 ‘예치’개념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1. 1995.
- 김호열. “평화와 정의의 동북아중심국가.” 『두레사상』. 6. 2003년 여름.
- 니스벳, 로버트 A. “공동체 이론의 역사.”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 다나카, 스테판.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외 공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5.
- 덜릭, 아리프.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창작과 비평』. 1993년 봄호.
- _____.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정문길 외 공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 뚜웨이밍. “유가 철학과 현대화.”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5.
- 민두기·정재서. “특별대담: 실증의 피안과 중국학의 미래.” 정재서편 저. 『동아시아연구: 글쓰기에서 담론까지』. 서울: 살림, 1999.
- 박광주. “아시아 공동체, 현실인가 신화인가.” 세종연구소 편. 『아시아와 세계화-동아시아국가의 대응』. 세종연구소, 1998.
- 박덕규. “유럽 사회의 자격증 제도.” 『교육월보』. 1991.
- 박병석. “중국 현대의 문화모델선택과 현대화론.” 윤행섭 외. 『세계정치의 쟁점과 이해』. 서울: 박영사, 1993.
- 박사명.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정치 동학.” 한국정치연구회역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서울: 삼인, 1998.

- 박우서.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정책방향.”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백낙청. “새로운 전지구적 문명을 향하여.” 『새로운 전지구적 문명을 향하여 민중과 민족, 지역운동들의 역할』. 창작과비평사, 1996.
- 백영서. “동아시아에서의 문명론과 국민국가: 20세기 전반기의 담론 구조 재검토.”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_____.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한국인의 시각.” 정문길 외 엮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 _____. “진정한 동아시아의 거처.”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문학과지성사, 1997.
- 백종국.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 『두레사상』. 6. 2003년 여름.
- 사카모토 요시가즈, 최원식·박명규 대담. “동북아공동체의 구축, 이상과 현실.” 『황해문화』. 34. 2002년 봄.
- 설한. “‘아시아적 가치’ 논쟁: 보편성과 특수성.” 『동북아연구』. 경남대공동문제연구소, 2000.
- 성민엽. “같은 것과 다른 것: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상상』. 1997 봄.
- 손호철.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학: 한국의 ‘IMF 위기’와 ‘동아시아 모델’ 한국정치연구회 엮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 1998.
- 신용하. “공동체에 대한 현대인의 추구.” 신용하 편. 『공동체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 아태평화재단. “새천년을 향한 한국사회의 비전.” 『제23차 아태평화재단 학술회의 논문집』. 1999.
- 안병직. “한국의 근·현대화와 아시아적 가치.”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안택원. “태평양시대의 신화성과 현실성.” 안택원 외, 『세계화와 한국의 진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오용석.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 중국의 경우.” 『아시아적 경제발전은 가능한가?』. 한국비교경제학회 제7차 학술대회. 1998.
- 월러스틴, 이매뉴얼. “유럽중심주의와 그 화신들: 사회과학의 딜레마들.” 『창작과 비평』. 1997년 봄.
- 유석춘. “‘유교 자본주의’와 IMF 개입.”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동아시아

- 의 성공과 좌절』. 전통과현대, 1998.
- _____. “동아시아 ‘유교자본주의’의 재해석.” 『전통과 현대』. 1997년 겨울호.
- _____.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전통과 현대』. 1997년 여름호.
- 유용태. “집단주의는 아시아 문화인가: 유교자본주의론 비판.” 『경제와 사회』. 49. 2001년 봄.
- 윤영관. “동아시아 모델과 세계자본주의: 시장, 국가, 제도의 관점에서.” 백광일·윤영관 편.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윤종설·정창화.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유럽연합(EU)의 공동체형성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이 근. “동아시아의 발전유형과 한국자본주의.” 안병직 엮음. 『한국경제: 쟁점과 전망』. 지식산업사, 1995.
- 이동인.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유교적 가치: 두 일간지의 내용 분석.”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의 종교와 사회변동』. 문학과지성사, 1987.
- 이상익. “유교와 자유민주주의.” 강정인 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 이상훈. “‘동북아중심국가’ 플랜의 본질과 한계: 발전기획의 파탄과 글로벌 시티 네트워크로의 편입과 배제.” 『월간사회진보연대』. 42. 2004.
- 이성규. “중화 사상과 민족주의.” 정문길 외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1995.
- 이수훈. “반주변부적 국가발전의 성공과 좌절.”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 서울: 전통과 현대, 1998.
- 이승환. “반유교적 자본주의에서 유교적 자본주의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2. 1999.
- 이윤호. “우리나라 외환경제위기의 문화적 설명과 유교자본주의 비판.”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임문영. “21세기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 한국의 역할.” 『유럽연구』. 10. 1999년 겨울.
- 임반석. “유학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관한 약간의 비판적 사색.” 『정신문화연구』. 21. 4. 1998.
- 임현진. “‘근대화’를 통해 본 동아시아의 발전: 신화와 현실.” 『정신문화연구』. 21. 1. 1998.
- 장시기. “동아시아의 근대형성과 전지구적 탈근대: 루쉰과 나쓰메 소세키 문학의 노마돌로지.” 『영미문화』. 2. 1. 2002.
- 장인성. “자기로서의 아시아, 타자로서의 아시아.” 『신아세아』. 1998년 겨울호.
- 전상인. “미한 옛 유교의 그림자: 아시아적 가치와 동아시아 경제발전.” 『전통과 현대』. 2000년 여름호.
- 전성철. “경제위기와 아시아적 가치.” 『동아일보』. 1998년 4월 24일.
- 전영평.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상.” 『인터넷신문 업코리아』. <http://www.upkorea.com>, 2003. 11. 14.
- 전영평·박경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구상과 전략.” 인문사회연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제1차 연찬회 자료집. 2003. 6. 5.
-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구상과 전략.” 인문사회연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제2차 연찬회 자료집. 2003. 7. 4.
-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동북아 상호이익과 갈등 극복을 위한 방안.” 인문사회연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2003.
- 전제국. “‘아시아적 가치’ 관련 동서논쟁의 재조명.” 『한국과 국제정치』. 15. 1. 1999년 봄/여름.
- 정대화. “동아세아공동시장의 가능성 연구.”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정세근. “동양의 의미: 헤세의 경우.”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정재서. “동아시아 문화: 그 초월적 기의(記意)로서의 가능성.” 『상상』. 5. 2. 1997년 여름.

- _____. “서사와 이데올로기-중국, 그 영원한 제국을 위한 변주.” 정문길 외 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5.
- 정호영. “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변화: 역사적, 이론적 접근.” 2001년 제2학기 고려대학교 사회학 콜로키엄 발표논문. 2001.
- _____. “세계화-정보화, 민족 정체성, 그리고 문화 및 문화 콘텐츠 정책: 캐나다의 사례.” 『문화정책논총』. 13. 2001.
- _____. 『민족 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01.
- 조명래. “동아시아의 초국경적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공간과 사회』. 15. 2001.
- 조병한. “1990년대 동아시아 담론의 개관.” 정재서 편저. 『동아시아연구: 글쓰기에서 담론까지』. 서울: 살림, 1999.
- 조성원. “동아시아 경제와 유교.”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1. 1998.
- 조순경. “민주적 시장경제’와 유교적 가부장제.” 『경제와 사회』. 1998. 여름호.
- 조혜인. “아시아적 가치와 자본주의: 조율적 분화와 선진성.” 『철학연구』. 1999. 봄.
- 조희연.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경제와 사회』. 36. 1997 겨울.
- 진형준. “같은 것과 다른 것: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최원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최석봉. “동아시아 모델과 세계자본주의.”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최원식. “동북아시아 속의 한국.” 『동북아시아학연대 국제회의 발제문』. 인천, 2001.
- _____. “탈냉전시대와 동아시아적 시각의 모색.” 『창작과 비평』. 1993 봄.
- _____. “한국발 또는 동아시아발 대안, 한국과 동아시아.” 정문길 외 엮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0.
- 최 협. “한국사회·공동체·공동체 이념.” 『한국사회학』. 20.2. 1986.
- 카라파니 코오진(柄谷行人). “일본정신분석.” 『창작과 비평』. 1998 가을호.
- 황신니엔. “동아시아 현대화, 성찰과 출로.” 『진보평론』. 13. 2003.
- 포플린, 데니스. “공동체의 개념.” 신용하 편. 『공동체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 한경구. “동아시아적인 것을 찾아서.” 『문학과 사회』. 9. 4. 1996년 겨울.
- 한기형. “동아시아 담론과 민족주의: 신채호를 중심으로.” 네이버지식검색 논문.
- 한영환. “유교문화와 동아시아의 발전체제.” 『중앙행정논문』. 13. 2. 1999.
- 한형근.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관한 연구: 합리적 선택 조건을 통한 검토.”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유교민주주의는 가능한가.” 함재봉.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통과현대, 2000.
- 홍선이. 「통일 이후 구동독과 구서독 지역의 직업계속교육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네이버지식검색논문.
- 후쿠야마, 프랜시스. “위기 이후 아시아적 가치 사라진다.” 『신동아』. 1998.

孫家, 亞洲論述與我們的兩難之境, <http://www.csdn.net.cn/page/china/wencui/zuanlan/0711adca03.htm>, 1/4-4/4.

- Alavi, Hamza.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Pakistan and Bangladesh.” *New Left Review*. 74 July-August. 1974.
- Banks, J. A. G., A. J. Raban & A. G. Watts. “The single European Market and it’s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Services,” *CRAC Occasional Paper*. 1994.
- Bell, Daniel. “Democracy in Confucian Societies: The Challenge of Justification.” Daniel Bell et al. *Towards Illiberal Democracy in Pacific Asia*. Oxford: St. Martin’s Press, 1995.
- Cummings, B.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F. Deyo, ed. *The Political Economy of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7.
- Dirlik, Arif. “Confucius in the Borderlands.” *Boundary*. 2. November 1995.

- Frank, Andre G. "The World Economic System in Asia before European Hegemony." *Historian*. 56. 2. 1994.
- Funabashi, Yoich. "The Asianization of Asia." *Foreign Affairs*. 72. 5. September/October 1993.
- Gamble, Andrew and Anthony Payne. "Conclusion: The New Regionalism." Andrew Gamble and Anthony Payne, eds., *Regionalism and World Order*. London: Macmillan, 1996.
- Hay, Colin and David Marsh. "Introduction: Demystifying Globalization." Colin Hay and David Marsh, eds., *Demystifying Globalization*. Polis, UK: University of Birmingham, 2000.
- Hood, Steven J. "The Myth of Asian-Style Democracy." *Asian Survey*. 38. 9. 1998.
- Ikeda, Satoshi. "The History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vs. the History of East-Southeast Asia." *Review*. 1. Winter 1996.
- Inoue, Tatsuo. "Liberal Democracy and Asian Orientalism." Joanne R. Bauer and Daniel Bell, eds.,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Jakaria, Fareed.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73. 2. 1994.
- Kim, Dae Jung. "Is Culture Destiny? - The Myth of Asia's Anti-Democratic Values." *Foreign Affairs*. 73. 6. 1994.
- Kim, Yung-Myung. "'Asian Style Democracy': A Critique from East Asia." *Asian Survey*. 37. 12. December. 1997.
- Krugman, Paul.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 6. 1994.
- Mahbubani, Kishore. "The Pacific Way." *Foreign Affairs*. 74. 1. Jan./Feb.. 1995.
- Moody Jr., Peter R. "Asian Valu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0. 1. Summer 1996.
- Neher, Clark D. "Asian Style Democracy." *Asian Survey*. 34. 11.

- November. 1994.
- OECD. "Evaluation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Higher Education." Teichler, Ulrich & Friechelm Maiworm. *The ERASMUS Experience*.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1997.
- Pye, Lucian W. "The Asian Values Ballyhoo." *Foreign Affairs*. 77. 6. 1998.
- Ruggie, John Gerard.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 1. Winter, 1993.
- Wada Haruki. "The Common House of Northeast Asia and the Problem of Democracy." 『아세아연구』. 통권 100호 기념특집호. 1998년 12월.
- Weinberger, Lisa A. "Commonly Held Theori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1998.
- Yamazaki, Masakazu. "Asia, a Civilization in the Making." *Foreign Affairs*. 75. July/August. 1996.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흙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